

2017년 경제금융전망과 대부업권 발전방향

2017. 1. 12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약력

- 고려대 경제학 학사 석사
-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박사
-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前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차례

- 트럼프시대 개막과 통상 환율전쟁
- 2017년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 대부업권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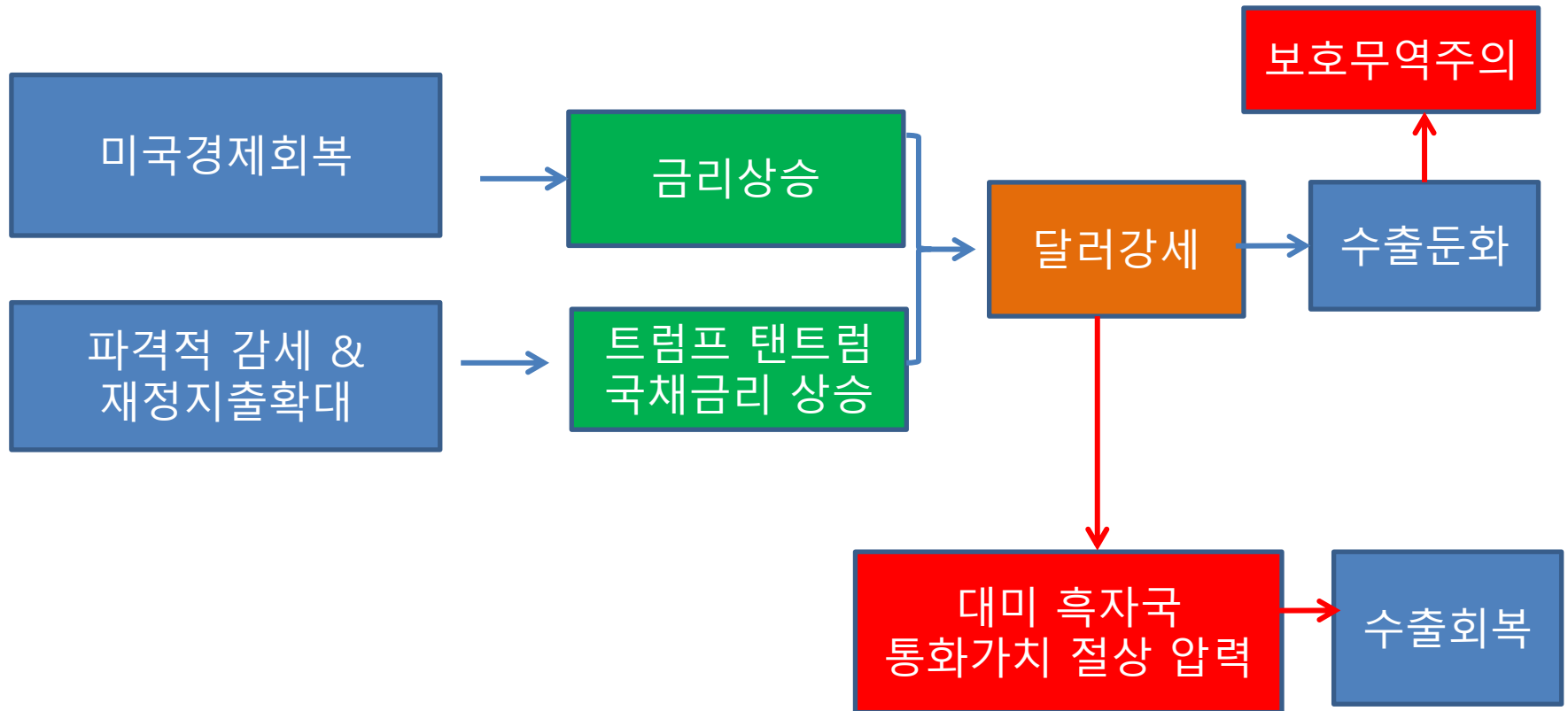
<참고> 브렉셋국민투표통과 트럼프당선의
세계사적 의미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 **신보호무역주의: 미국 FTA 재검토, TPP 폐지, 주요교역대상국 고율관세 부과**
- **환율: 주요교역대상국 환율 절상 압력 강화**
- **감세: 법인세(35%→15%) 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
- **재정지출: 5년 동안 1조 달러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신뉴딜 정책 추진**
- **재정적자 축소: 예산 매년 1%씩 축소 10년간 1조 달러 절감(오바마케어 폐지)**
- **신고립주의: 미국 재정부담 해외 병력주둔 축소, 방위비 수익자부담원칙**
- **금융: 도드 프랭크법 폐지 금융산업 활성화**
- **에너지: 셰일가스 생산확대 에너지 자립, 유가 하락 전망**
- **이민정책: 불법이민 추방, 미국인 고용증진**

**철저한
일자리창출 중심
실용적 경제정책**

미국 통화 환율정책 환경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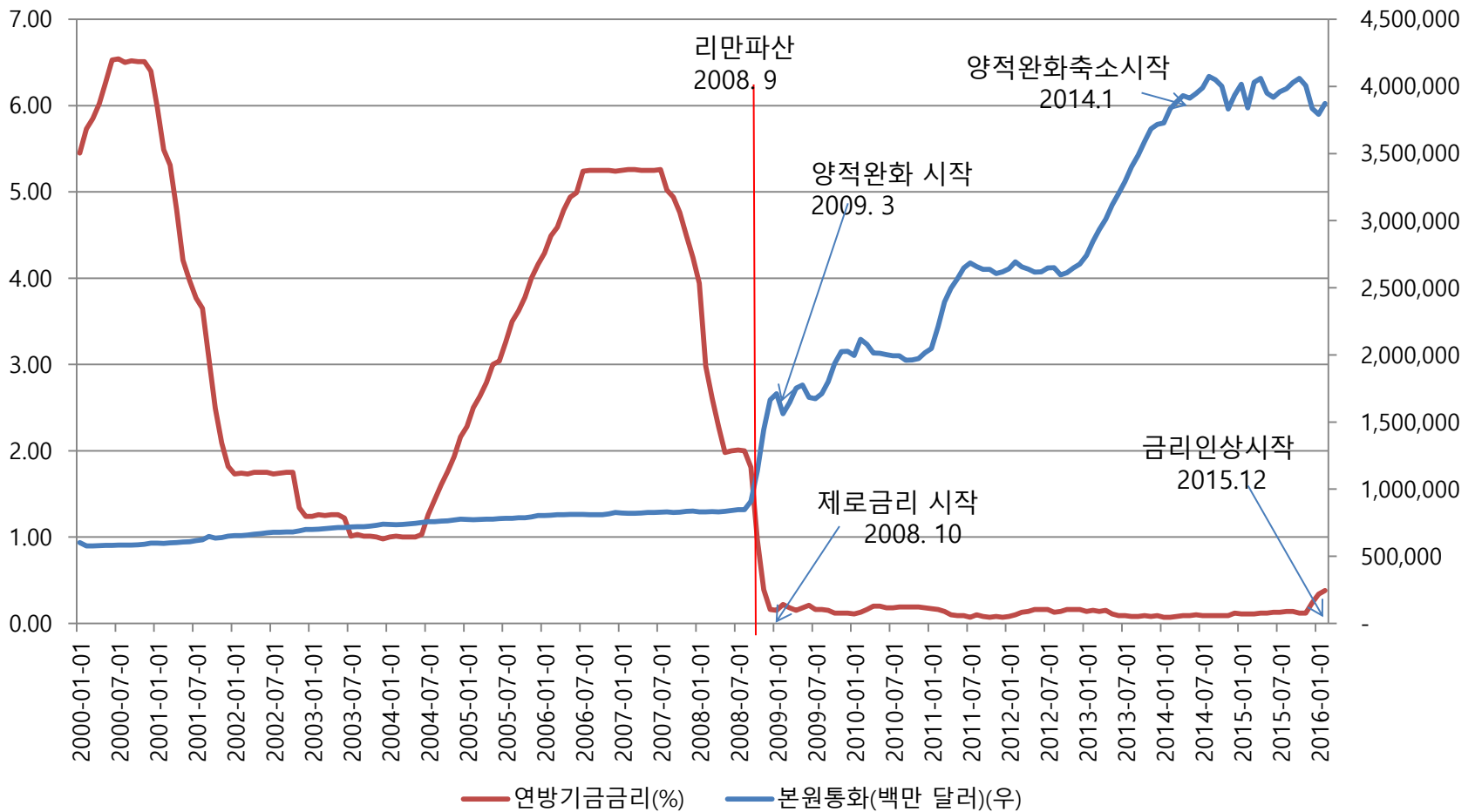


미국 통화정책과 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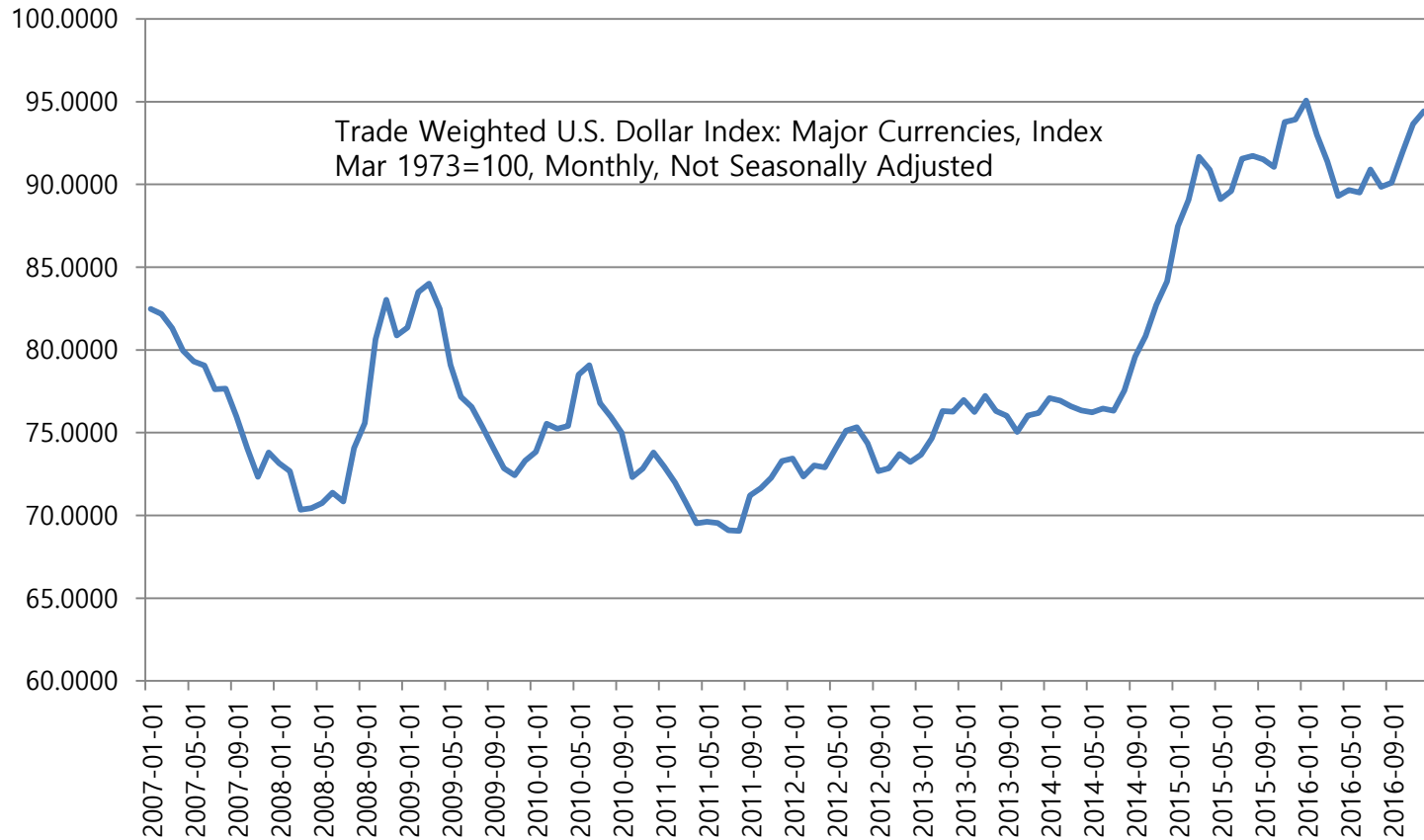
미국 양적 완화 통화정책

정책	기간	규모 (억 달러)	대상증권
QE 1	2008.12~2010.3	17,500	1조4500억 달러 주택저당채권, 3000억 달러 국채
QE 2	2010.11~2011.6	6,000	6000억 달러 재정증권
OT 1	2011.9	4,000	단기국채 매각 장기국채 매입
OT 2	2012.6	2,670	단기국채 매각 장기국채 매입
QE 3	2012.9~2014.10	8,400	매월 400억 달러 주택저당채권
QE 3(추가)	2013.1~2014.10	7,900	매월 450억 달러 장기 재정증권
QE 축소	2014.1~2014.10		

미국 금리와 본원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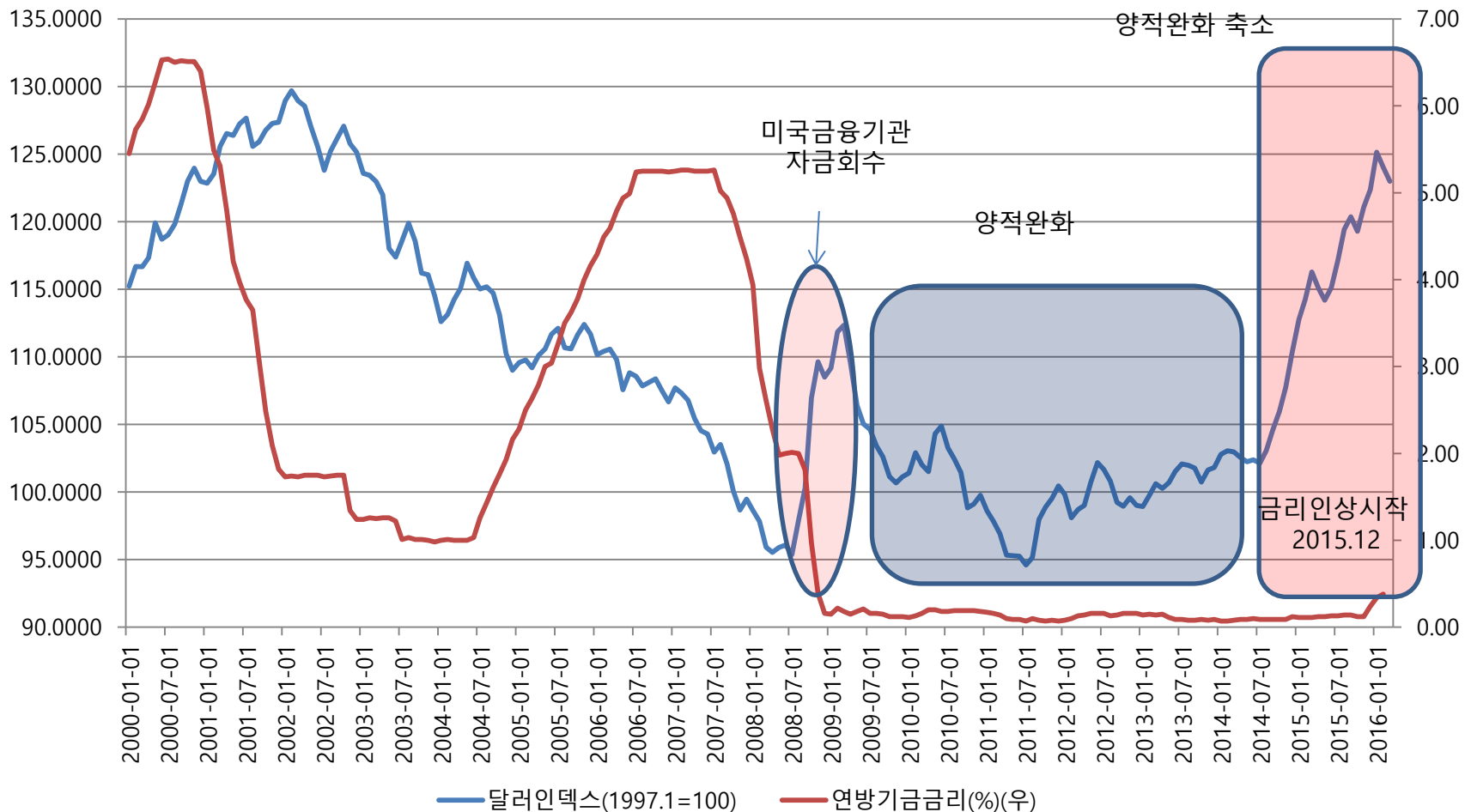


달러환율동향



2016년 추가 금리인상 지연으로 달러화 소폭 약세 시현 후
금리인상 기대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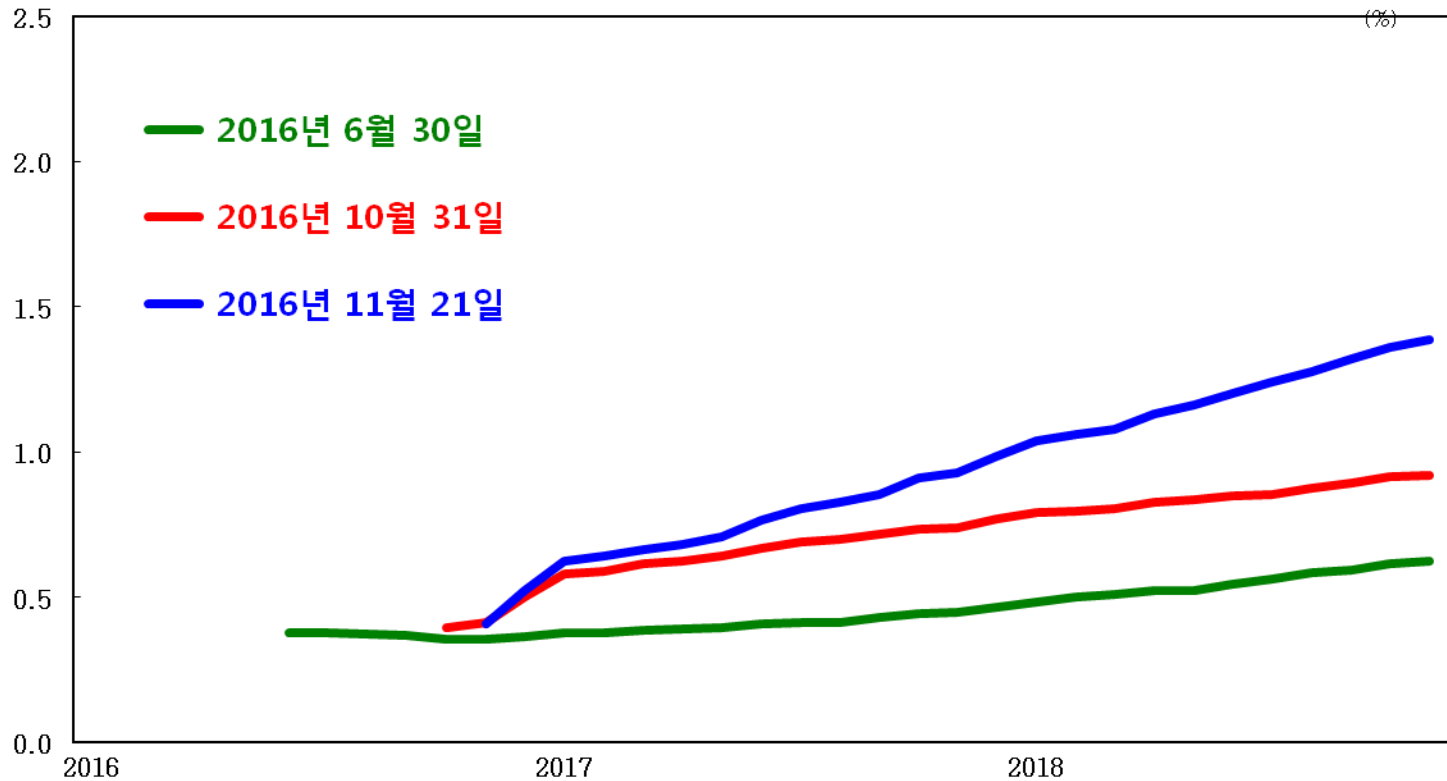
미국 통화정책과 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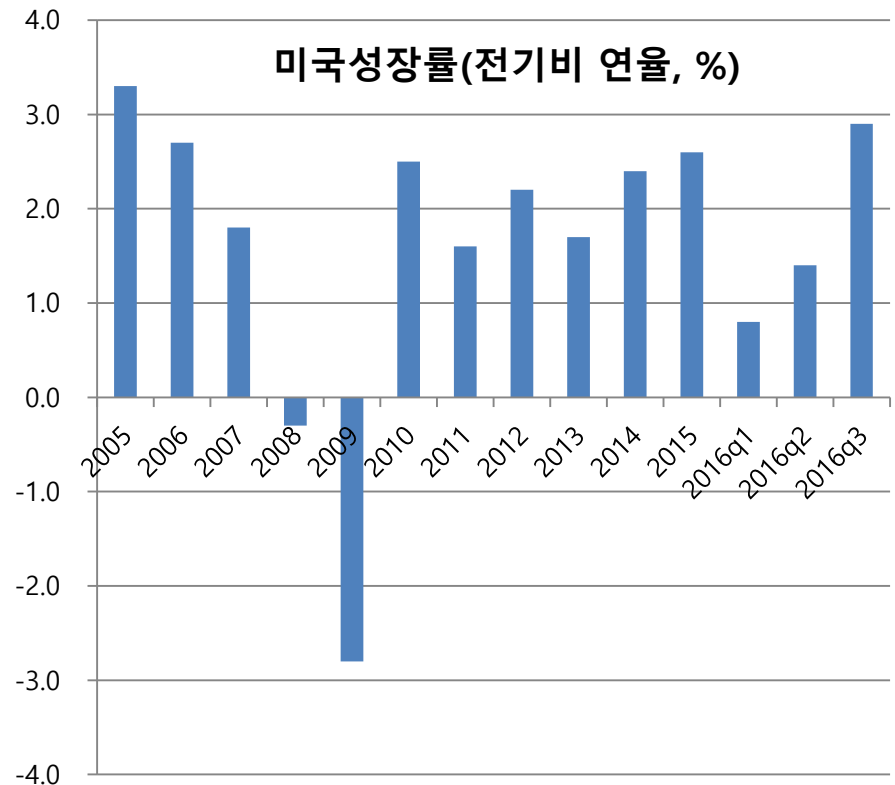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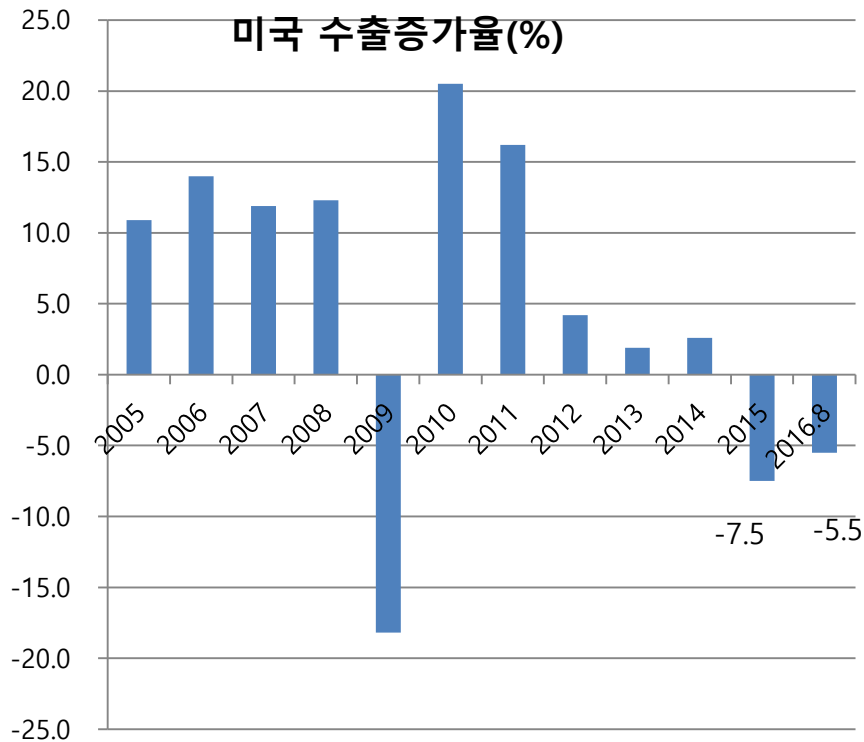
□ 트럼프 승리: 高금리시대로의 전환가능성

▶ 트럼프가 제시한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 등 경기 부양정책은 장기금리 급등과 물가상승 등을 초래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채권시장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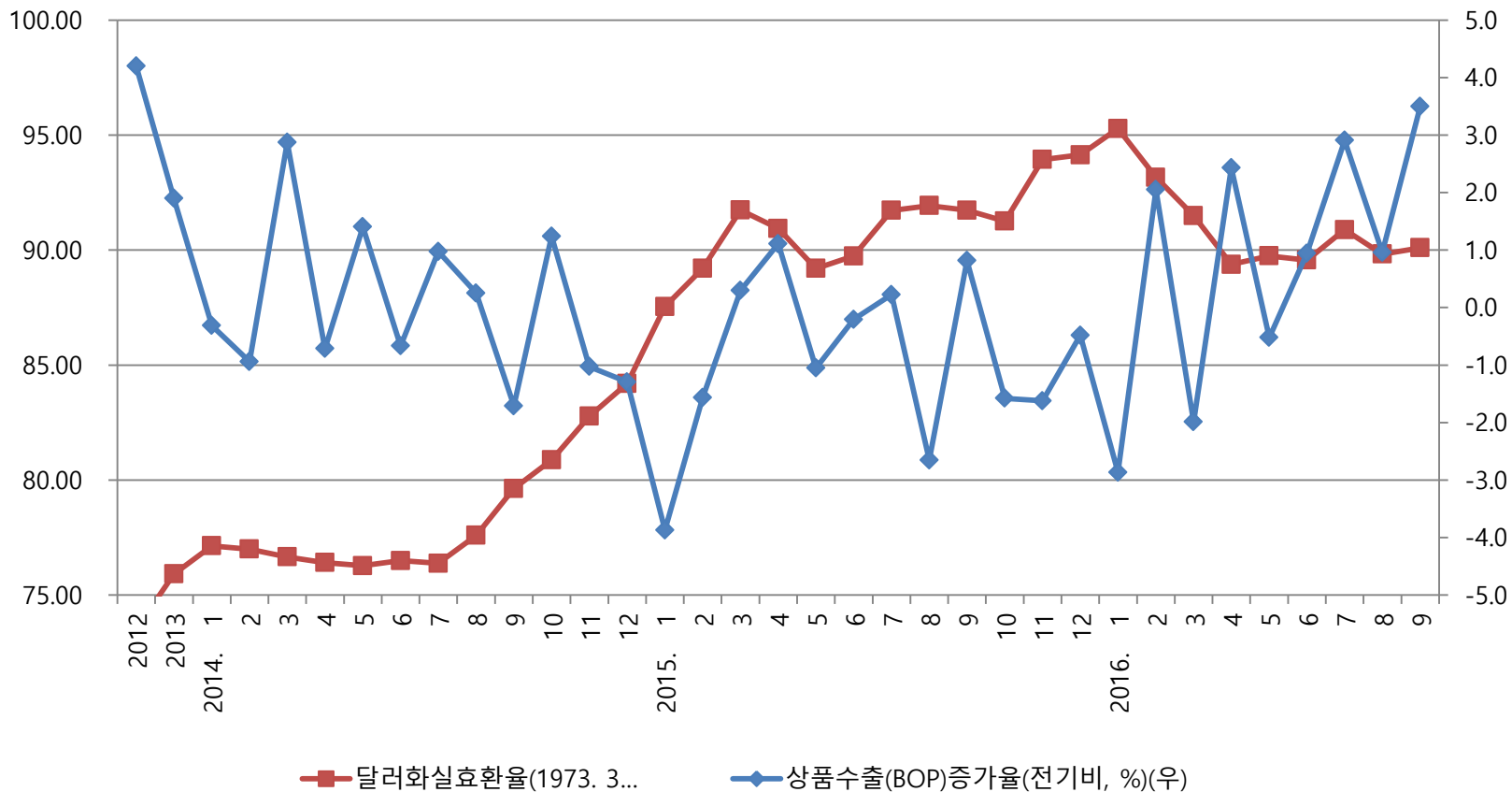


미국수출증가율과 성장률



2014년 중반 이후 시작된 달러 강세: 수출과 성장에 악영향
=> 미국정부와 연준의 주요 관심 이슈

미국 달러 실효환율과 수출



미국경제는 완연하게 회복돼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나 다른 국가는 회복부진으로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 대미 흑자국에 대해 통화가치 절상 압력 예상

미국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2.1	1.6	1.8	2.1
GDP갭률(%)	-0.4	-0.5	0.0	0.3
소비자물가상승률(%)	0.1	1.2	2.3	2.6
수출증가율(%)	-0.6	0.4	6.7	7.6
실업률(%)	5.3	4.9	4.8	4.7
구조적재정수지/GDP비율(%)	-3.3	-3.9	-3.7	-3.4
경상수지/GDP비율(%)	-2.6	-2.5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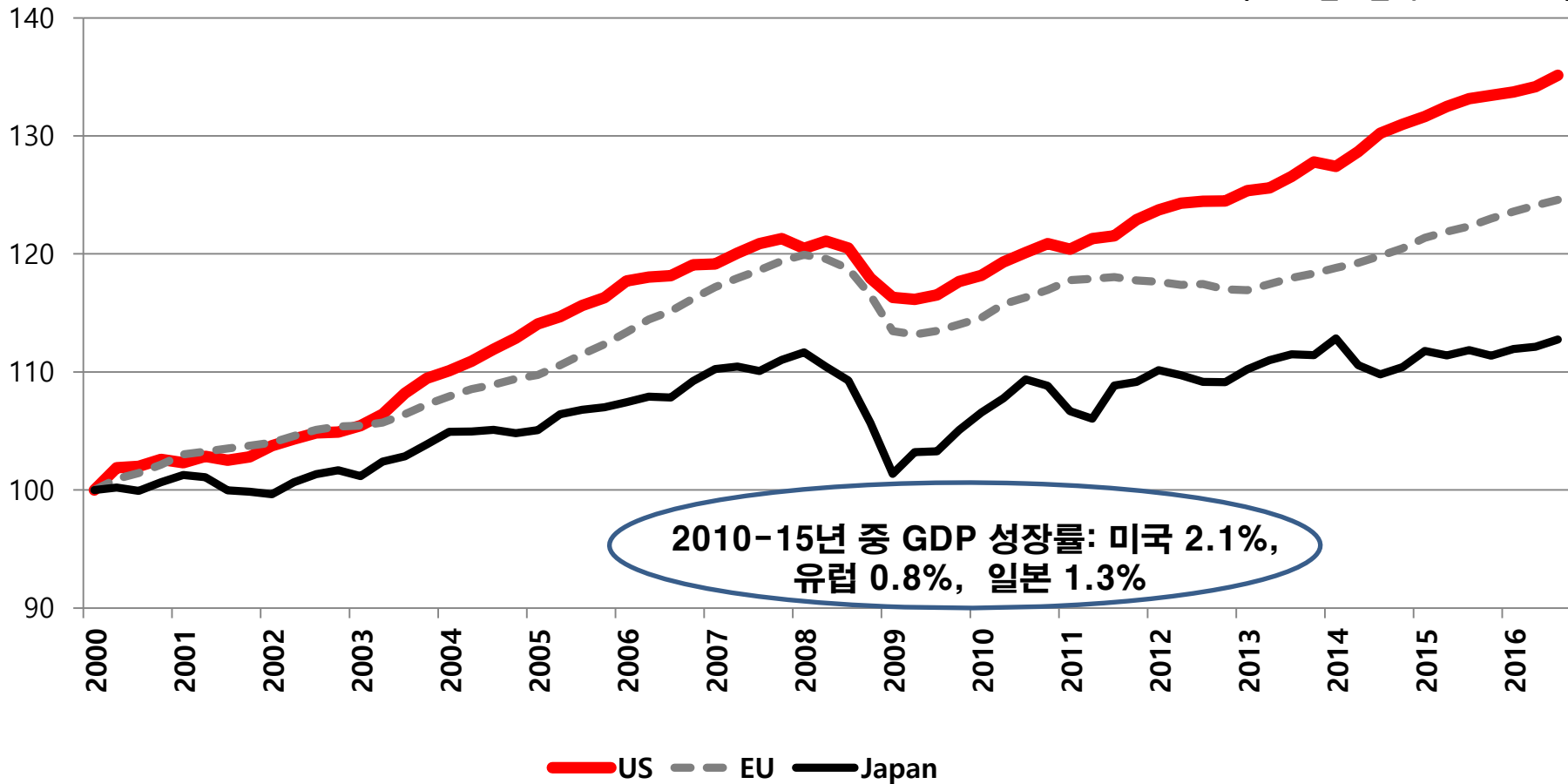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2016. 10

주요 선진국의 GDP 회복 수준

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된 반면, 유럽과 일본은 GDP 수준이 아직도 8년 전 위기 직전 수준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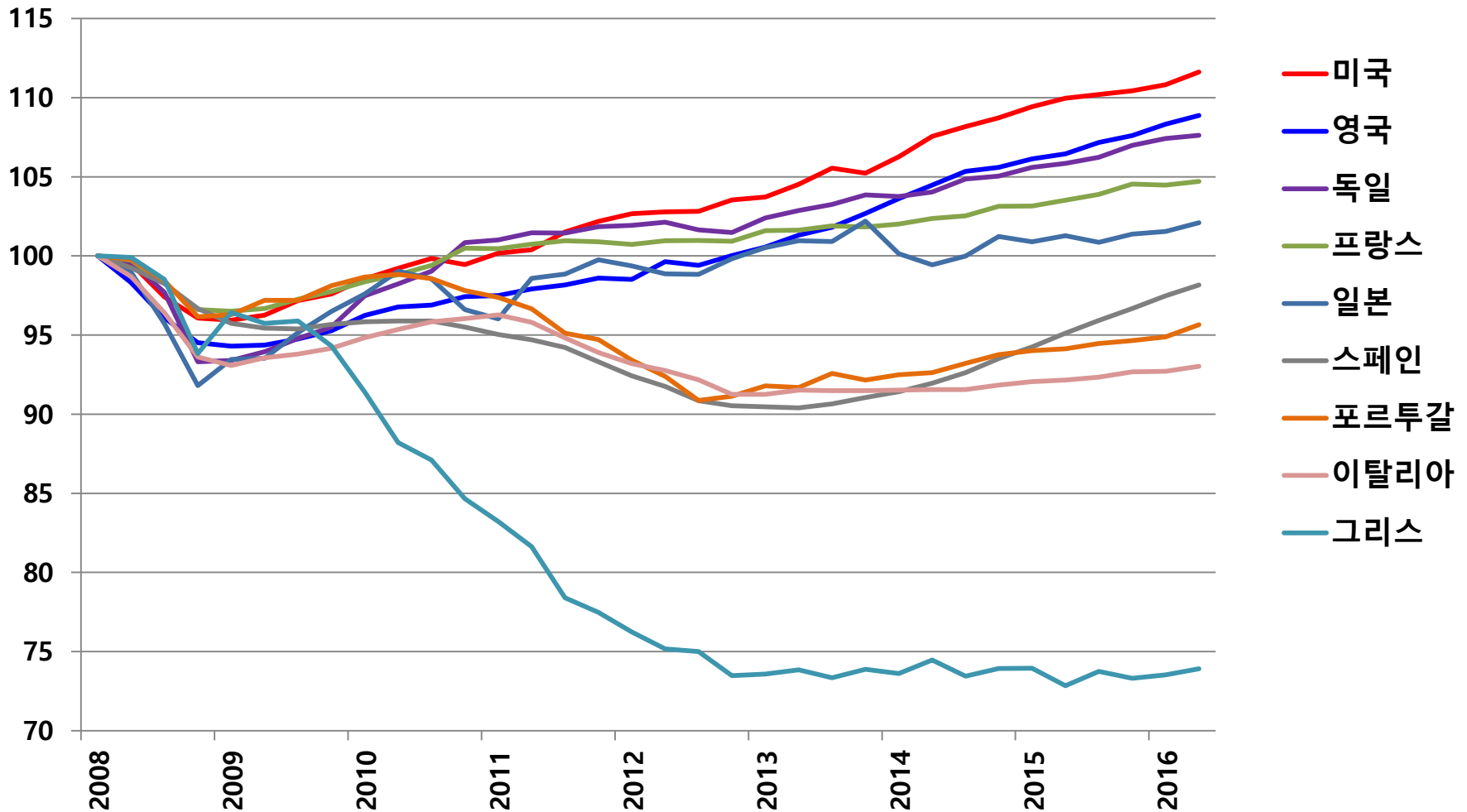
GDP 회복 수준

(2000년 1분기 GDP = 100)



GDP 수준

(2008년 1분기=100)



주요 선진국의 물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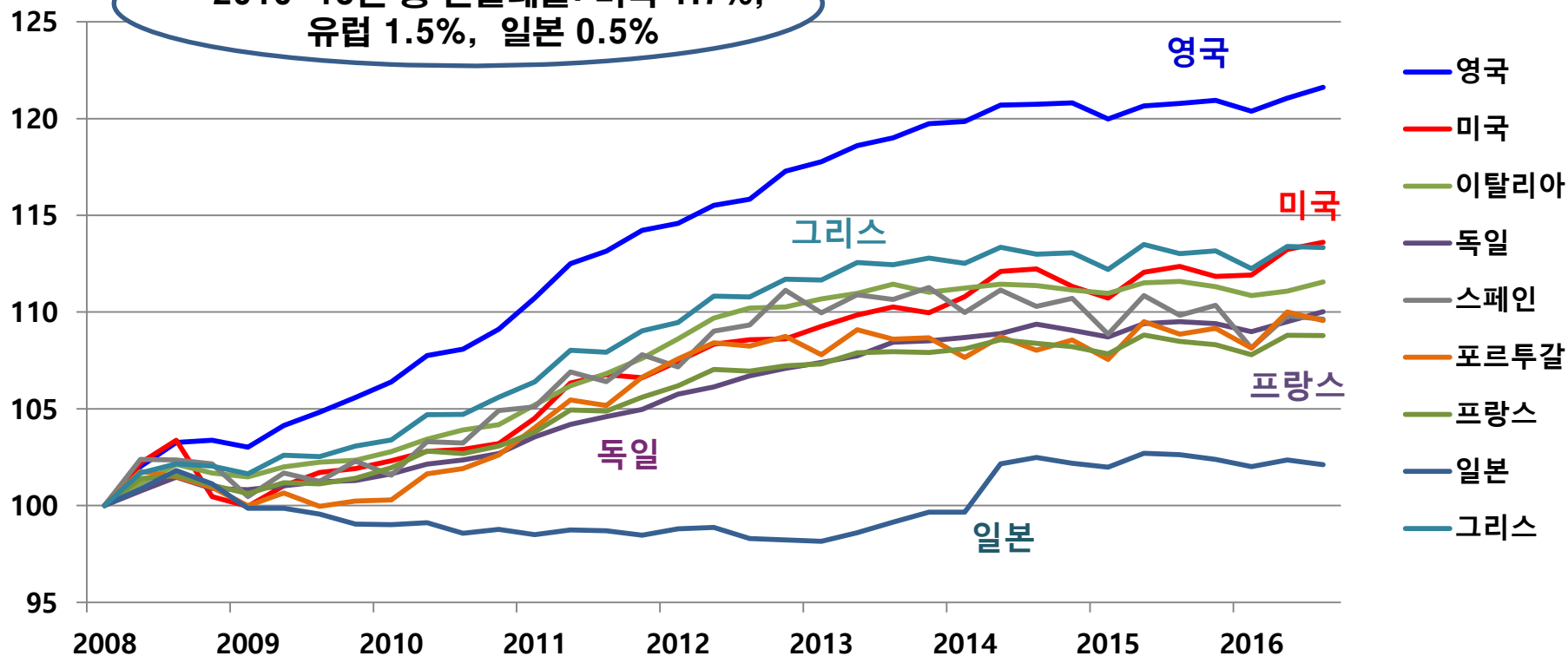


글로벌 위기 이후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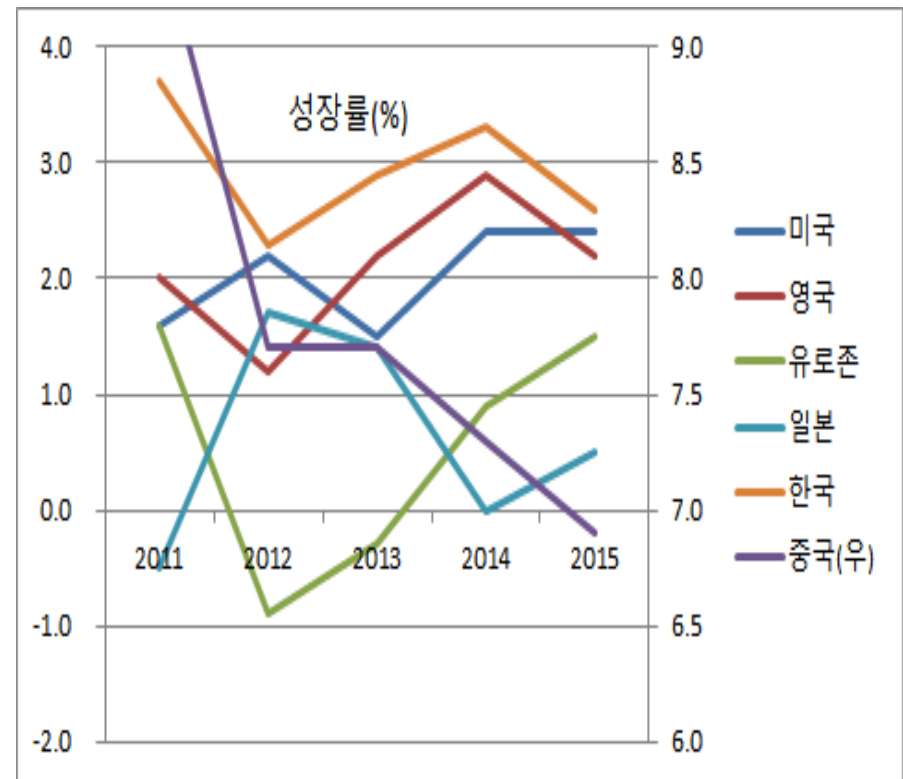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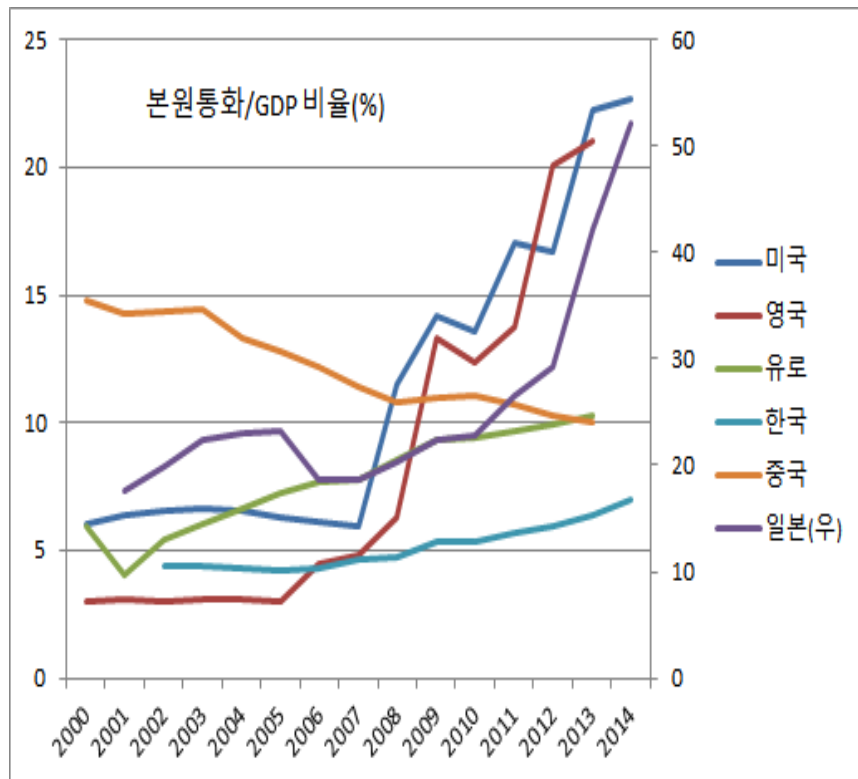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수준

2010-15년 중 인플레이션: 미국 1.7%,
유럽 1.5%, 일본 0.5%

(2008년 1분기=100)



양적 완화 통화정책 효과



양적 완화정책 일찍 추진한 미국 영국이 세계경제 회복 주도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절상 압력 강화 신환율전쟁시대

- 미국: 금리 점진적 인상, 달러 강세
 - 새 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발효
 - 수출둔화 우려로 내년 하반기 경 금리 추가인상 조절, 달러강세 정도 약화 가능성
- 중국: 위안화 절하 정책
- 일본: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유지
- 유로존: 마이너스 금리폭과 양적 완화 유지

미국의 새 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BHC 법안) 파장

새로운 환율전쟁 시작

- 2015년 미국 상하 양원 통과, 2016년 부터 발효된 새 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일명 Bennet-Hatch_Caper: BHC) 법안
 -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주요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을 조사 의회에 보고
 - 환율개입 의심국가 통상 투자 제재
 - 1989년 발효된 슈퍼 301조의 환율관련 법안으로 불황형 흑자에도 불구하고 당시와 같은 보복 우려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

- 3 기준

-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GDP 비율 3% 이상
- 12개월 동안 일방적인 순외환시장 개입 규모/GDP 비율 2% 이상

- 2개 기준 저촉: 관찰/감시대상국 (monitoring list)

- 3개 기준 저촉: 제재대상국

2016년 4월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1차 환율정책 보고서 5개국 감시대상국 지정

	Bilateral goods trade balance (2015, Bil. \$) (1)	Current Account		Intervention	
		Percent of GDP (2015) (2)	Memo : 3 year change percent of GDP (2a)	Net FX purchases, percent of GDP (3)	Persistent net purchases of foreign currency ¹ (3a)
China	365.7	3.1%	0.5%	-3.9%*	N
Germany	74.2	8.5%	1.5%	-	N
Japan	68.6	3.3%	2.3%	0.0%	N
Mexico	58.4	-2.8%	-1.4%	-1.8%	N
Korea	28.3	7.7%	3.5%	0.2%*	N
Italy	27.8	2.2%	2.6%	-	N
India	23.2	-1.1%	3.8%	1.8%	N
France	17.6	-0.2%	1.0%	-	N
Canada	14.9	-3.3%	0.3%	0.0%	N
Taiwan	14.9	14.6%	5.0%	2.4%*	Y
UK	1.5	-5.2%	-1.9%	0.0%	N
Brazil	(4.3)	-3.3%	-0.3%	0.1%	N
Memo: Euro Area	130.2	3.2%	1.9%	0.0%	N

자료: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 2016. 4. 29

2016년 10월 2차 환율정책 보고서

China, Japan, Korea, Taiwan, Germany, Switzerland 6개국 감시대상국 지정

	Bilateral Goods Deficit (USD Bil., Trailing 4Q) (1)	Current Account Balance		Balance (USD , Billion; Trailing 4Q) (2c)	FX Intervention		
		(% of GDP, Trailing 4Q) (2a)	3 Year Change in Balance (% of GDP) (2b)		Net FX Purchases (% of GDP) (3a)	Net FX Purchases (\$ Bil.) (3b)	Persistent Net FX Purchases? (3c)
China	356.1	2.4	0.0	260.9	-5.1%	-566	No
Germany	71.1	9.1	2.3	312.3	-	-	No
Japan	67.6	3.7	2.6	158.3	0.0%	0	No
Mexico	62.6	-2.9	-0.8	-31.7	-2.2%	-24	No
Korea	30.2	7.9	2.0	107.1	-1.8%	-24	No
Italy	28.3	2.3	1.9	42.5	-	-	No
India	24.0	-0.8	4.2	-16.0	0.3%	5	No
France	18.0	-0.5	0.4	-12.8	-	-	No
Taiwan	13.6	14.8	5.2	75.8	2.5%	13	Yes
Switzerland	12.9	10.0	-1.6	66.2	9.1%	60	Yes
Canada	11.2	-3.4	0.1	-51.1	0.0%	0	No
United Kingdom	-0.3	-5.7	-2.0	-161.2	0.0%	0	No
Memo : Euro Area	130.5	3.2	1.3	380.4	0.0%	0	No

자료: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 2016. 10. 14

감시대상국 지정 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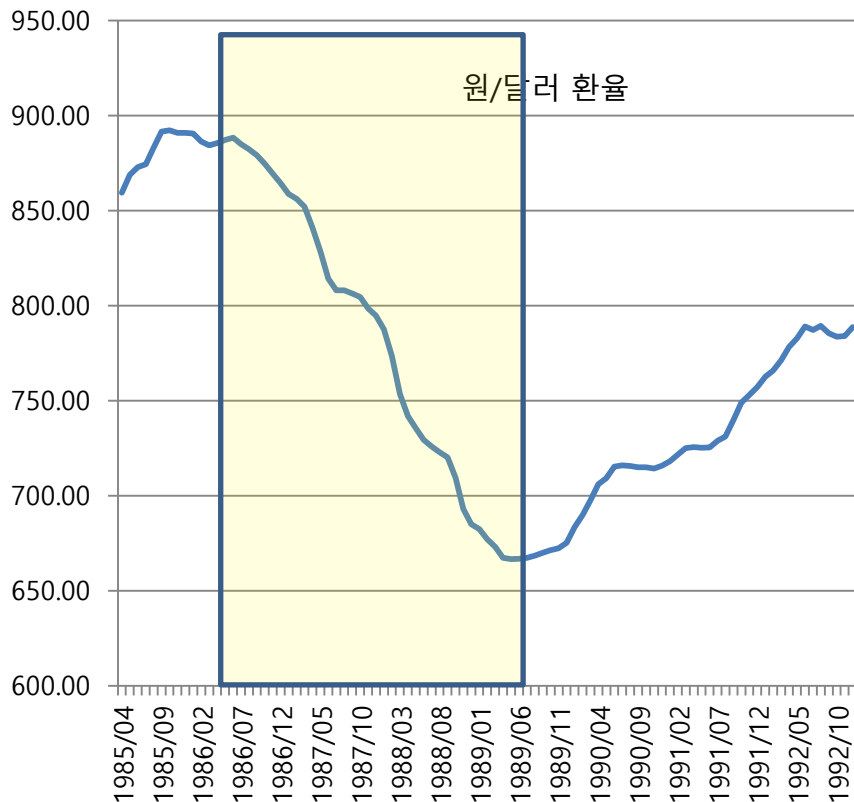
- **일본**: 4월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의 시장 예상 뒤엎고 금리추가인하 양적 완화 확대 하지 않음
 - 그 결과 일본경제 회복 부진 불구 **엔화 강세**
- **한국**: 향후 **환율정책 운신 폭 축소 불가피**
 - 수출 작년 1월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증가를 불구 불황형 흑자로 환율절하폭 제한적일 전망

신환율전쟁 전망

- 대미 무역흑자 3561억 달러 중국, 711억 달러 독일, 676억 달러 일본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 압력 증대 전망
- 유로존 강대국 독일은 유로화 사용으로 절상시 남유럽 타격
- 미국의 아시아맹방 일본은 어느 정도 용인 불가피
- 중국은 미국이 좌지우지 하기 힘들 정도의 큰 국가, 중국산 가격상승은 미국국민들의 생계비 증가요인
-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희생양 가능성

80년대 슈퍼 301조의 파장의 경험

원화강세=> 처음 달성한 경상수지 적자 전환



	경상수지(백만 달러)
1980	-6,845.00
1981	-6,421.90
1982	-5,542.10
1983	-3,505.60
1984	-1,755.80
1985	-2,079.30
1986	2,762.20
1987	8,827.70
1988	13,055.30
1989	4,154.50
1990	-2,403.60
1991	-7,604.60
1992	-2,431.70
1993	2,026.00
1994	-4,463.70
1995	-9,751.50
1996	-23,830.90
1997	-10,285.30
1998	40,056.90

능동적 대처 필요

- 국제금융외교 강화
 -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발생하고 있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 이 해제고
 - 2015년 상품수지는 258억 달러 대미흑자지만 서비스수지는 144억 달러 적자로 경상수지는 114억 달러 흑자에 불과
 - 2013년 이후 한국기업의 미국투자가 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상회, 4만 5천명의 일자리 창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대미국직접투자(백만 달러)	12,969	15,746	19,860	25,260	31,790	39,923	40,130
미국대한국직접투자(백만 달러)	23,930	26,233	28,172	32,202	32,108	33,453	34,564

- 국내 투자 소비 활성화로 불황형 흑자 축소
- 달러 위안 엔을 동시에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현실적 여건 고려해 근본적으로 달러에 페그되어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 적합성 재검토 (중국: 금년부터 바스켓 환율제도 도입)
 - IMF: 환율제도 선택은 주권사항
 - 선택한 후 부당한 외환시장 개입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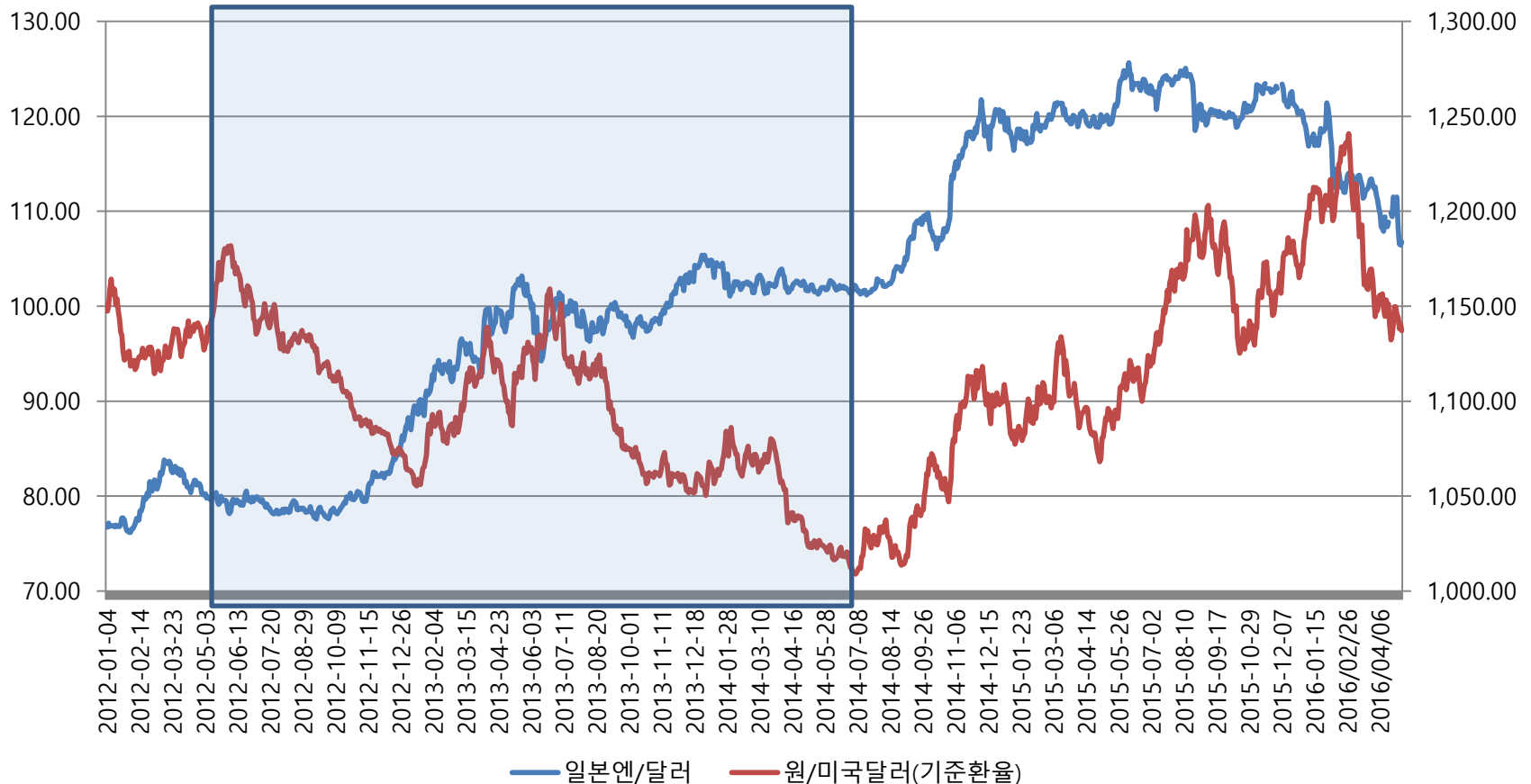
<참고> 미국FTA 재검토, 고율관세 부과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한미 무역 추이(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수출	63,705	72,059	76,202	80,206	88,135	84,951	77,543
상품	49,816	56,208	58,525	62,052	70,285	69,832	61,120
서비스	13,889	15,851	17,677	18,154	17,850	15,119	16,423
수입	67,090	71,391	73,478	70,762	74,134	73,522	71,730
상품	40,403	44,569	43,341	41,512	45,283	44,024	43,189
서비스	26,687	26,822	30,137	29,250	28,851	29,498	28,541
무역수지	-3,385	668	2,725	9,445	14,001	11,429	5,814
상품수지	9,413	11,639	15,184	20,540	25,002	25,808	17,931
서비스수지	-12,798	-10,971	-12,460	-11,096	-11,001	-14,379	-12,118

일본 통화정책과 엔화 환율 동향

원화 엔화 환율동향



2012년 중반~2014년 중반 원 엔 환율 상반된 움직임, 한국수출 직격탄 주 원인
2014년 중반 이후 동조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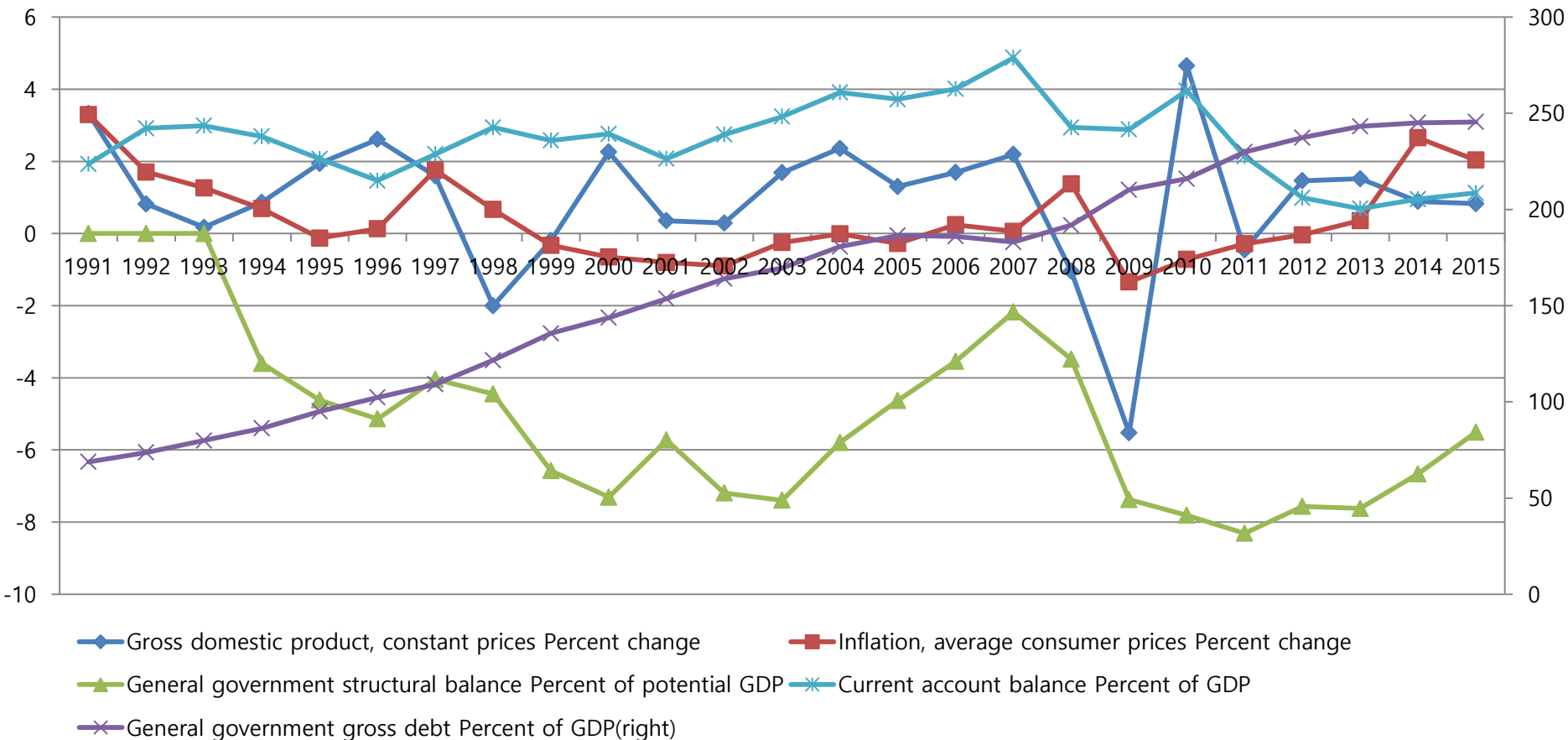
원/엔 환율동향

원/일본엔(100엔)



2012. 6. 4. 1509원 대비 42% 절상. 2015. 6. 8. 에는 885원으로
고점 2012. 6. 4. 1509원 대비 71% 절상, 한국수출에 직격탄

일본: 잃어버린 20년 벗어나려는 아베노믹스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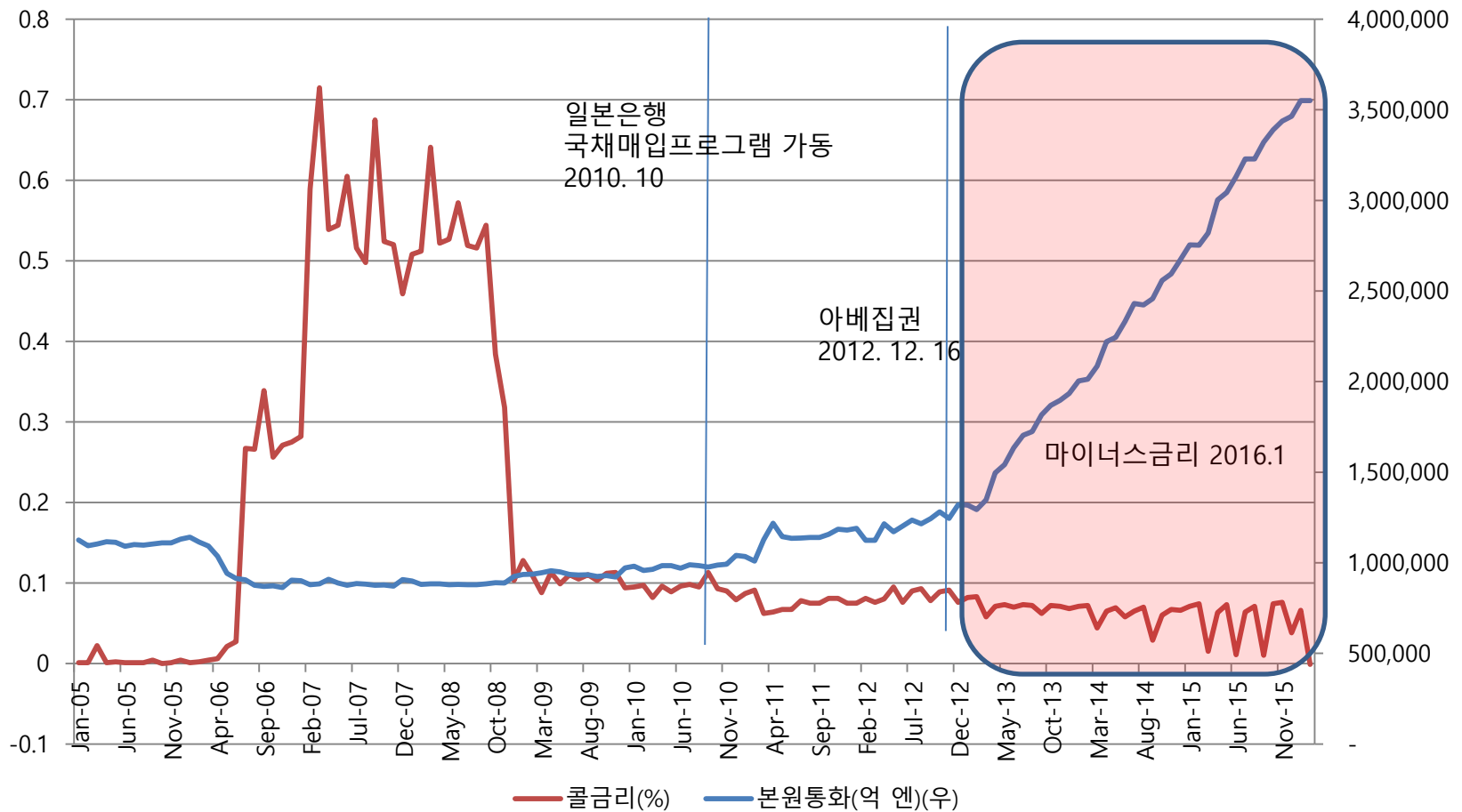


정부부채/GDP 비율 1997년 100%, 2009년 200% 돌파
 1992~2011년 평균 성장률 0.75% 물가상승율 0.1% 잃어버린 20년 2013년까지 지속
 고강도 양적 완화로 일부 회복, 재정문제 등 불확실성 상존

아베노믹스의 기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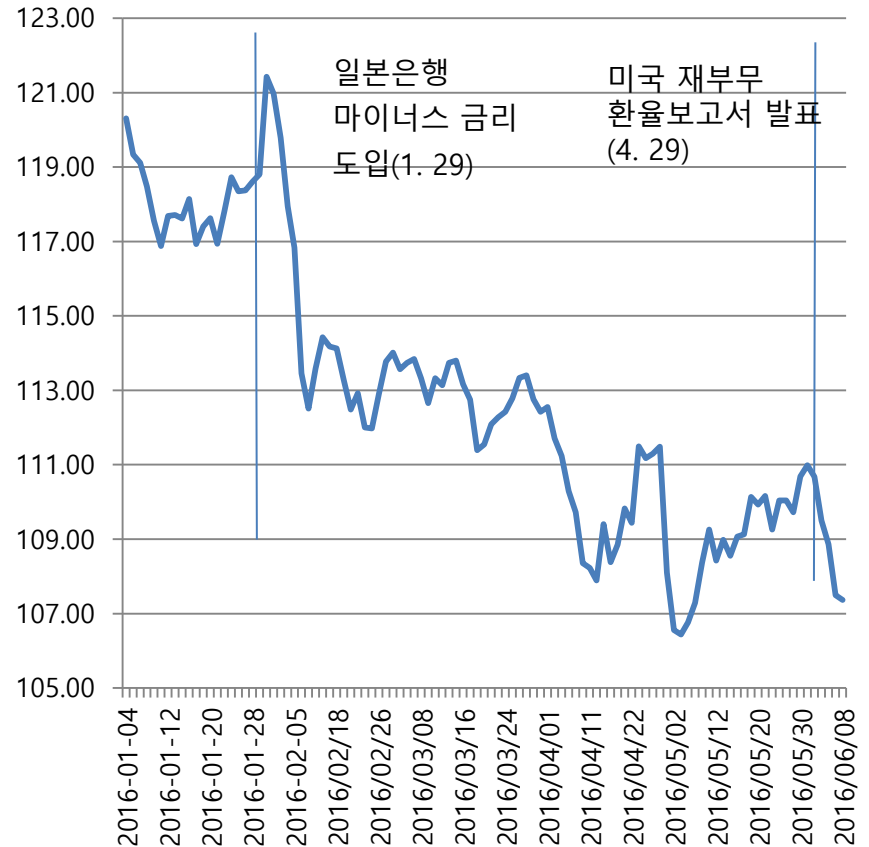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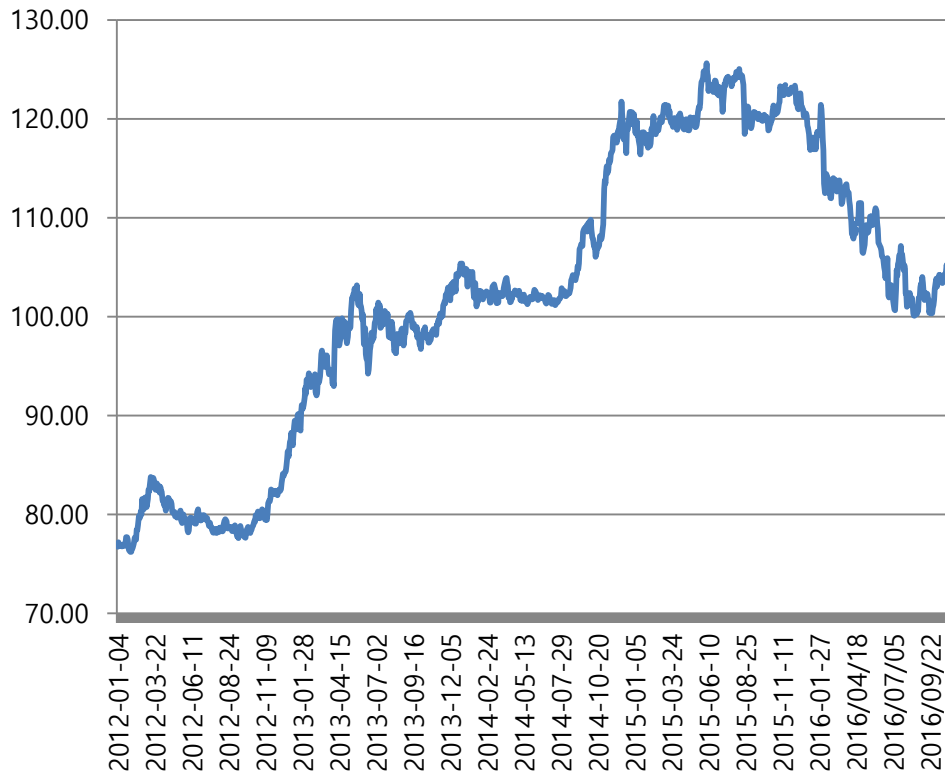
- 양적 완화, 엔화 약세로 수출증가와 기업이익개선
-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해소 없이는 정상적인 성장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소비세인상: 10년 후 국가부채 관리가능 수준 회복 목표
 - 2014년 4월: 5%→ 8%
 - 2015년 10월: 8%→10% (2017년 으로 연기)
- 소비세인상에 따른 과도한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임금인상 유도
 - 법인세 인하: 기업투자촉진, 임금상승촉진, 주택대출
 - 재정지출: 저소득층지원, 주택구입지원, SOC 등 공공사업, 지진피해복구
 - 엔저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임금인상으로 유도

일본의 양적 질적 완화 통화정책(QQE)



엔화 환율동향

일본엔/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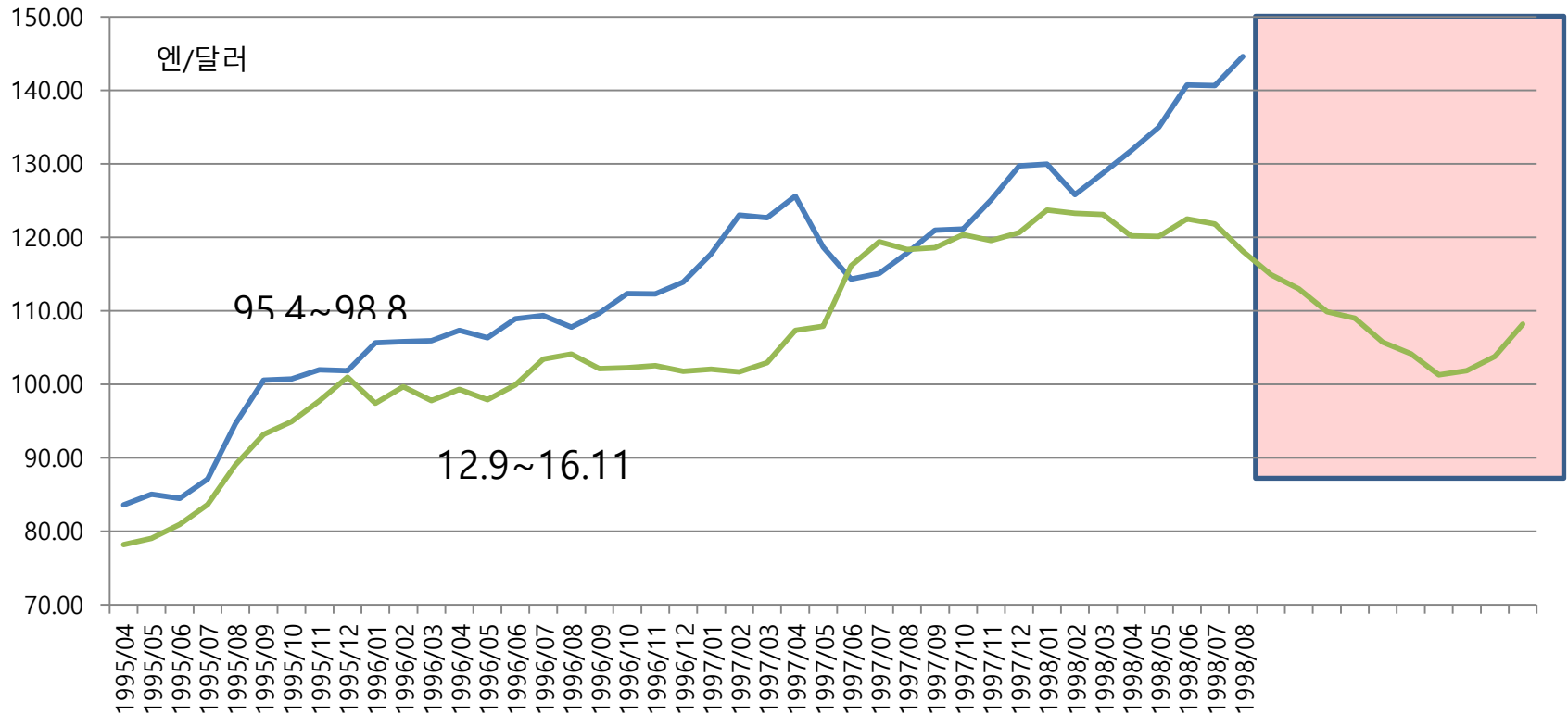
엔/달러 환율도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 직후 117엔 내외에서 121엔대까지 올랐다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 증가, 미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로 106엔 대로 하락 (11.11일, 106.8엔/달러)

엔화 환율전망

- 기대투자수익률 = 기대 주가상승률 또는 채권가격상승률 + 통화가치 기대절상률 전망에 따라 투자와 회수 결정
- **일본은행 추가 금리인하는 없이 양적 완화만 지속**
 - 일본 경제 회복 부진 (2015: 성장률 0.5%, 물가상승률 0.8%) (2016: 0.5% 성장 2017년 0.6% 전망, IMF WEO 2016 10)
 - 상대국의 금리수준: 유럽중앙은행 -0.3 스위스 중앙은행 -0.75
 - 잠재성장수준 달성 가능한 균형실질금리이론(미국 -1.0% 서머스 크루그만 등)
(일본 명목금리 -0.1-물가상승률 0.8=실질금리 -0.9, 추가인하 필요)
 -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후 금융기관수익 악화 문제 대두
-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전후 해 **미국 재무장관의 공격적인 일본 엔화 약세 불용인 발언**과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수요 지속으로 엔고 지속
 - 최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엔저 현상 재현

미국금리인상 이제 시작

98년 처럼 슈퍼달러 초엔저 지속될 것인가



강경한 미국 입장, 성장 회복 더딘 일본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엔저는 예상되지만 98년 같은 슈퍼달러 초엔저 보다는 완만한 엔저 가능성

중국 통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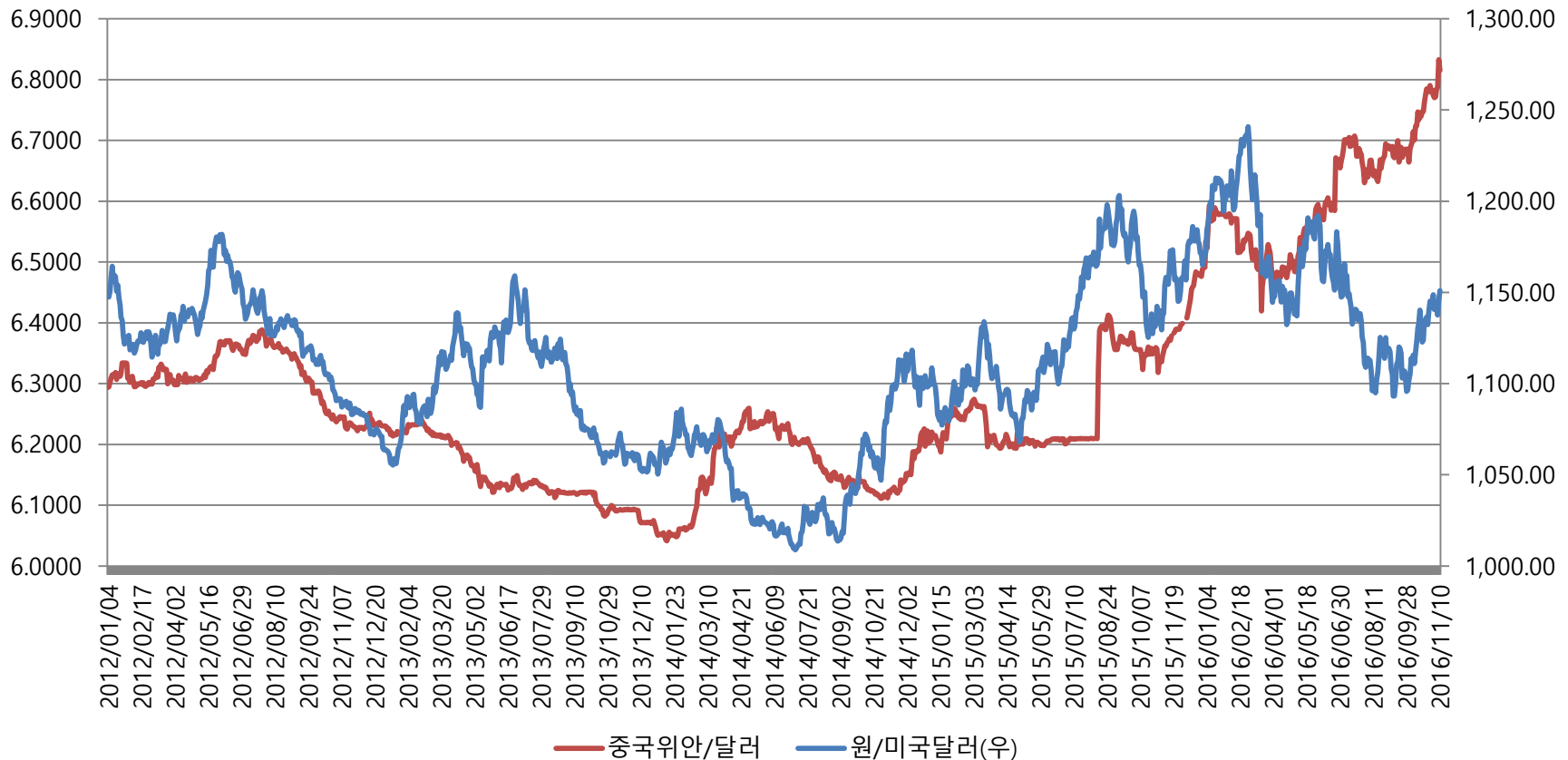
위안화 환율동향

중국위안/달러



2016 12 19 현재 달러당 6.937위안 수준에서 거래.
2015년 8월 이후 수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절하
근래 위안화 가치가 가장 높았던 2014년 1월 3일 6.0505위안에 비해 14.7% 절하

원화 위안화 환율 동향



2014년 중반 이후 원화 위안화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위안화 절하가 원화 절하로 전염될 가능성을 보여왔으나 금년 들어서 부터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강세로 반전

원/위안 환율 동향

원/중국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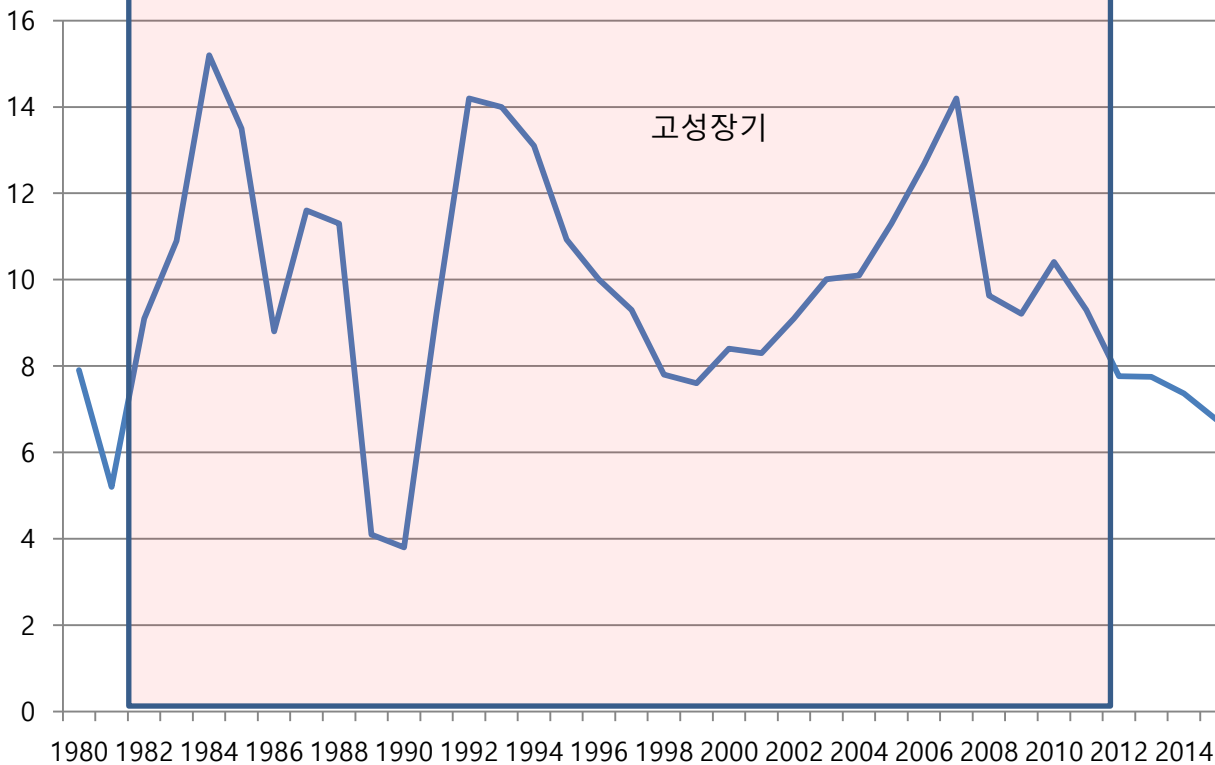


2014년 중반 이후 원화 약세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금년 들어 원화 강세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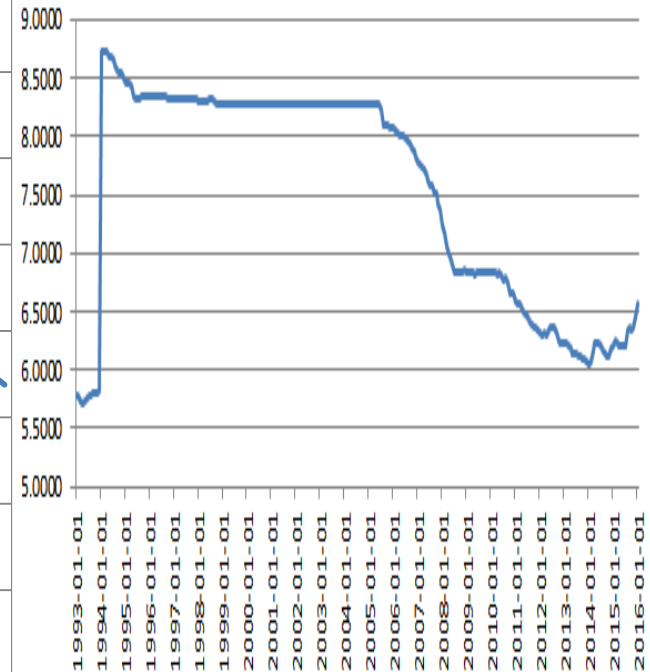
중국의 고성장과 환율

성장률(%)

고성장기



위안/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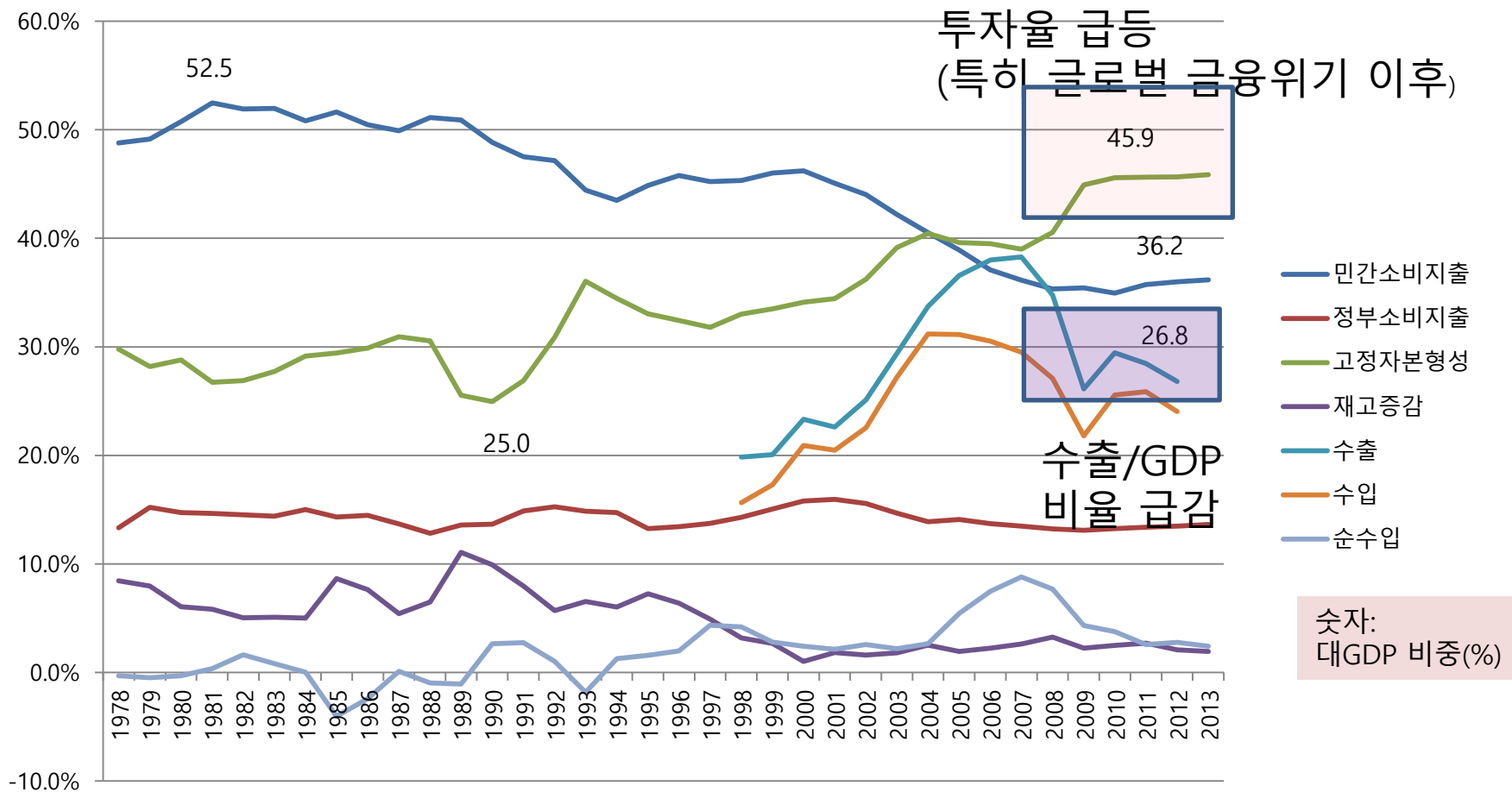


1982~2011: 30년 간 연평균 10.2% 고성장 후
2012년 부터 7%대로 성장률 급속히 둔화

1994년 환율 5.8210위안에서
8.7219위안으로 대폭
평가절하

저소비 고투자 고수출 전략 한계봉착

소비증가 투자조정의 재균형 문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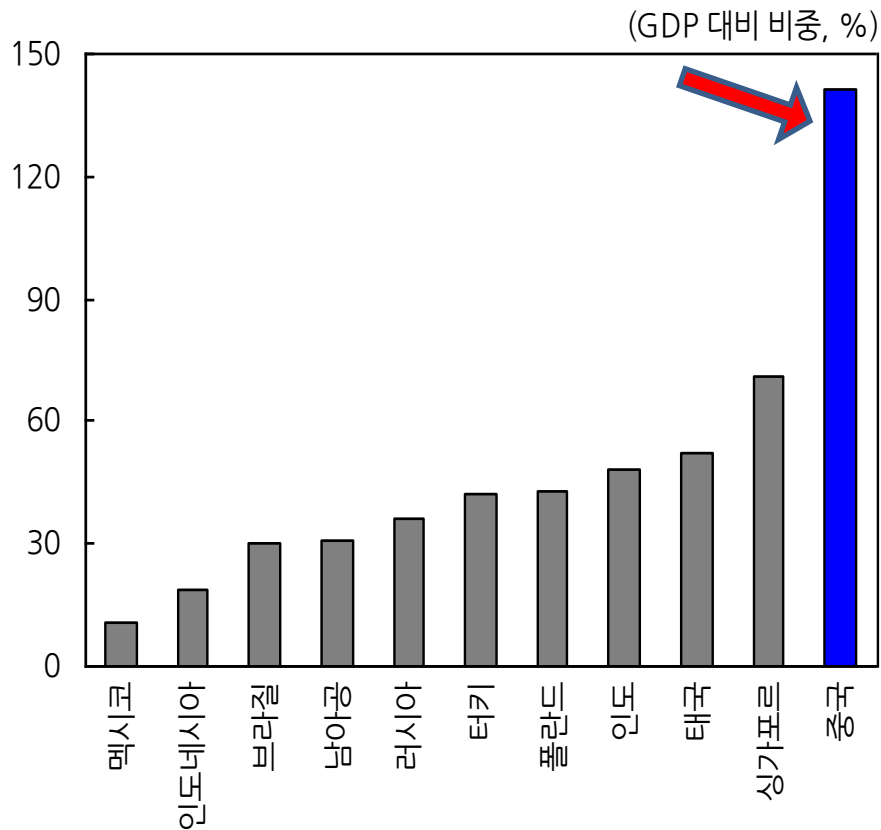
□ 중국: 글로벌 위기 이후 대대적인 내수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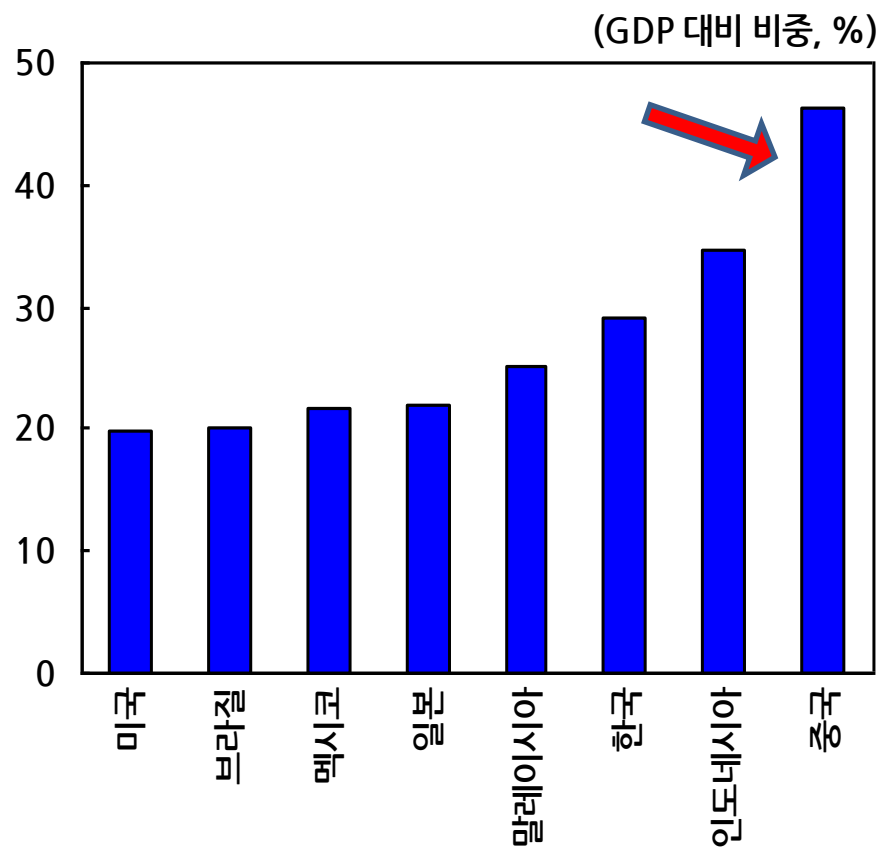
글로벌 위기 이후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 대출 급증** 등 무리한 **경기부양의 후유증(과잉투자)**으로 성장을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외자 대거 차입 과잉투자

기업 부채/GD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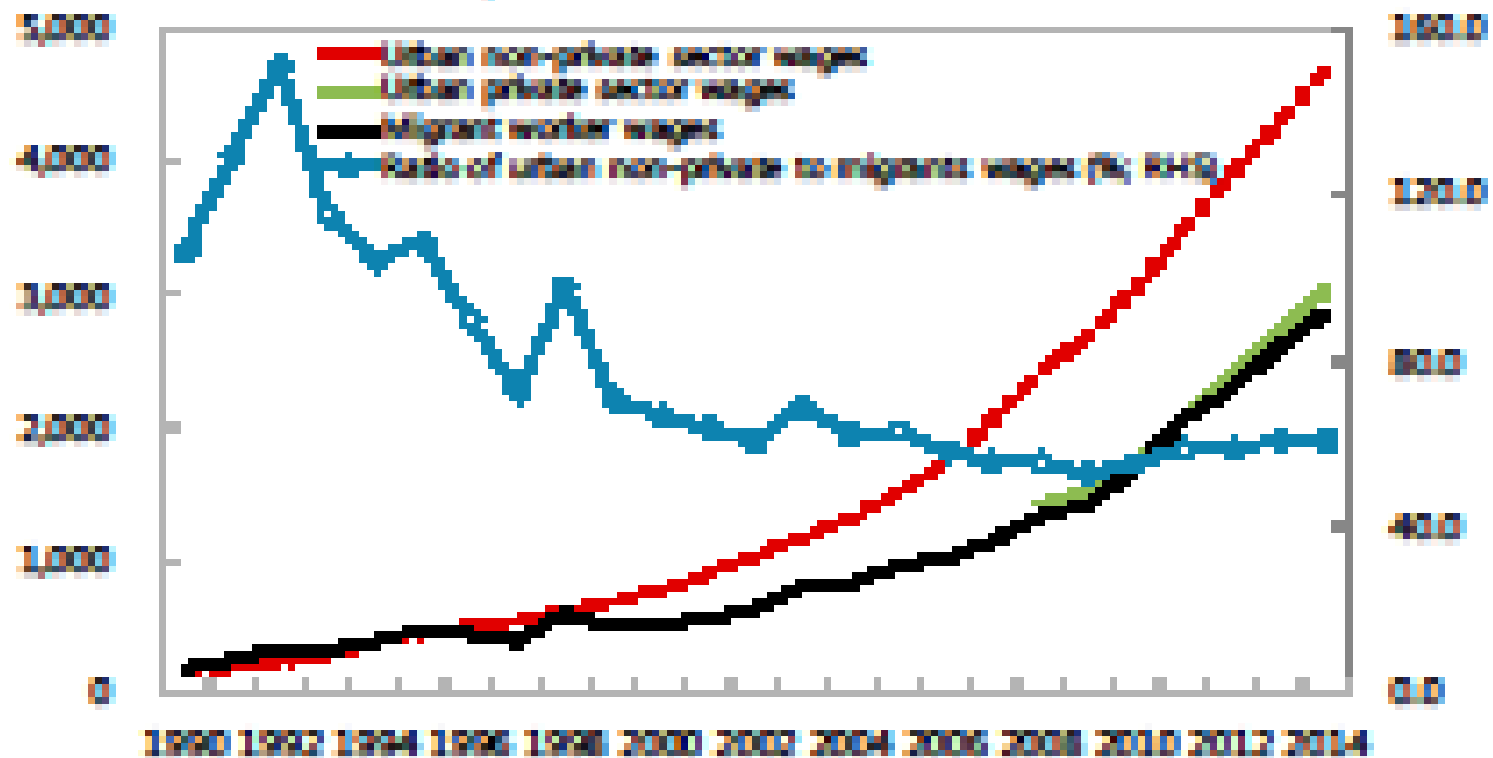
투자율 (투자/GDP)



2000년대 중반이후 임금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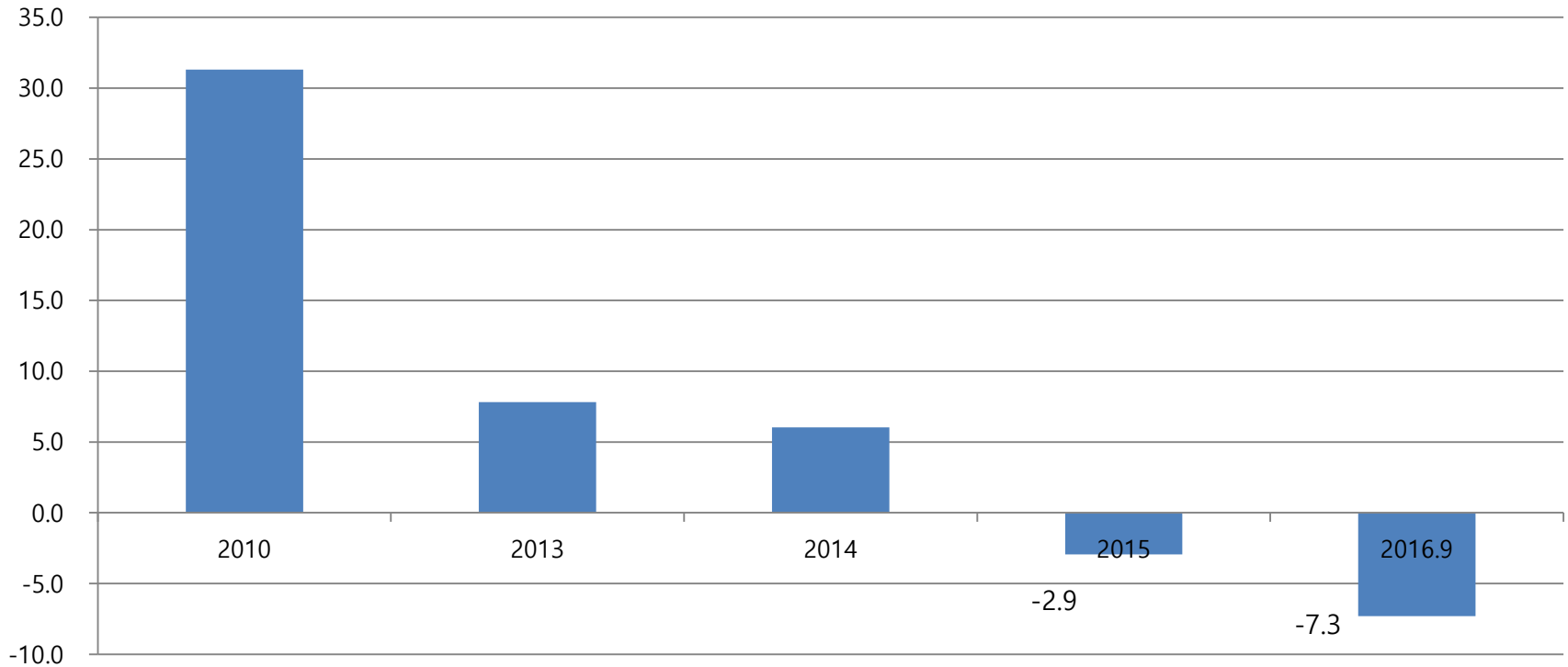
Average Urban Workers and Migrants Monthly Wages ^{1/}

(In RMB unless otherwise specified)



^{1/} Based on Lu (2012) estimates in "Trend in China Migrant Workers' Wages" in *Journal of China Social Science*, Vol.7 on migrant worker wages before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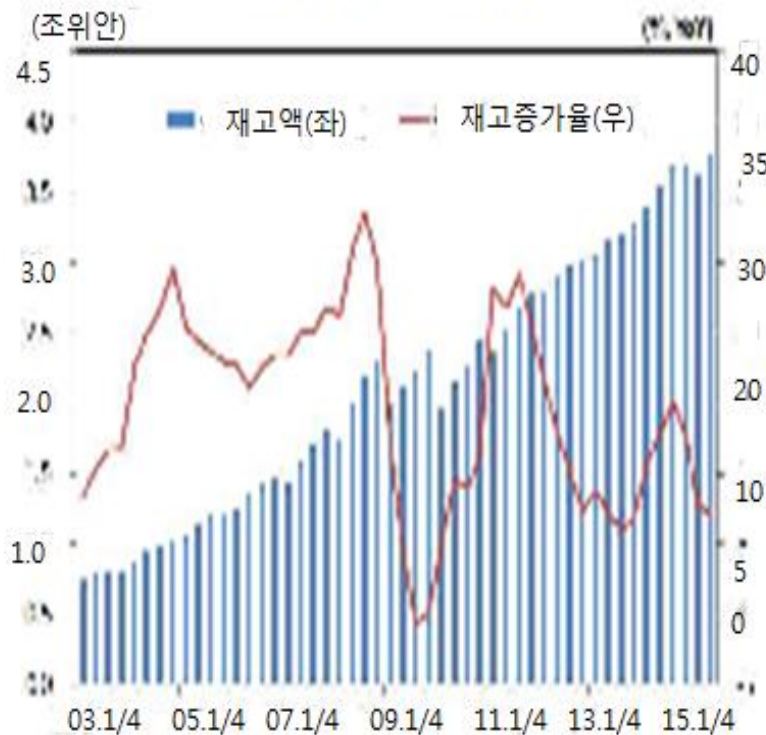
수출증가율 마이너스폭 확대



미국 트럼프시대 위안화 절하에 대한 공세와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시 수출하락폭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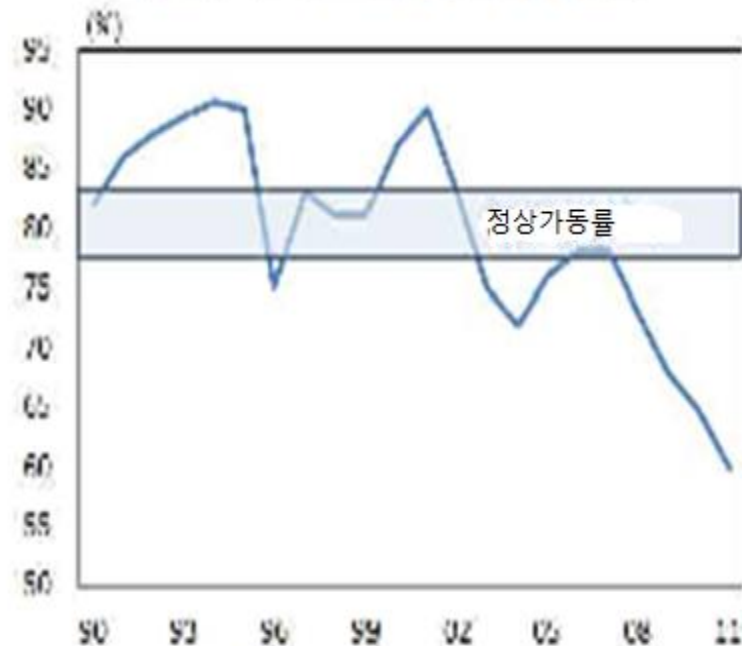
과잉투자=>재고증가

공업 재고 현황



자료: CEIC

중국의 제조업 평균가동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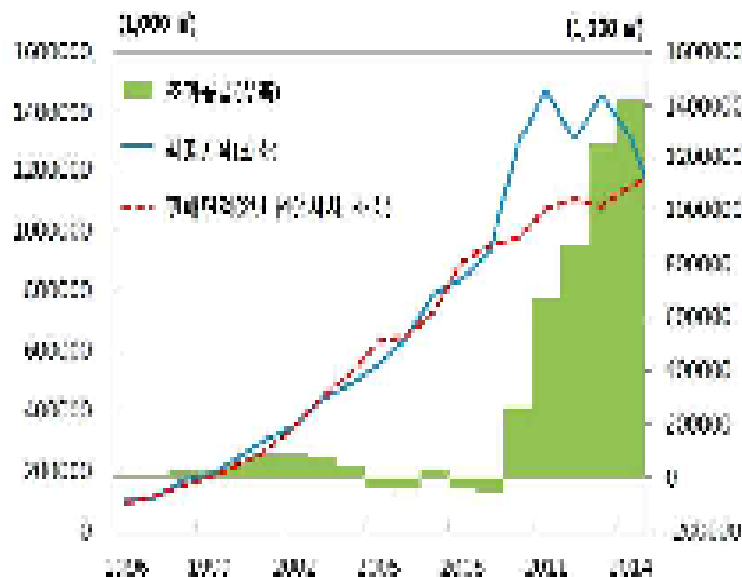


주: 1) 정상가동률(국제표준)은 78-83% 내외
자료: IMF(2012 Article IV Report)

제조업 가동률이 50% 대까지 하락
과잉투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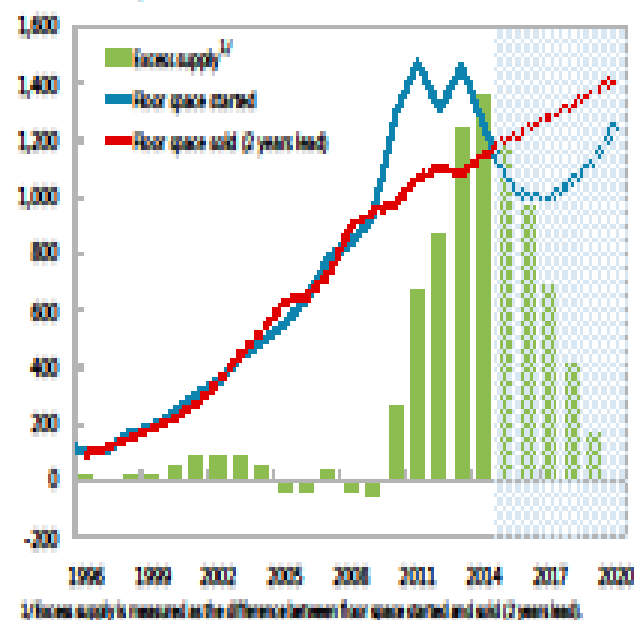
주택부문 재고 급증

주택 초과공급규모 추정



자료 : Chivakul · Lam et al.(20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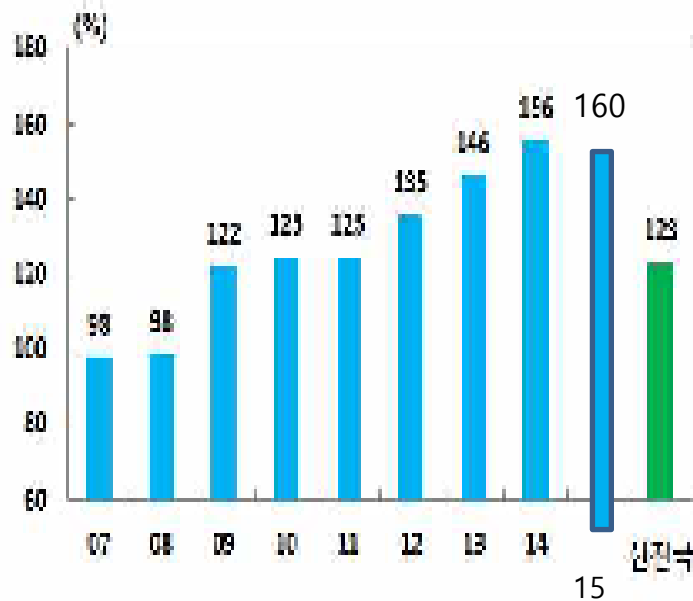
Residential Market Overbuilding and Adjustment Scenario
(In millions of square meters)



2019년경 가서야 주택재고 해소 전망 (IMF)
이는 중국경제가 2019년 경 까지도 어려움 지속 의미

부채증가 (특히 2009년 이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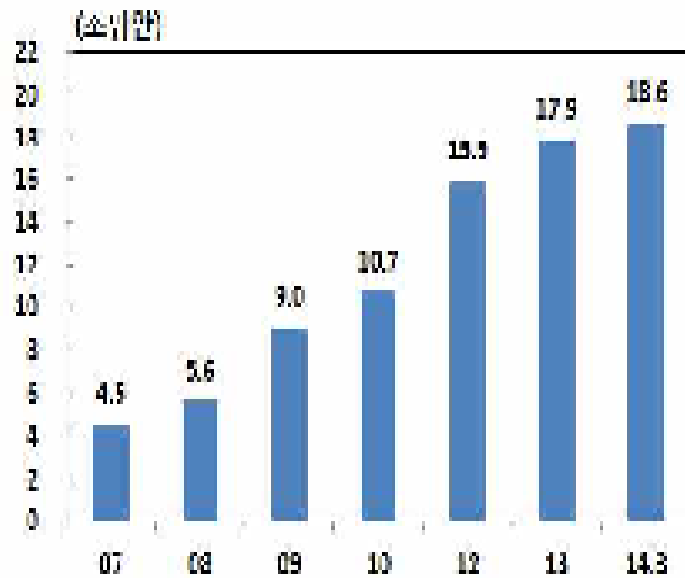
기업부문 레버리지 비율¹⁾



주 : (비금융기업 채무/경상ODP) × 100

자료 : BIS, 국가통계국

지방정부 채무



자료 : 審計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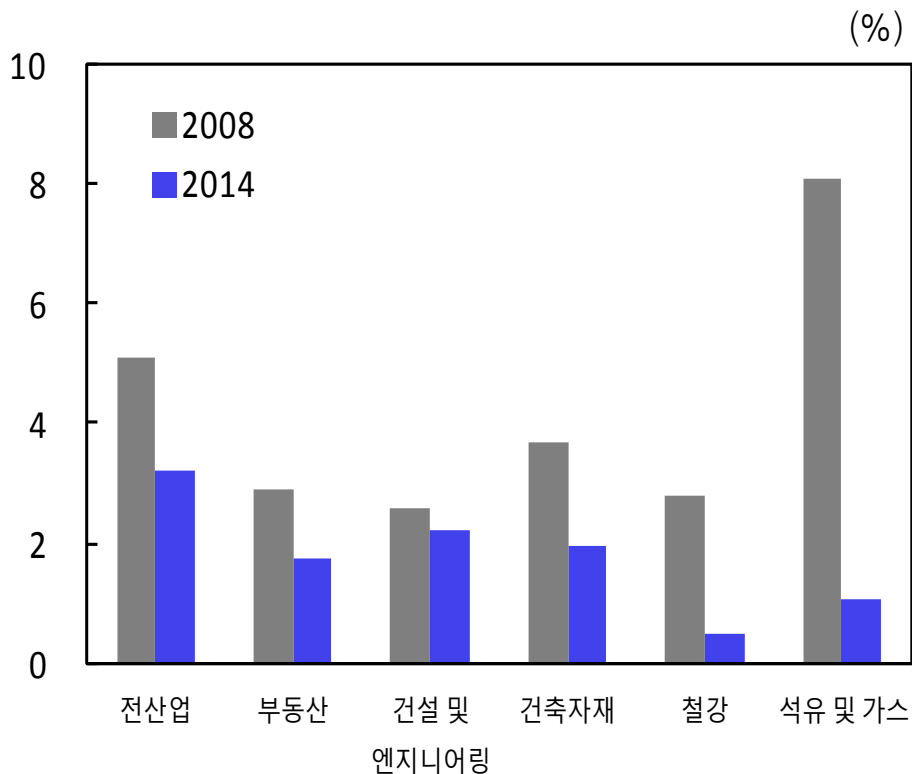
과잉투자, 가동율 하락, 재고증가로 기업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기업부채의 대GDP 비율이 160% 18조 달러인데 이 중 은행대출이 15조 달러이고 나머지는 회사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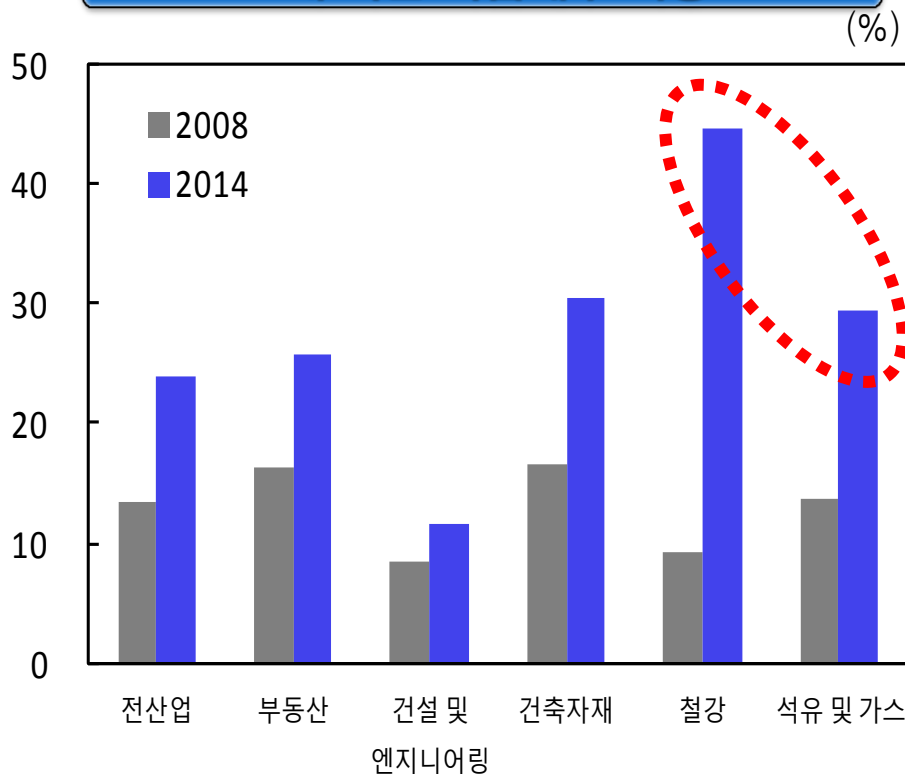
□ 중국: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 구조조정에 직면

- 과잉투자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저하 및 부실은 **철강, 석유화학** 등에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산업별 총자산 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미만 기업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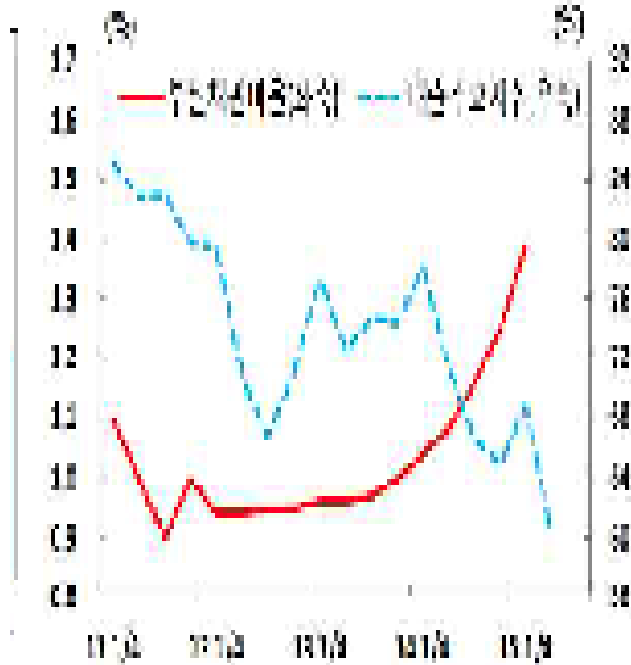


그림자 금융

-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등 은행의 부외활동(off-balance sheet)을 통해 창출되는 신용과 비은행 금융권(신탁회사, 재무회사, 리스, 민간대출 등)을 통해 창출되는 신용
- 최대 규모로 추정할 경우 GDP 대비 약 54%에 달해 약 7조 달러 규모
- 기업부채 18조 달러 (은행대출 15조 달러와 회사채 등)에 그림자금융 신용을 합하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의 규모는 25조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부실 급증

부실채권비율 및 대출수요



자료 : 인민은행, 은감회

중국 상업은행들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이 지난해 말 1.67%로 늘어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카일 바스는 10년 전 3조 달러였던 중국 시중 은행의 자산규모가 34조 5천억 달러로 열배 정도 증가

이 중 10%만 부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부실규모는 **3조 5천억 달러**로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 6500억 달러의 5배 수준

인민은행이 이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에 나서게 되면 위안화 약세를 피할 수 없어 앞으로 3년 안에 위안화 가치가 4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

중국 최대 국영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최대 손실 규모는 **1조 5000억 달러** 수준 부실채권 비중이 8.1%라고 추산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

중국국제금융공사 발표대로 8% 정도라고 하면 기업신용 25조 달러 중 2조 달러 정도가 부실화

금융위기 가능성

- 이대로 가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이 부족해져 제 기능을 하기 힘들고 일부는 파산까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은행위기(banking crisis) 가능성
- 특히 중국은 대부분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 사전에 대출가능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대출을 준 이후에도 엄격히 모니터링하는 사전심사 사후모니터링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통상적
- 기업의 부실부문을 어떻게 구조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금융기관의 부실금융을 어떻게 털어내서 금융건전성을 회복시키느냐 하는 문제
- 3월 초 열렸던 양회에서 확정된 13차 5개년 경제계획(13.5규획)에서 공급측 개혁 추진 결정
 - 핵심은 과잉투자부분의 구조조정으로 약 300만 명 정도의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약 1000억 위안 (약 150억 달러)의 실업대책기금을 조성기로 발표
- 2조 달러로 추산되는 금융부실을 4대 국영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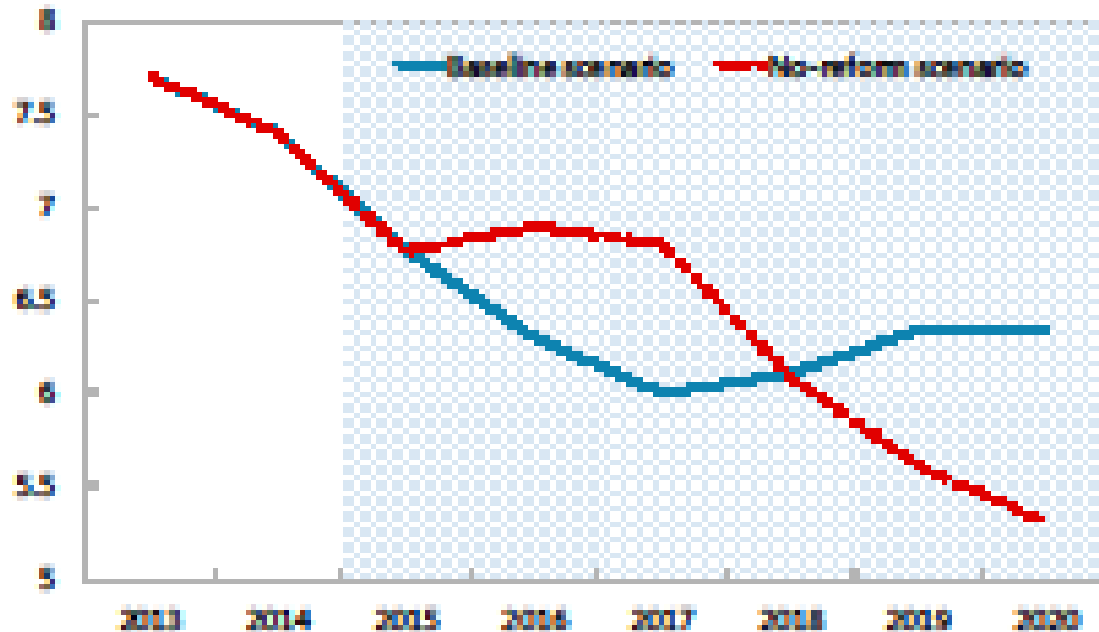
재정여력과 발권력 동원 가능성

- 부실여신을 10% 가격에 매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000억 달러 소요. 부실여신으로 자기자본을 잠식당한 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기자본확충 자금도 수천 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 문제는 재정에 여유가 있는가 하는 점
 - 2015년 재정적자의 GDP 대비비율은 2.5%로 추정
 - 재정적자 대GDP비율이 3.0% 이내를 안정권으로 유지할 경우 약 550억 달러의 재정지출 여유
 - 재정적자규모가 실업대책기금,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여신매입기금, 은행자본확충 소요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재정적자비율이 5%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결국 소요자금의 많은 부분을 인민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위안화가 약세 불가피. 이 점이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노리고 있는 부분.
- 위안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으로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급증해 매달 약 1000억 달러씩 유출되고 있다. 비록 외환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구조조정 vs 비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성장경로: 경착륙?

Baseline vs. No-reform Scenario

(In per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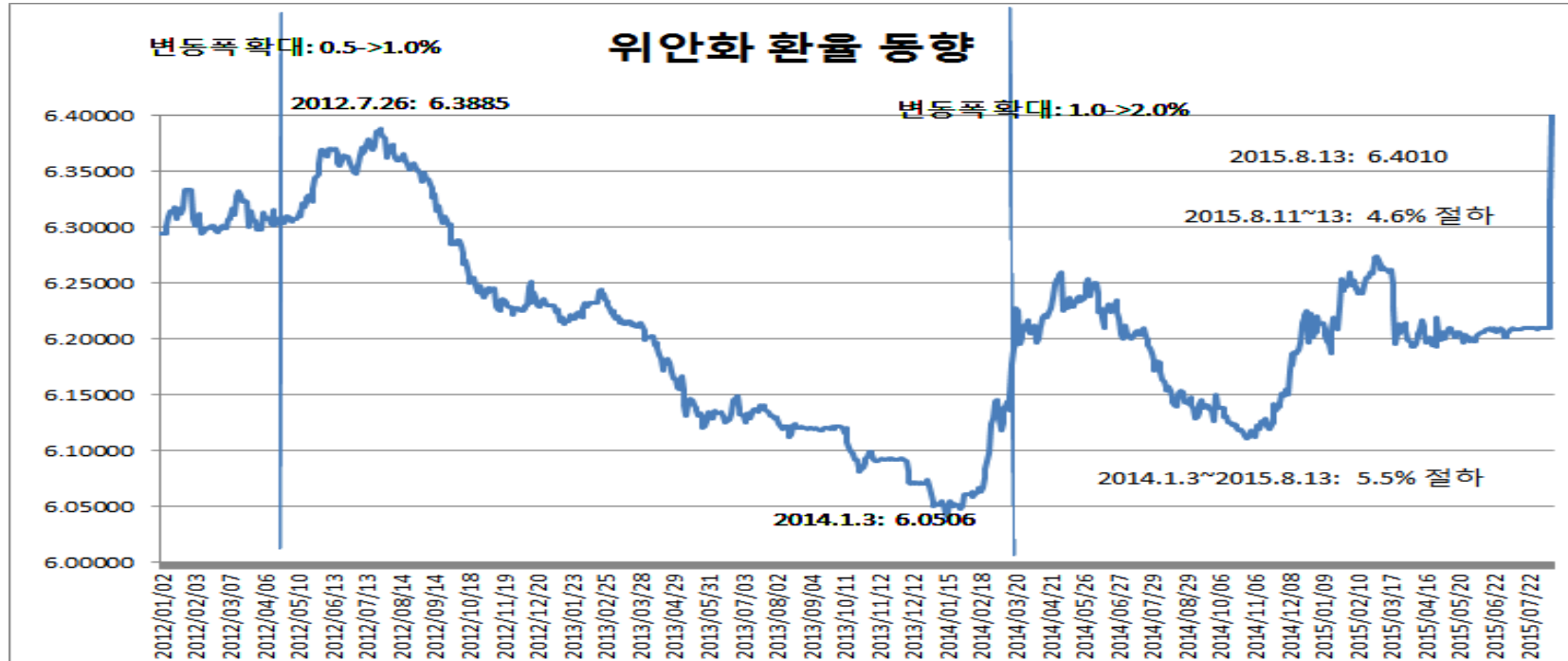


Source: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구조조정은 엄청난 실업과 재정부담 증가라는 정치사회적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통화팽창과 위안화 평가절하를 지속할 전망:

일각에서는 금년말 달러당 7.0~7.5위안 내년 말 8위안 까지 대폭적인 절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

위안화 평가절하: 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 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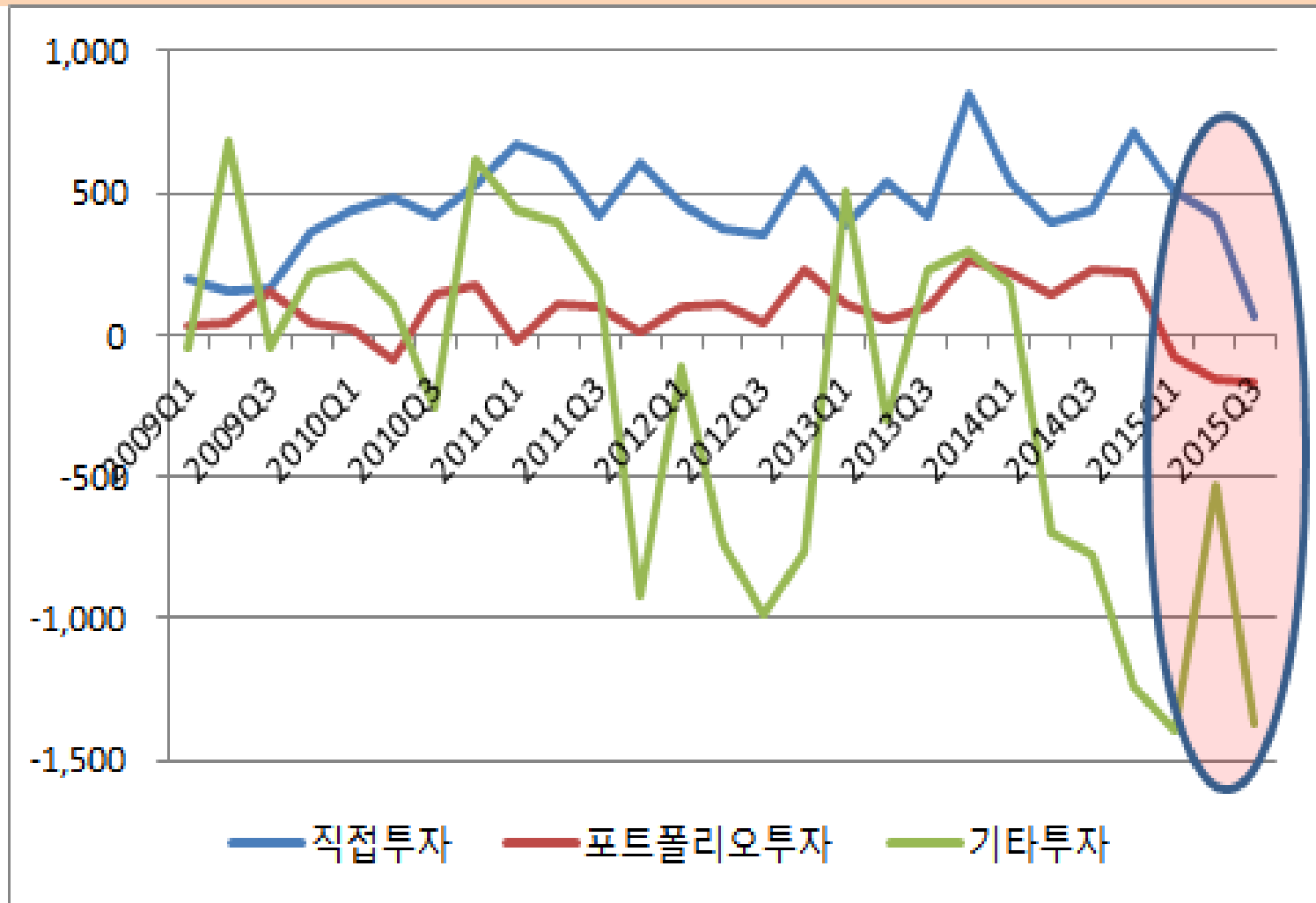
중국은 2015. 8.11~13일 달러대비 위안화를 연사흘 4.60% (11일 1.86%, 12일 1.62% 13일 1.1%) 급격한 평가절하 단행

- 중국은 이미 2014.1부터 위안화를 절하해 오다 연이틀 급격한 절하
- 그 전 2012.7~2014.1월 중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평가절상
- 금년부터는 **바스켓 환율제도**로 변경

헤지펀드 공격과 중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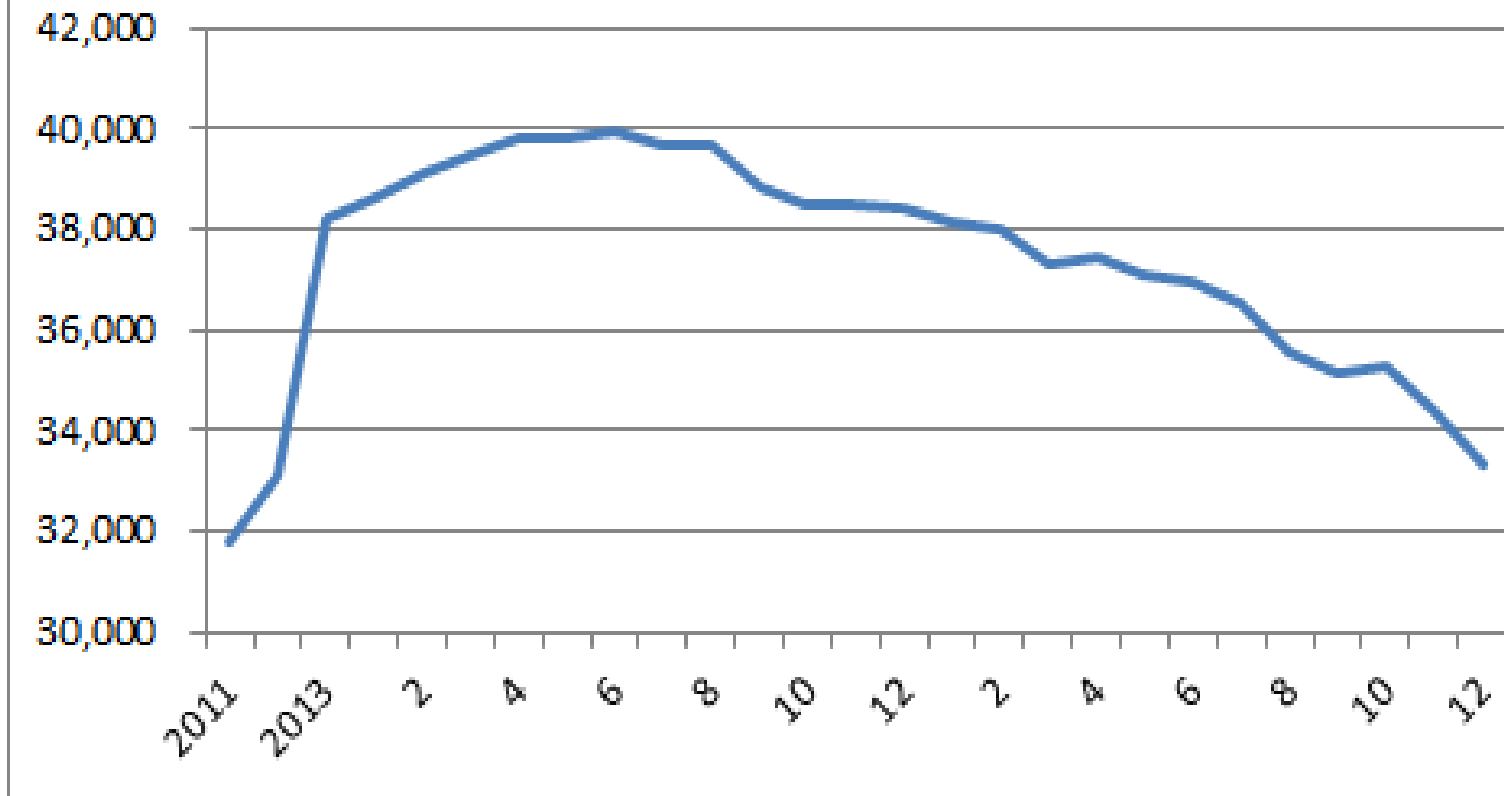
- 헤지펀드계의 전설적인 대부 조지 소로스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아시아통화 절하에 베팅했다고 밝힘
-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가치 추락 방어를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는 외환시장 개입
- 1월 12일에는 홍콩에서 하루짜리 홍콩은행간 금리(HIBOR)가 66.82%로 급등. 중국당국이 투기세력이 홍콩시장에서 위안화 약세를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안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해 위안화자금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결과.
- 월가의 큰 손 중 하나인 카일 바스가 이끄는 헤이먼캐피탈매니지먼트는 주식과 채권·원자재 등의 자산을 모두 팔아 조달한 자금의 85% 가량을 위안화와 홍콩 달러의 가치 하락에 풀 베팅

유출되는 자본: 중국투자수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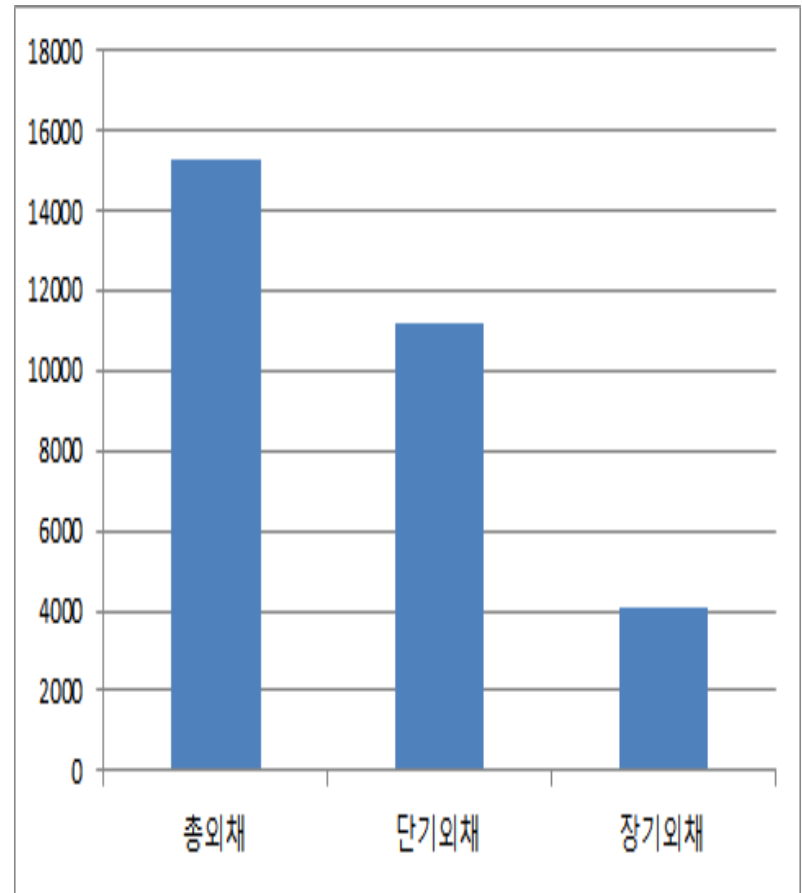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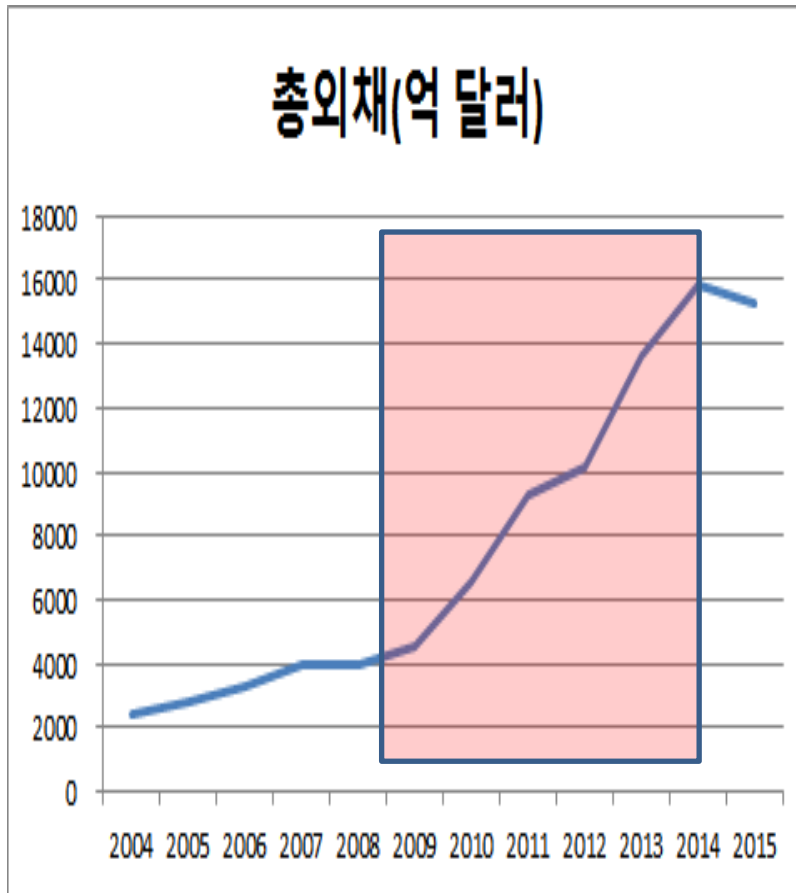
중국외환보유액 변동추이

외환보유액(억 달러)



월 약 1000~1100 달러씩 감소

중국의 대외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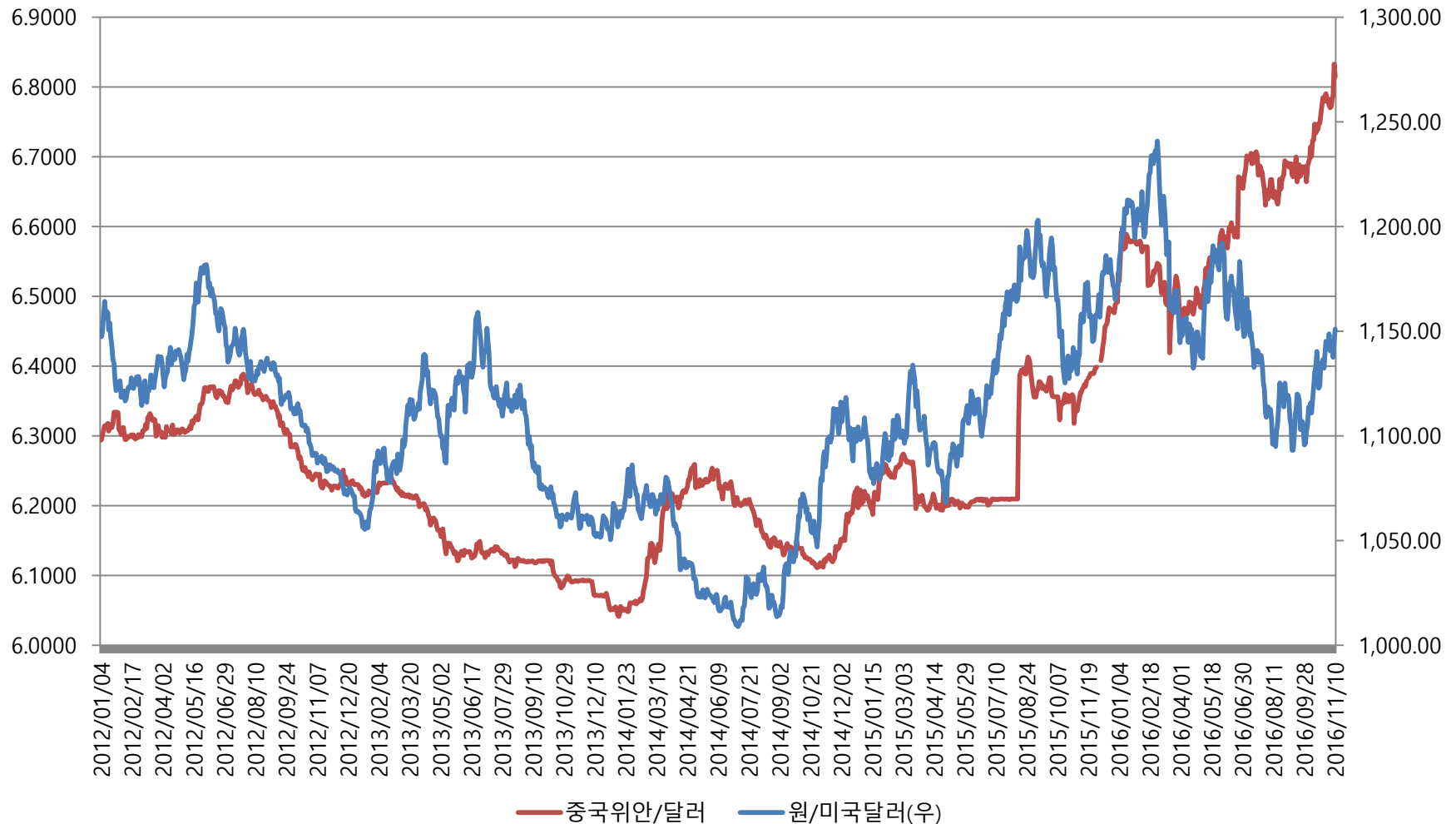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외자 대거 차입 과잉투자

중국의 외환보유액 전망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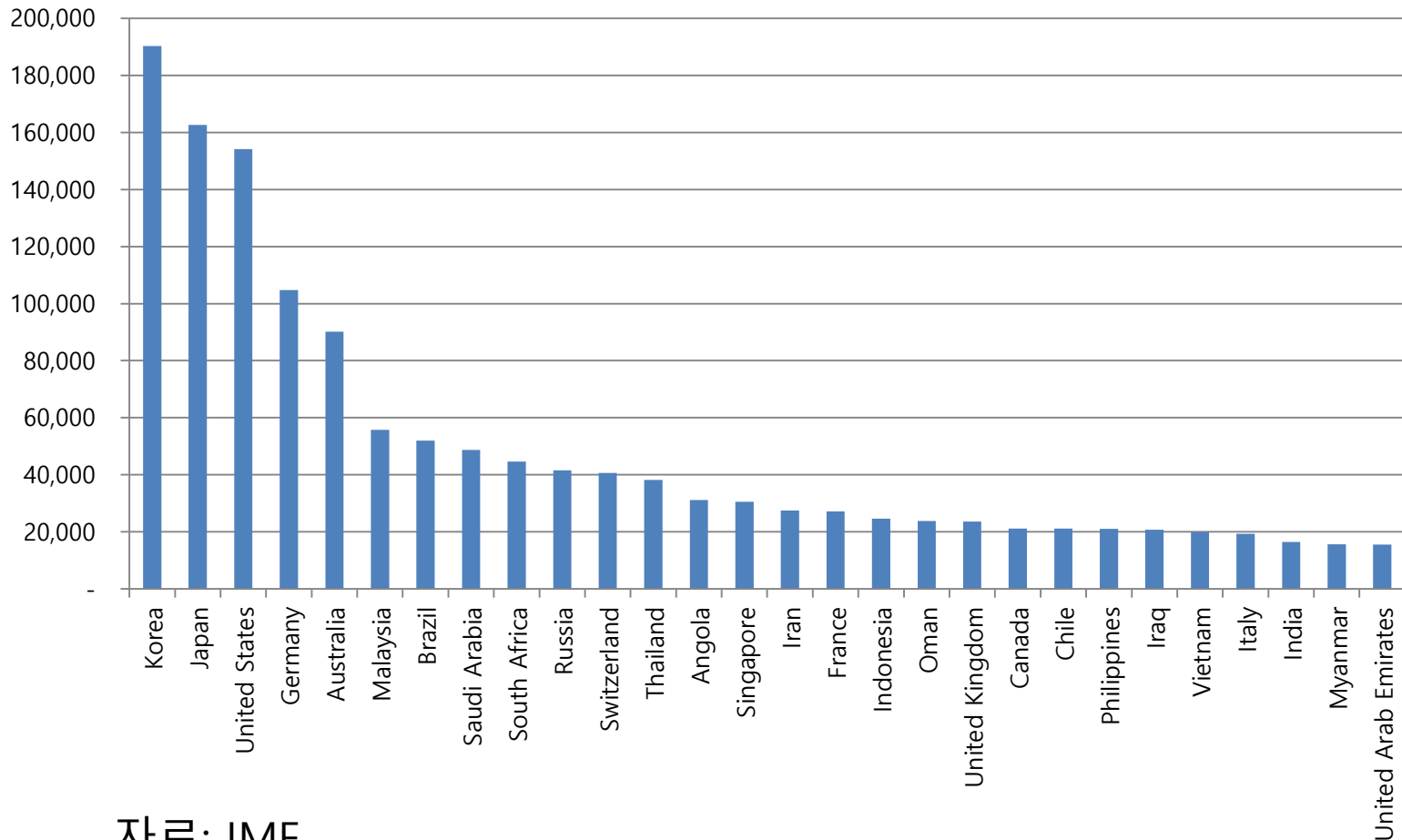
	외환보유액	
2015. 12	33,300	
2016 .6	32051	
2016. 10	31206	
2017. 6 (추정)	23,300	월 1000억 달러 유출 가정

중국 외환보유액 3조 달러 붕괴 2조 달러 붕괴는 그 자체가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 가능성

한국에의 전염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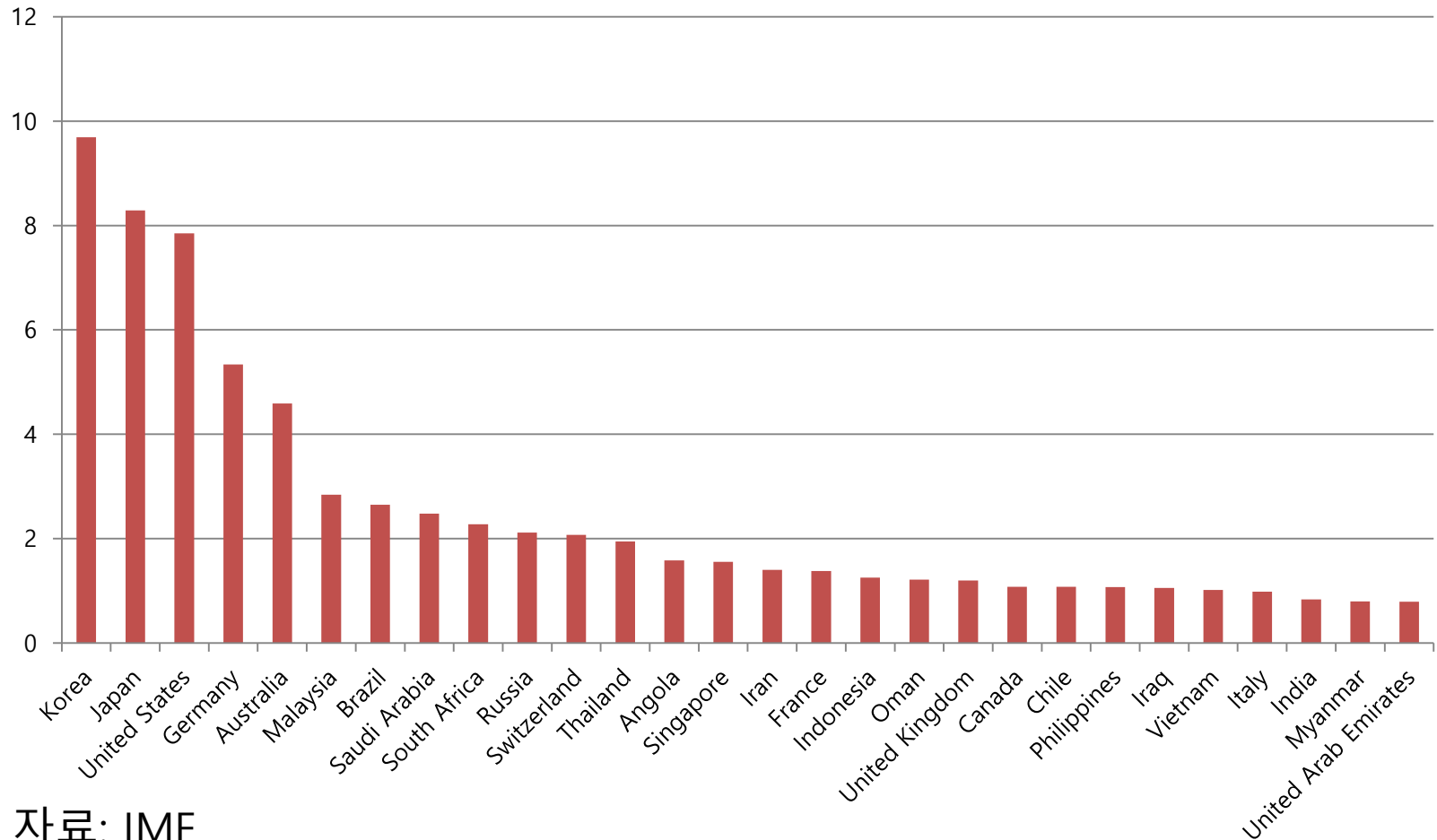


국별 대중국 수출규모(백만 달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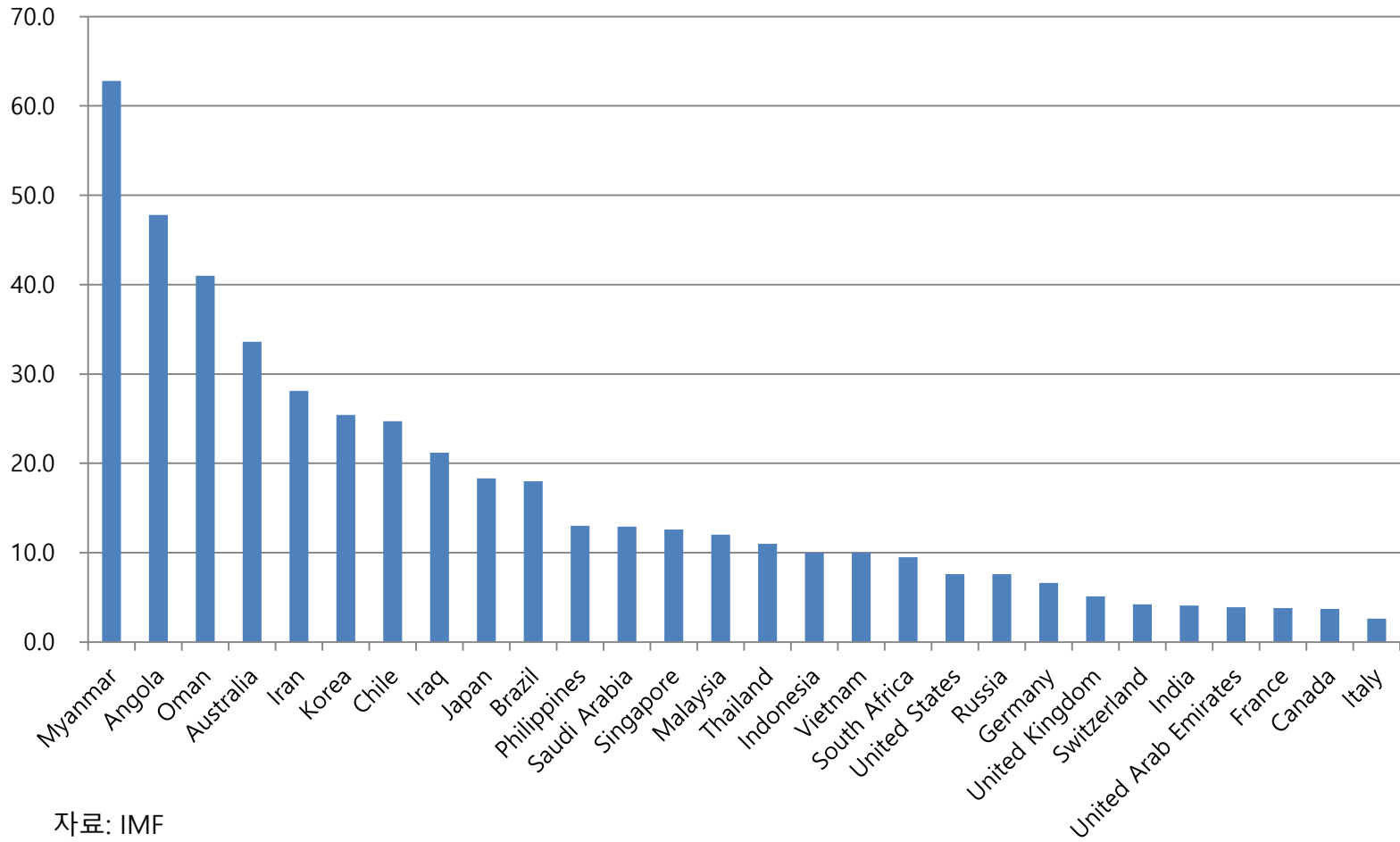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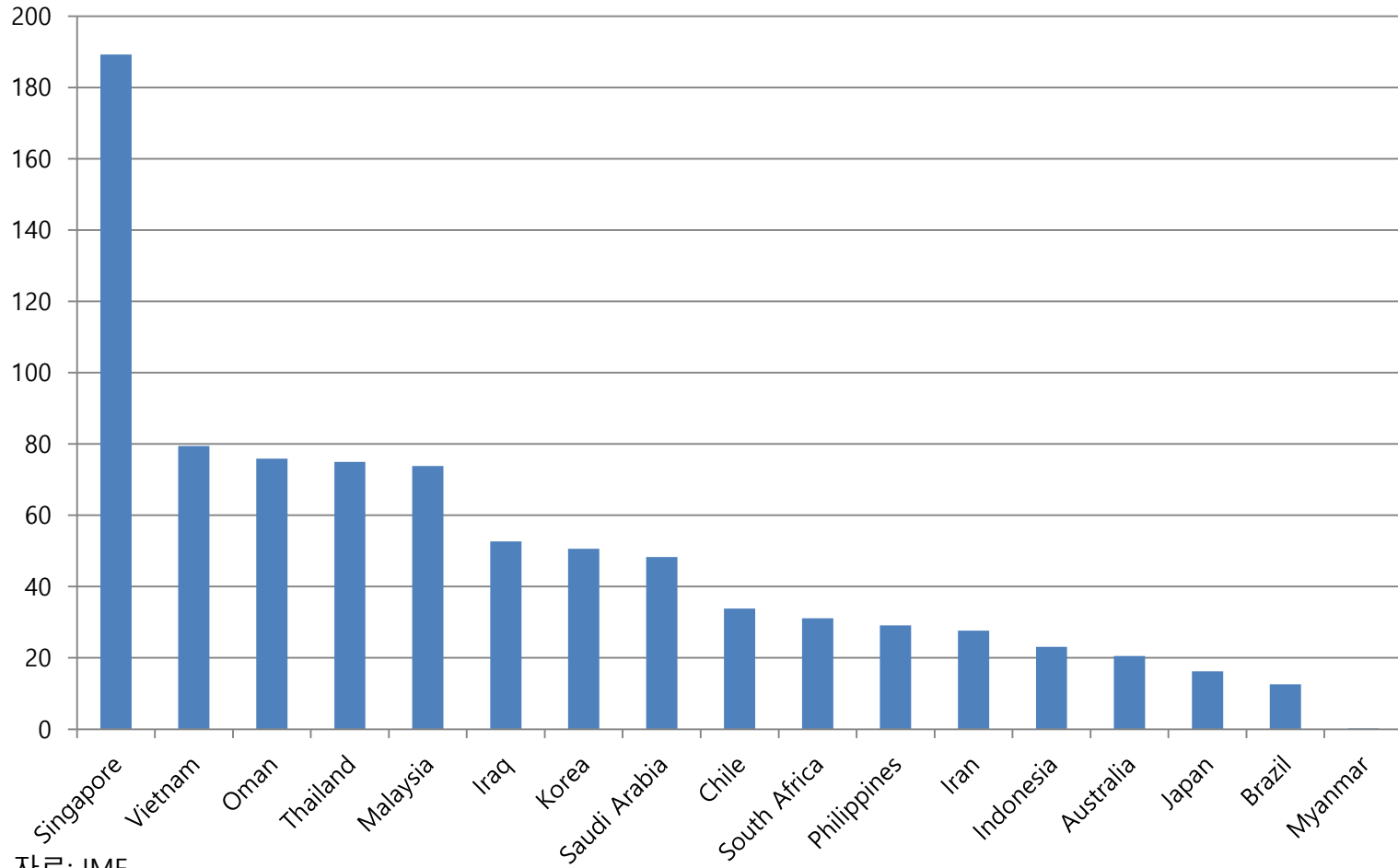
중국 수입의 국별 비중(%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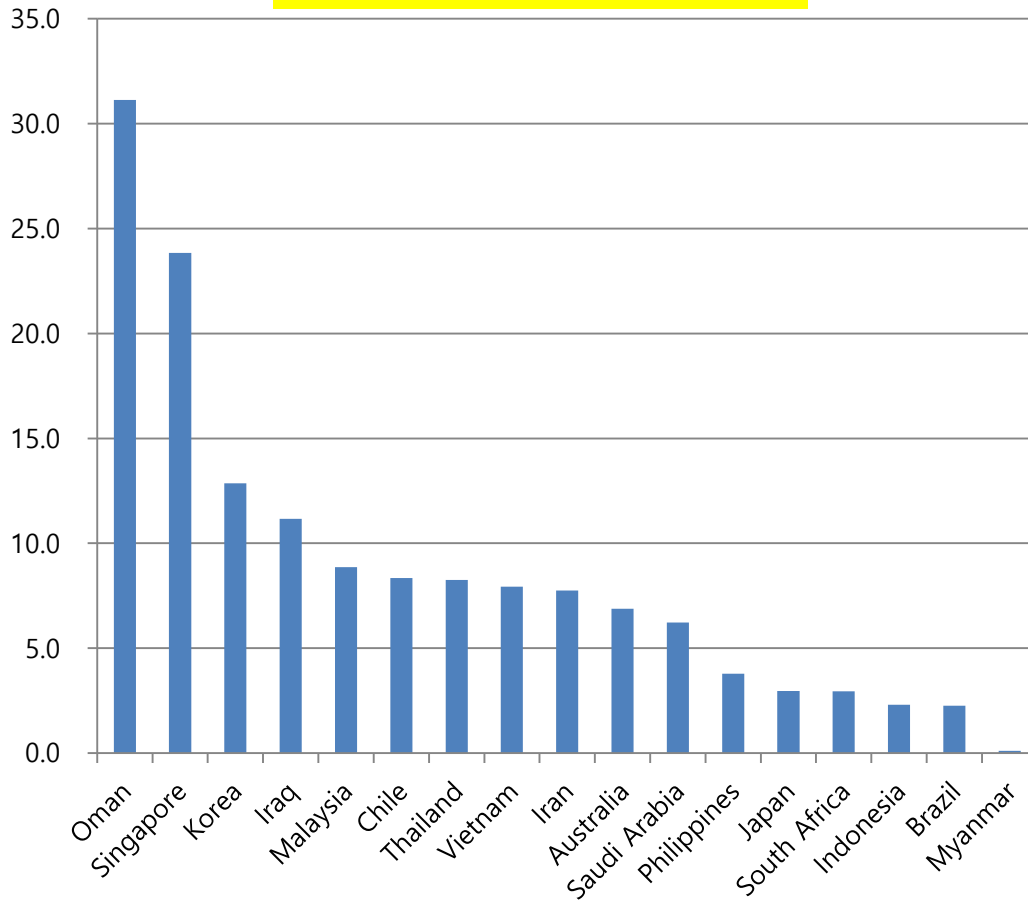
국별 수출의 대중국수출 비중(%)



국별 수출의 GDP 비중(%)



국별 중국리스크 노출도(%)



중국경제 추락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리스크 노출도 큰 국가의 타격 불가피할 전망

	국별 수출의 대중국수출 비중(%)	국별 수출의 GDP 비중(%)	중국리스크 노출도(%)
Oman	41.0	75.9	31.1
Singapore	12.6	189.2	23.8
Korea	25.4	50.6	12.9
Iraq	21.2	52.7	11.2
Malaysia	12.0	73.8	8.9
Chile	24.7	33.8	8.3
Thailand	11.0	75	8.3
Vietnam	10.0	79.4	7.9
Iran	28.1	27.6	7.8
Australia	33.6	20.5	6.9
Saudi Arabia	12.9	48.3	6.2
Philippines	13.0	29.1	3.8
Japan	18.3	16.2	3.0
South Africa	9.5	31.1	3.0
Indonesia	10.0	23.1	2.3
Brazil	18.0	12.6	2.3
Myanmar	62.8	0.18	0.1

	자원수출국
	공산품수출국

중국리스크 노출도 큰 국가별 대외취약성

	Reserves-Debt(US\$ bill.)	Current Account(US\$ bill.)
Australia(2014)	- 1,323.0	- 40.4
Brazil(2014)	- 347.4	- 104.0
Indonesia(2013)	- 169.8	- 29.1
South Africa(2013)	- 94.1	- 21.2
Argentina(2013)	- 97.0	- 4.7
Chile(2014)	- 105.2	- 3.0
Thailand(2013)	19.4	- 3.8
Malaysia(2013)	- 78.8	11.7
Oman(2013)	-	5.1
Philippines(2014)	- 21.9	12.7
Vietnam(2013)	-	9.5
Iraq(2012)	4.8	29.5
Iran(2014)	-	36.8
Korea(2014)	- 67.9	89.2
Singapore(2014)	142.1	58.8
Saudi Arabia(2014)	333.2	76.9

중국경제 추락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리스크 노출도 큰 국가의
대외취약성 증가로 미국금리 인상시 자본유출 가속화 전망

환율전망과 기업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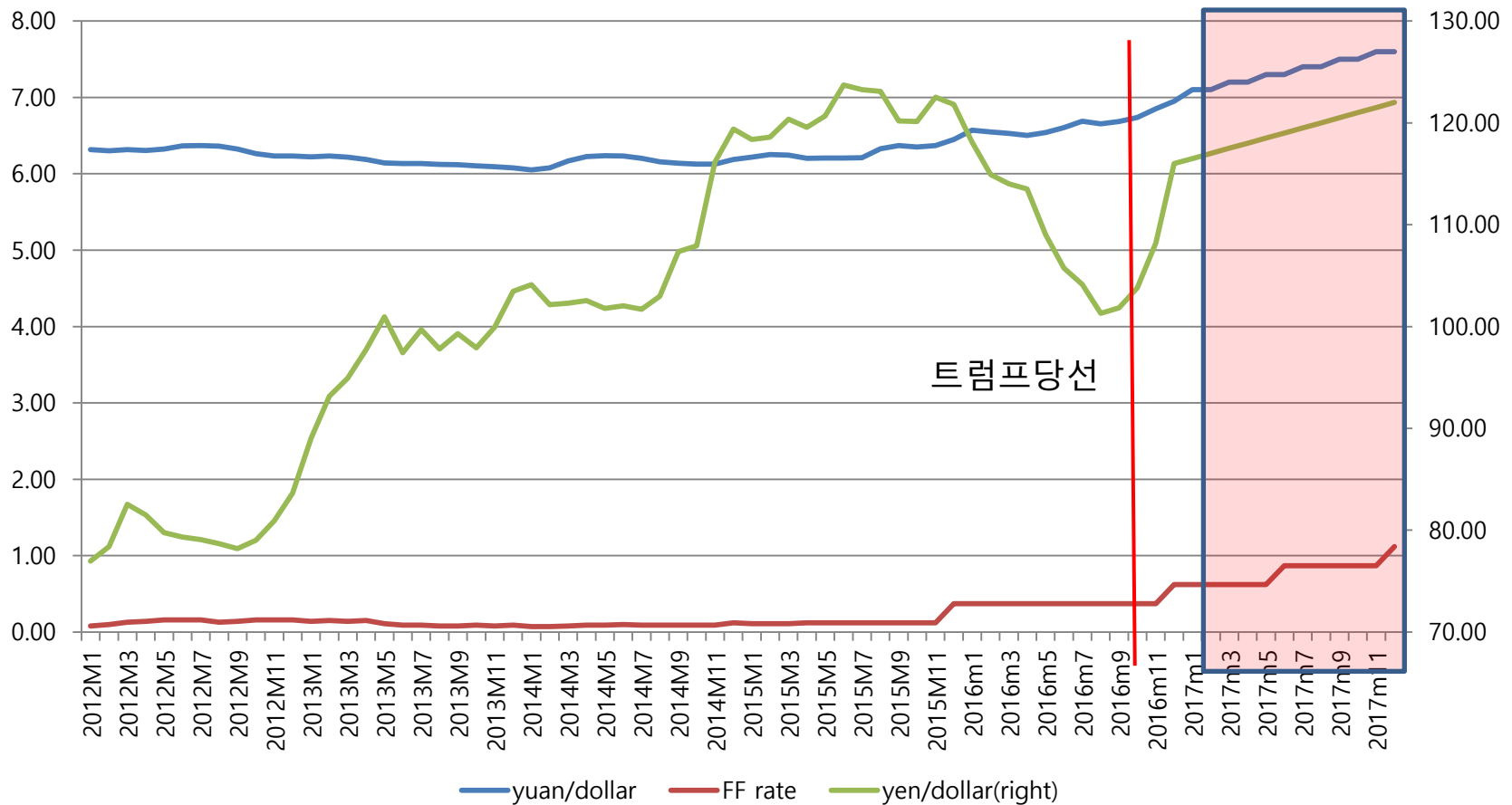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전망

- 미국: 2차 추가 금리인상은 미국경제 회복세 고려 12월 정도 전망. 2017년은 달러강세 수출동향 관찰하며 2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FOMC 3차례 예고)
- 일본: 일본경제 성장 둔화 고려 현재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유지, 미국 새정부와의 협조가 중요 변수
- 유로존: 당분간 현재 기조 유지, 회복세 둔화될 경우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도 상존, 미국 새정부와의 협력이 관건
- 중국: 경착륙 방지 위한 추가 확대 통화정책 가능성, 미국 새정부와의 협상이 변수

환율전망: 주요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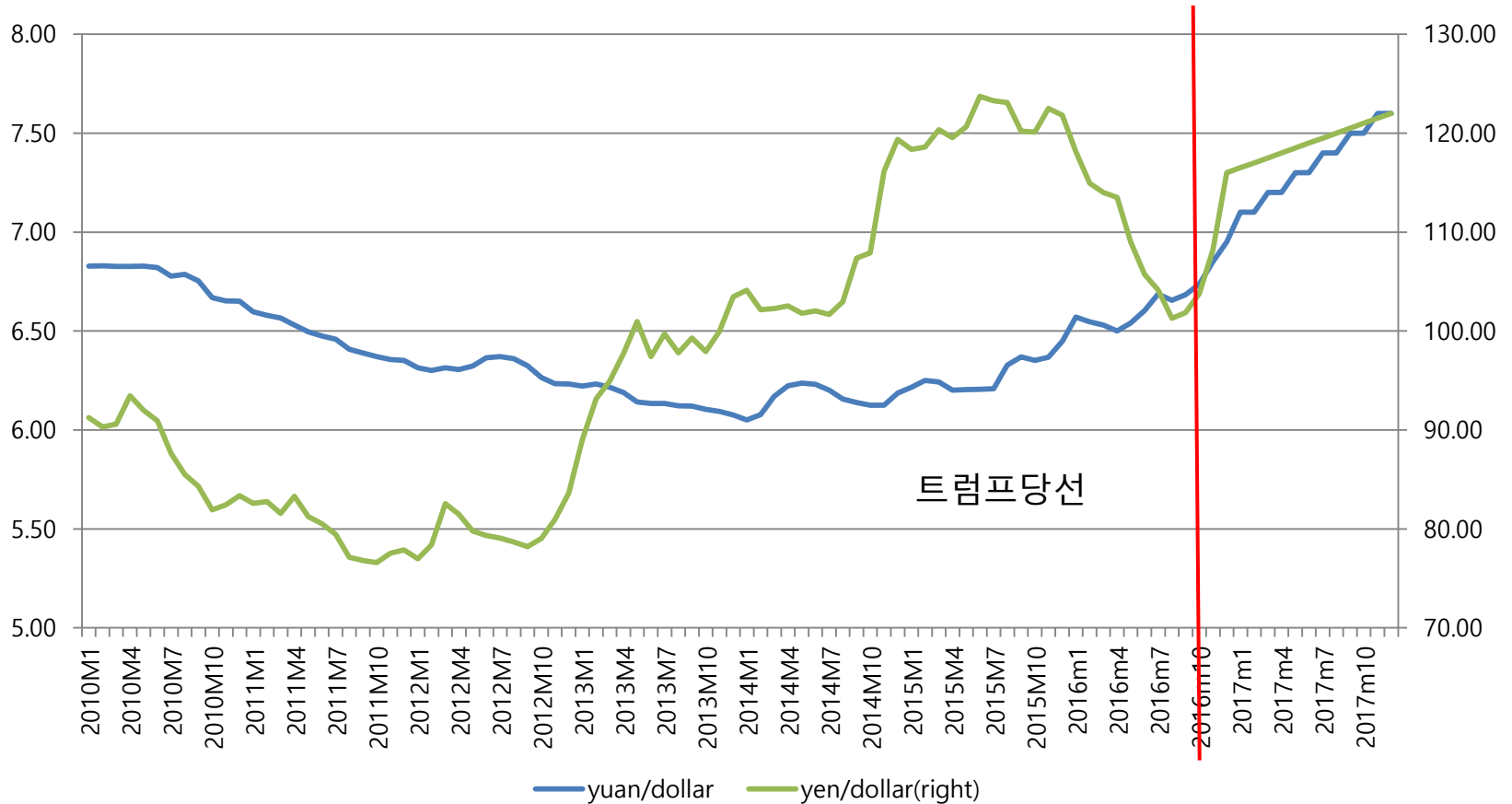
- 미국경기 회복정도와 금리인상 및 달러화 강세 정도
 -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12월 금리 인상 후 내년 중 2회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 달러화 강세 전환 전망
- 중국경기 연착륙 여부와 자본유출 및 위안화 절하 정도
 - 금년 중 추가 절하 지속 달러당 연말 6.9~7.0위안 내외 내년 말 7.6~7.7위안 내외 전망
- 일본 양적 완화 확대와 엔화 절하 정도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지속과 미국 트럼프 발작으로 연말 달러당 118엔, 내년 말 120~125엔 내외 전망
- 한국의 금리정책과 수출 회복 및 자본유출 정도
 - 미국 금리인상 전 1회 정도 금리인하 요인 존재 (마이너스 GDP갭률, 저물가상승률 지속)
 - 연말 달러 당 1170원 내외. 미국 금리 인상 후 자본유출 지속으로 원화 절하 내년 말 달러 당 1230~1240원 내외 전망, 수출회복에는 여전히 미흡할 전망
- 미국 등 글로벌 환율정책 공조 가이드라인 및 미국 BHC 법안 영향
 - 경상수지 기준 시 원화 절상 요인
 - 수출감소 속 더 큰 폭의 수입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이므로 수출증가율 기준되도록 국제 금융외교 강화 필요

미국금리인상과 엔 위안 환율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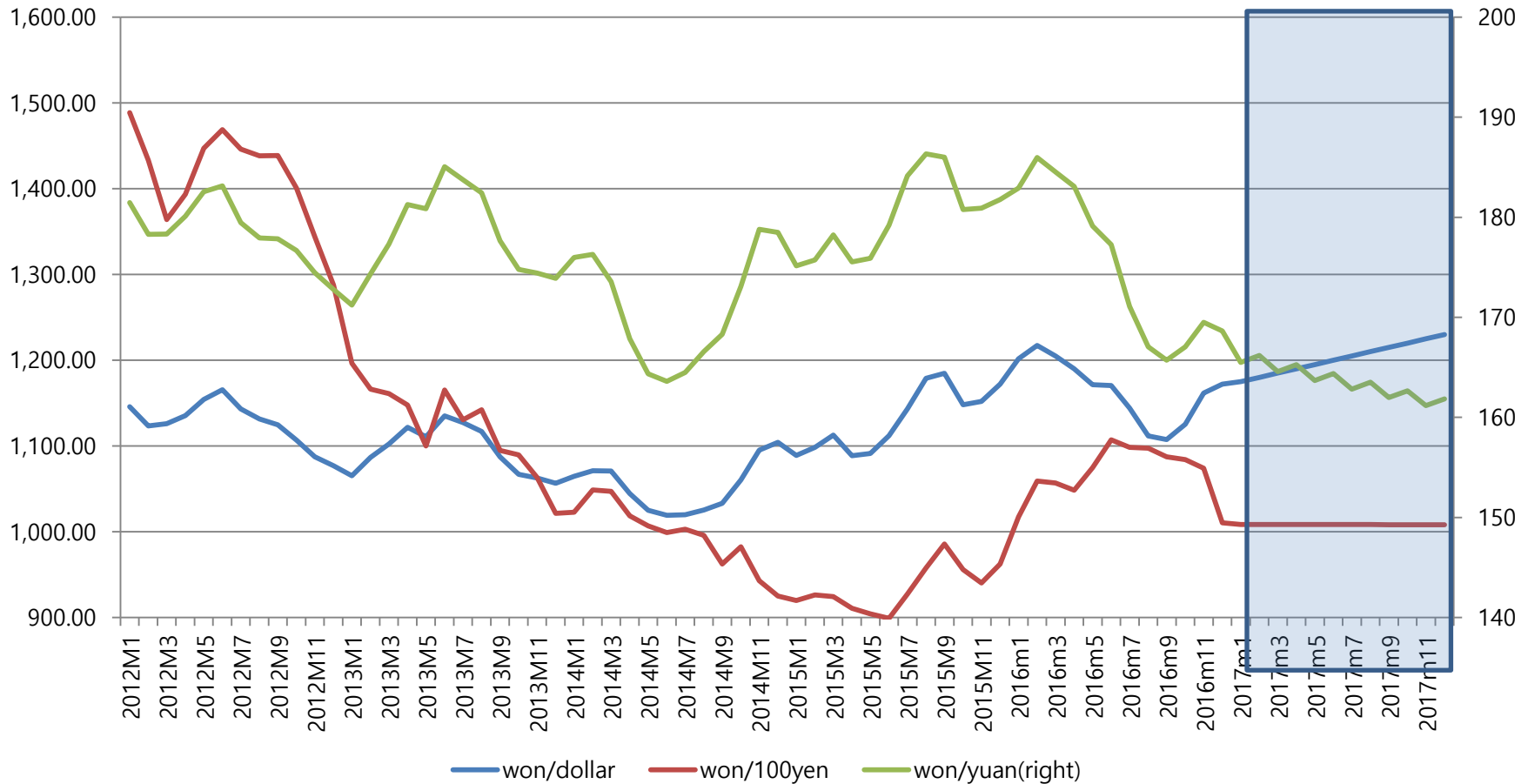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에 따른 트럼프 발작현상으로 예상외의 달러 강세
연말 이후에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완만한 달러 강세 전망

엔 위안 환율전망



강세를 보여오던 엔화도 트럼프 발작 이후 약세 전환,
그 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약세 지속 가능성

트럼프 발작, 미국금리 인상과 원/달러 엔/달러 원/엔 환율 전망



미국금리 인상 후 한국은 자본유출 우려로 원화 약세폭이 엔화 약세폭보다 크지 못해 원/엔 환율은 수출경쟁력 회복에는 미흡할 우려

기업의 대응전략

- 원/엔 환율 상승은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
- 그러나 수입중간재의 가격을 상승시켜 기업 수익 악화 초래
- 엔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원화기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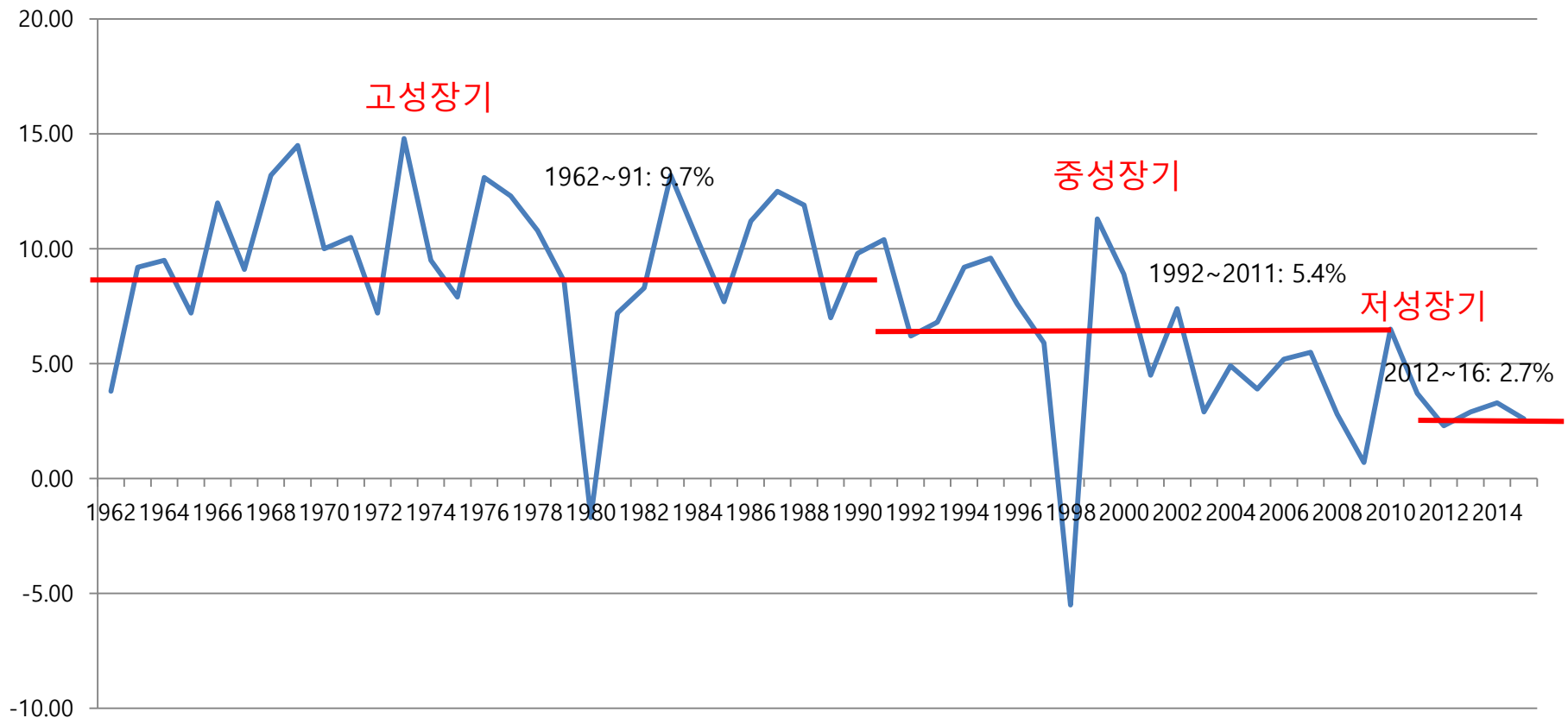
환헤지의 중요성

- **지금처럼 환율불확실성이 큰 경우 환헤지가 중요**
 -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물환을 활용한 환헤지
 - 선물환거래는 수출입업체와 은행간에 환율에 대한 사전 약정을 체결, 환위험 회피하는 금융 거래.
 - 수수료 비용과 보증금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대기업이 활용
 - 중소기업은 주로 환변동보험 가입 (약 40%만 환변동 보험 가입)
- 환율변동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제고 위한 체질개선 추진
- **지금처럼 환율불확실성이 큰 경우**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동향과 환율동향 모니터링 및 환위험 관리 컨설팅 강화와 내부전문인력 양성 필요
 - 특히 해외 법인의 경우 환율이 수익에 결정적인 변수

2017년 한국경제전망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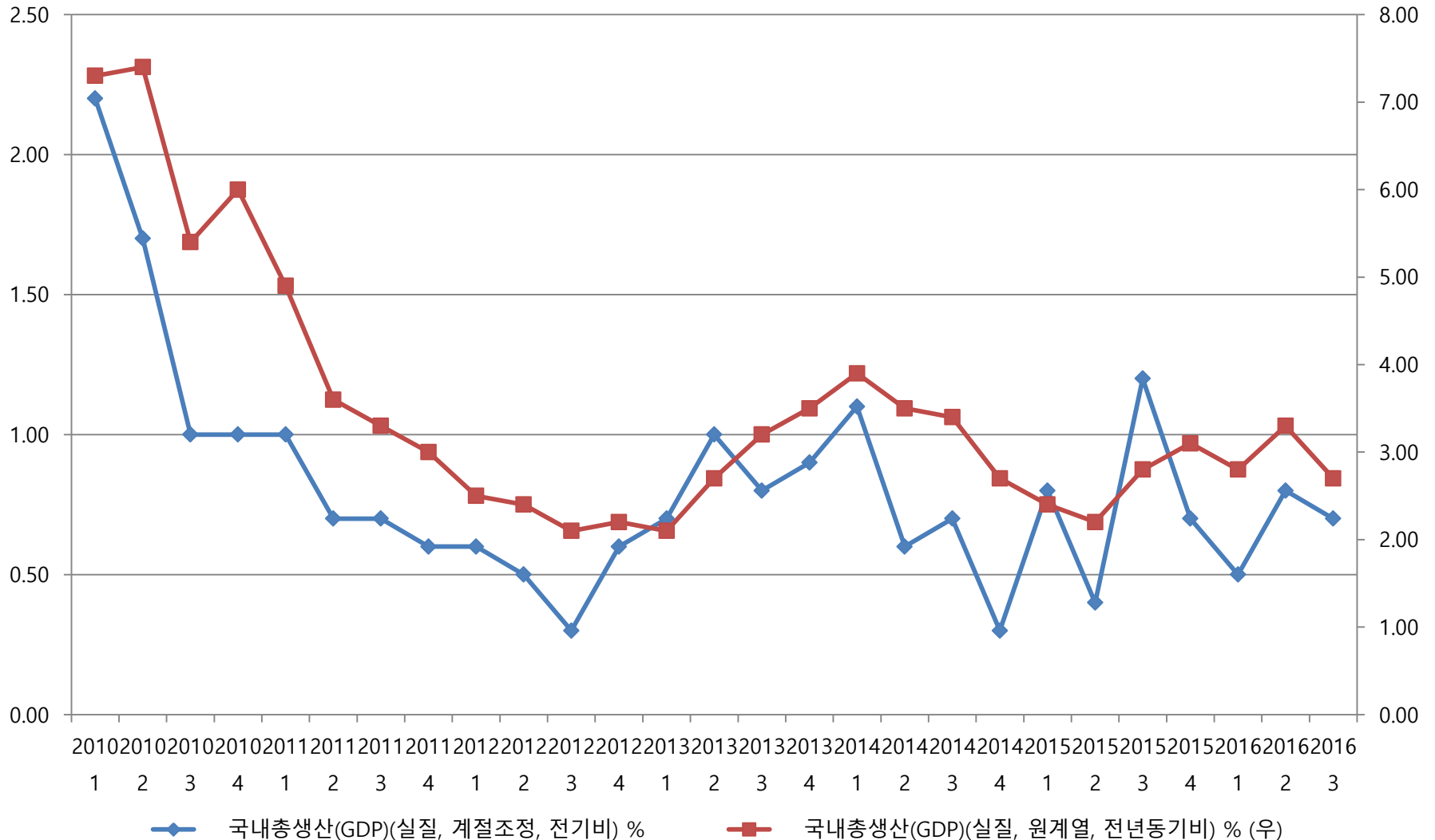
중장기 구조적 저성장기 진입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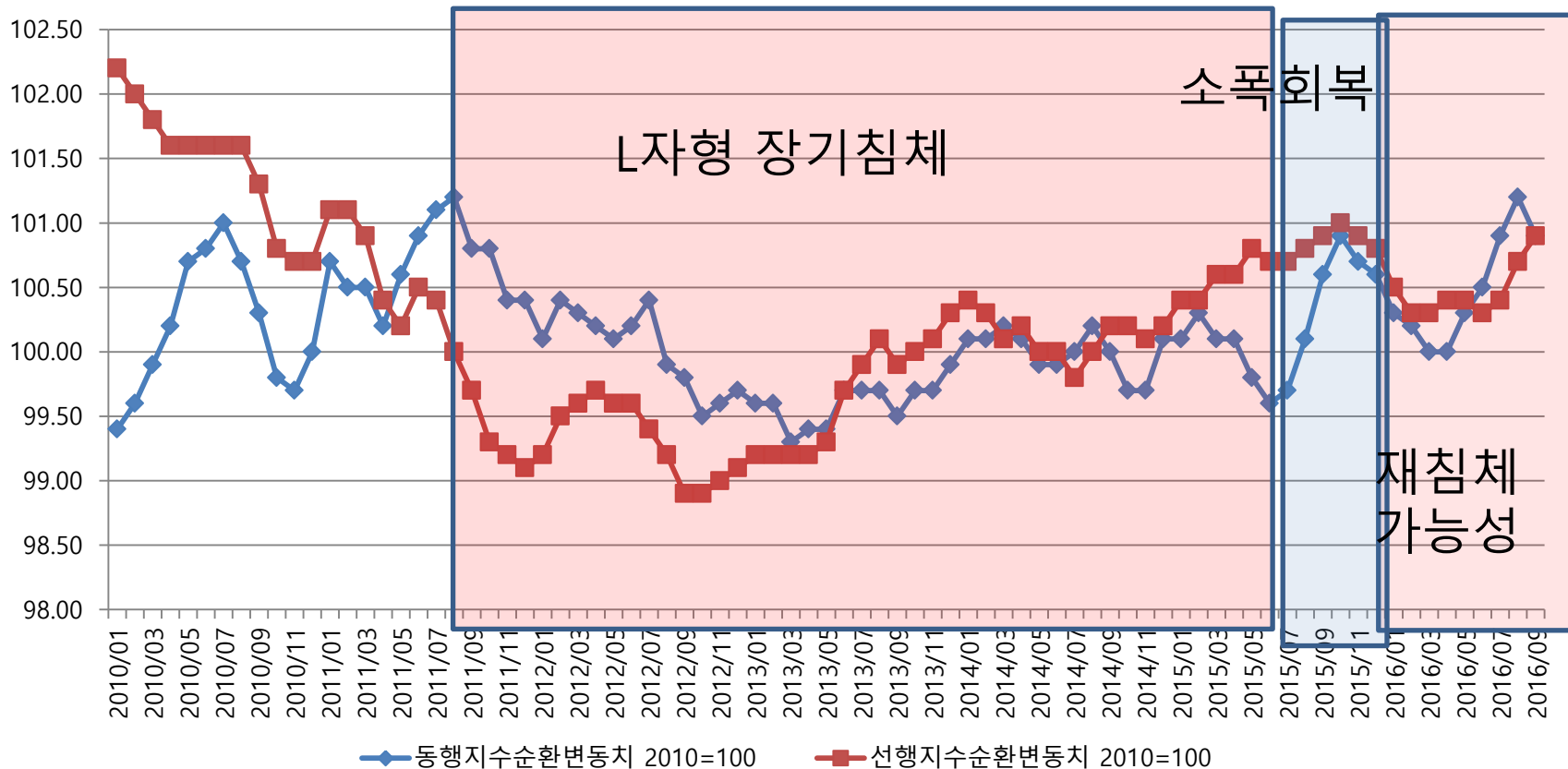
단기 침체 장기간 지속

회복력 미약한 소폭반등과 추락 반복하며 침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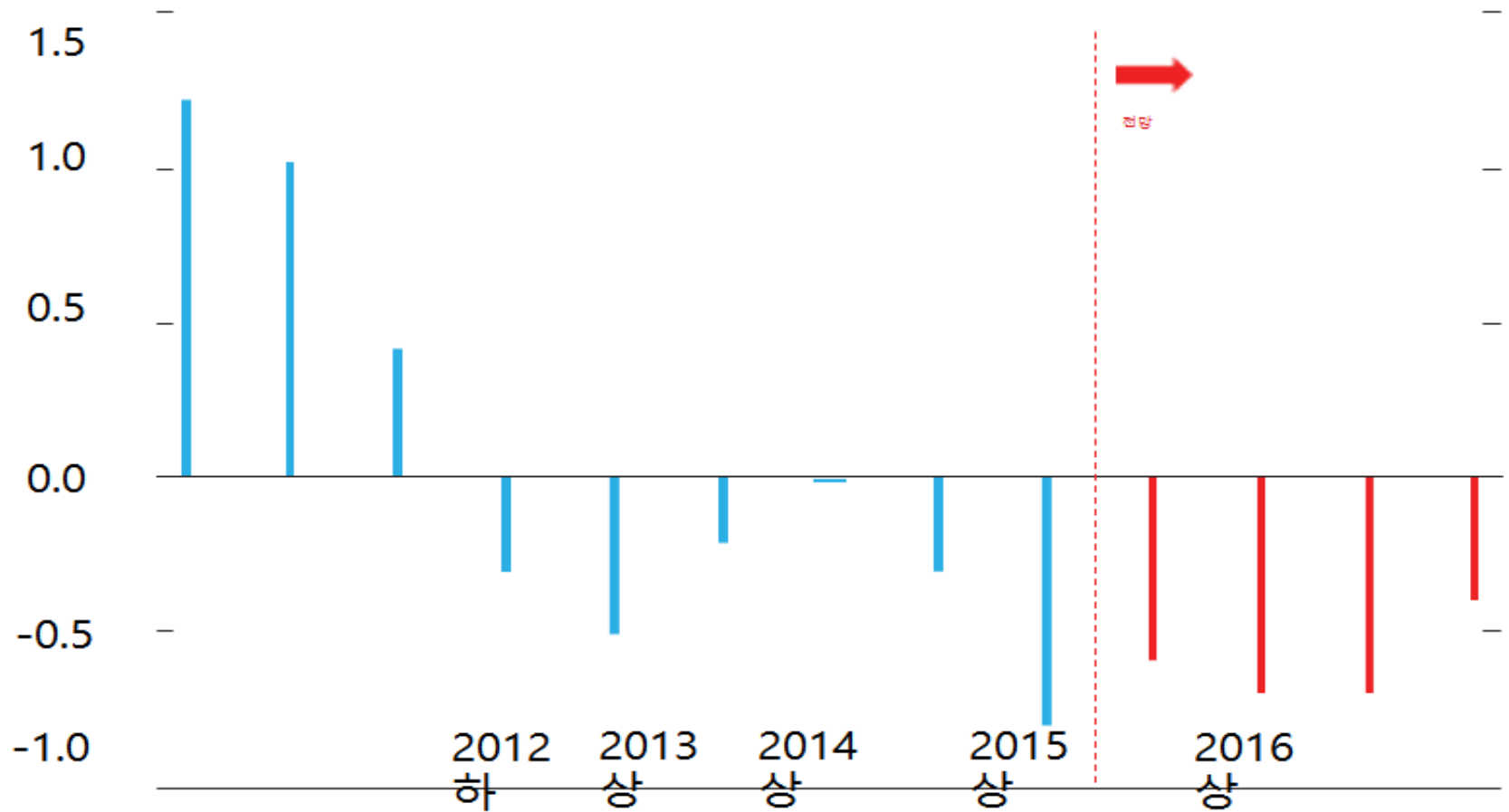
단기 더블딥 가능성

금년 중 2% 중반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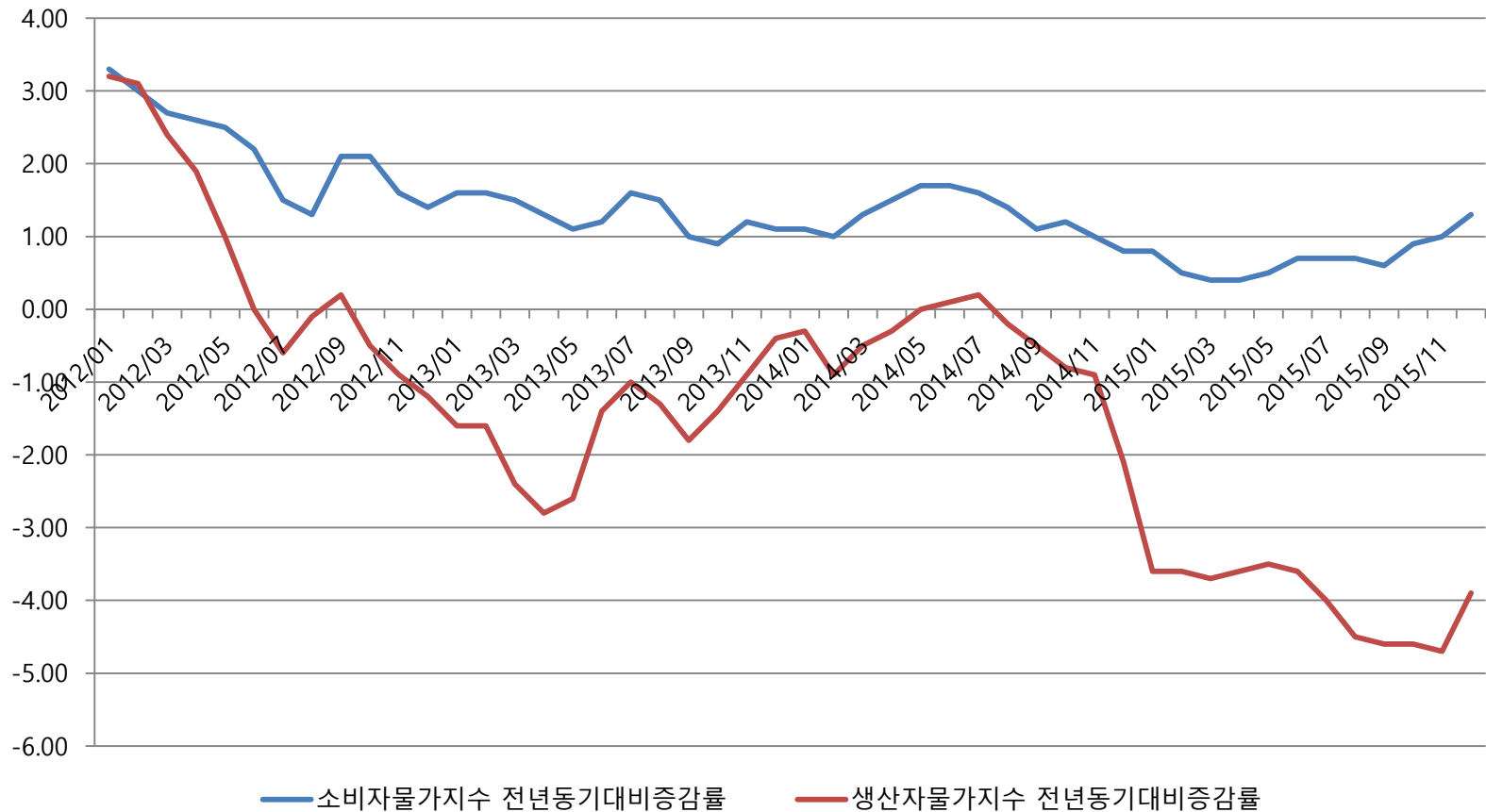


수출부진+ 투자보다는 구조조정+ 여소야대 20대 국회 정책불확실성 정치리스크로 인한 투자위축+일자리 위축 따른 소비 둔화

마이너스 GDP갭률 (실제GDP/잠재GDP 비율) 지속



장기간 저물가 (한은 물가목표 하한선 하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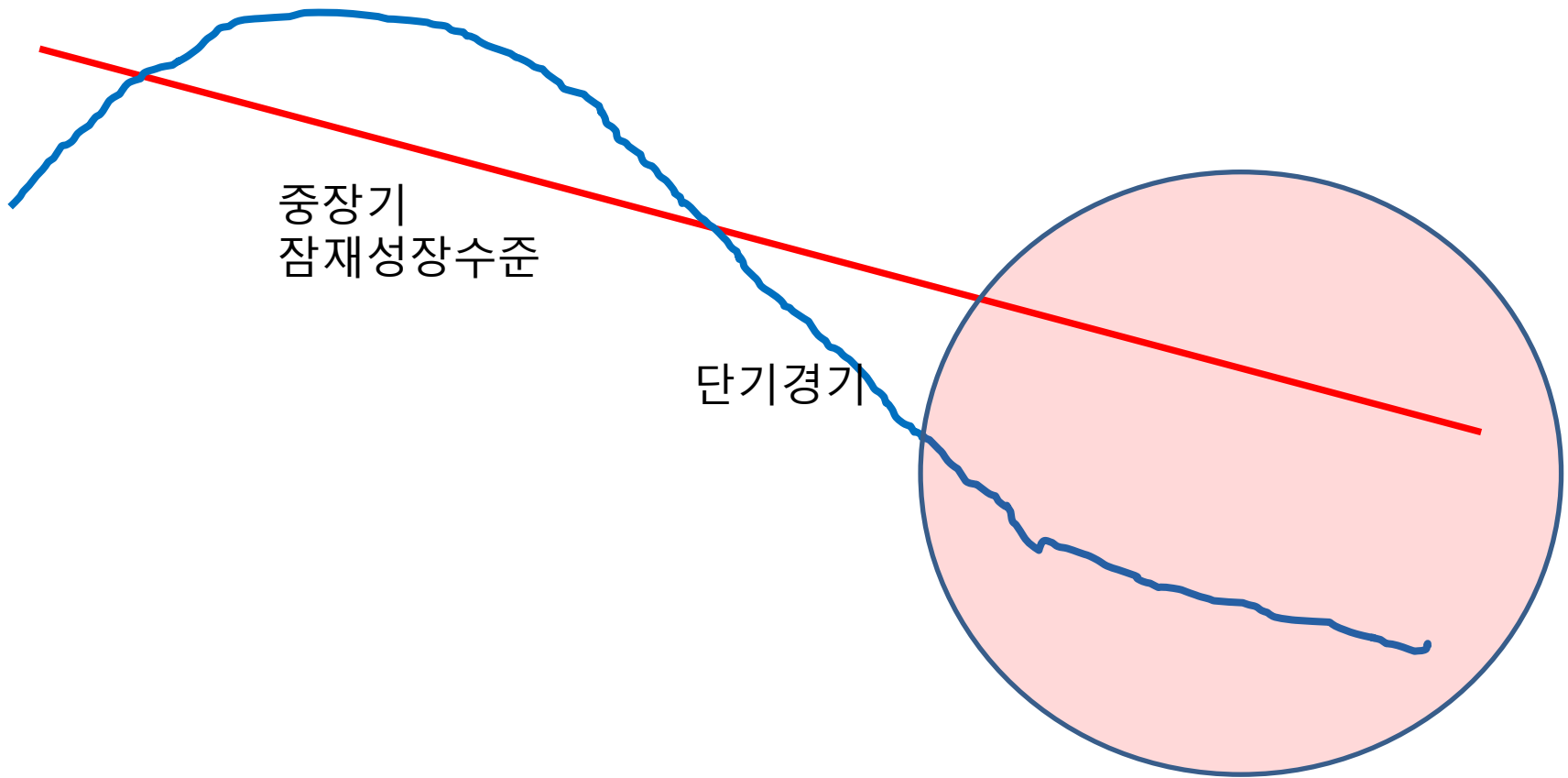
전방위적으로 추락하는 경제활동

- 3분기 전기비 성장 0.6 건설기여도 0.5 재정 0.2 제외하면 -0.1 역성장
- 제조업 가동률 70%
- 청년 체감실업률 33%
- 가계부채로 소비회복 힘들고
- 기업은 투자 커녕 구조조정

전방위적으로 추락하는 경제활동

- 매출액 2012 이후 2%대로 추락
- 아마 금년 중 마이너스
 - 특히 대기업 이미 마이너스
- 57만 기업 중 31.5% 영업이익 이자보다 적다
- 이미 2012부터 2%대 저성장기 진입
- 기업 가계부채 증가세

중장기 잠재성장수준 하락 + 단기 잠재성장수준 하회 침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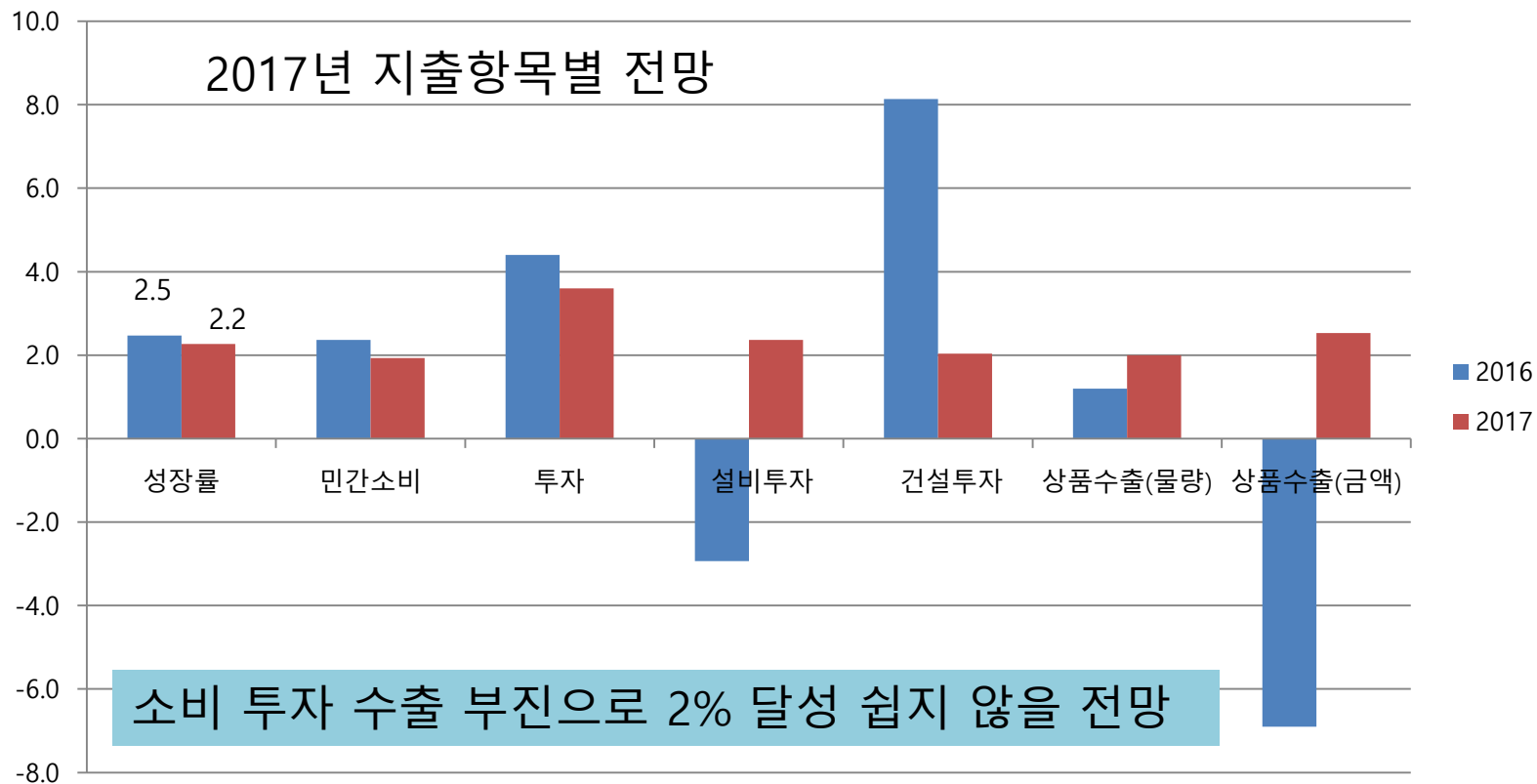


2017년 한국경제전망

전망기관(전망일)	2015	2016	2017
K D I (12)	2.6	2.6	2.4
한경연(9.13)	2.6	2.3	2.2
LG연(10.5)	2.6	2.5	2.2
한국은행(10.20)	2.6	2.7	2.8
기획재정부(6.28)	2.6	2.8	3
산업연(7.5)	2.6	2.6	3.3

트럼프 시대 보호무역주의 환율압력 반영시 2% 미만 성장 가능성
(노무라 1.5% 전망)

2017년 지출항목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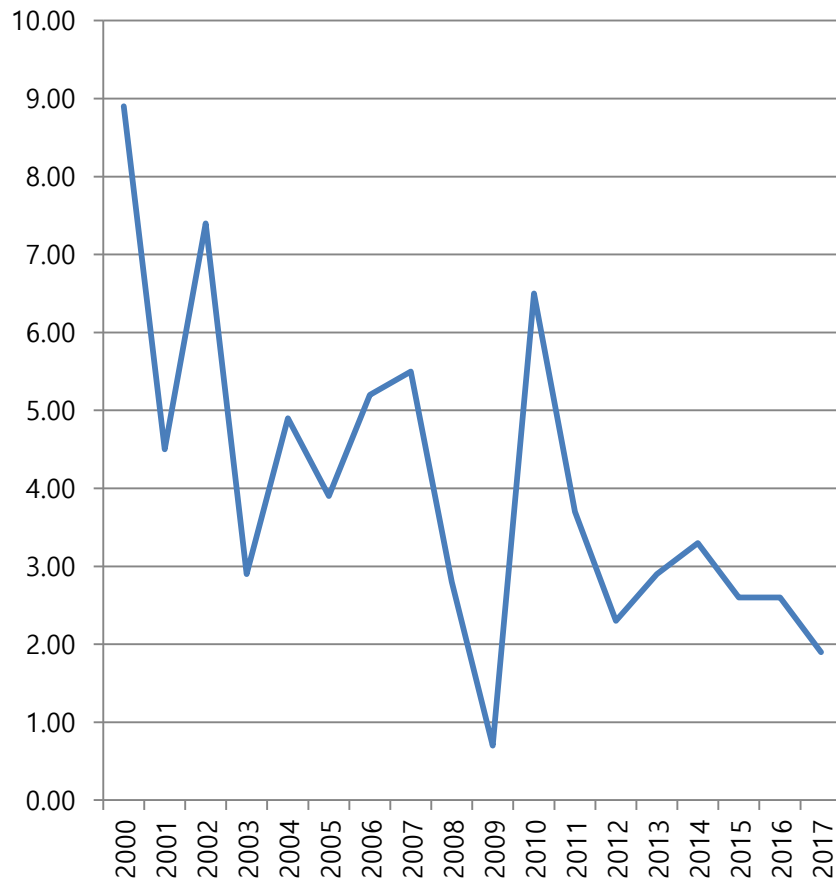


소비 투자 수출 부진으로 2% 달성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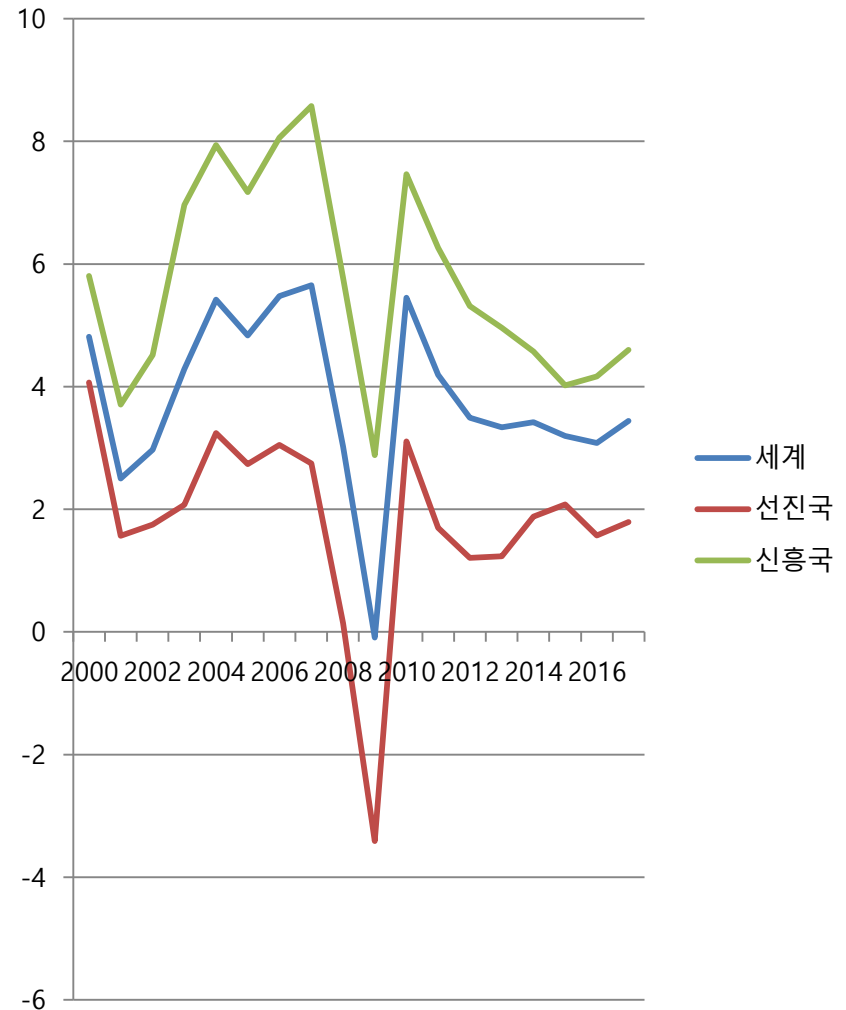
	2016				2017			
	K D I	L G	KERI	평균	K D I	L G	KERI	평균
성장률	2.6	2.5	2.3	2.5	2.4	2.2	2.2	2.3
민간소비	2.4	2.3	2.4	2.4	2.0	2.0	1.8	1.9
투자	4.4				3.6			
설비투자	-3.7	-3.4	-1.7	-2.9	2.9	1.5	2.7	2.4
건설투자	10.1	7.6	6.7	8.1	4.4	0.6	1.1	2.0
상품수출(물량)	0.8		1.6	1.2	1.5		2.5	2.0
상품수출(금액)	-6.3	-7.1	-7.3	-6.9	2.7	2.0	2.9	2.5

세계경제 회복, 한국경제 침체지속

한국성장률(%)



자료: 주요 연구기관 전망 평균



자료: IMF, WEO. 2016. 10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는 한국경제 위기 1

- 소비 투자 수출 생산 전방위적으로 추락하는 경제활동
- 늘어나기만 하는 가계부채
- 폭탄 돌리기로 미루기만 하는 구조조정
- 물건너 간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 경제민주화 공세 재개, 투자환경 악화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는 한국경제 위기 2

- 강화될 보호무역주의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불안
-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파장
-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동력 상실
- 국정불안 외국인 이탈 가능성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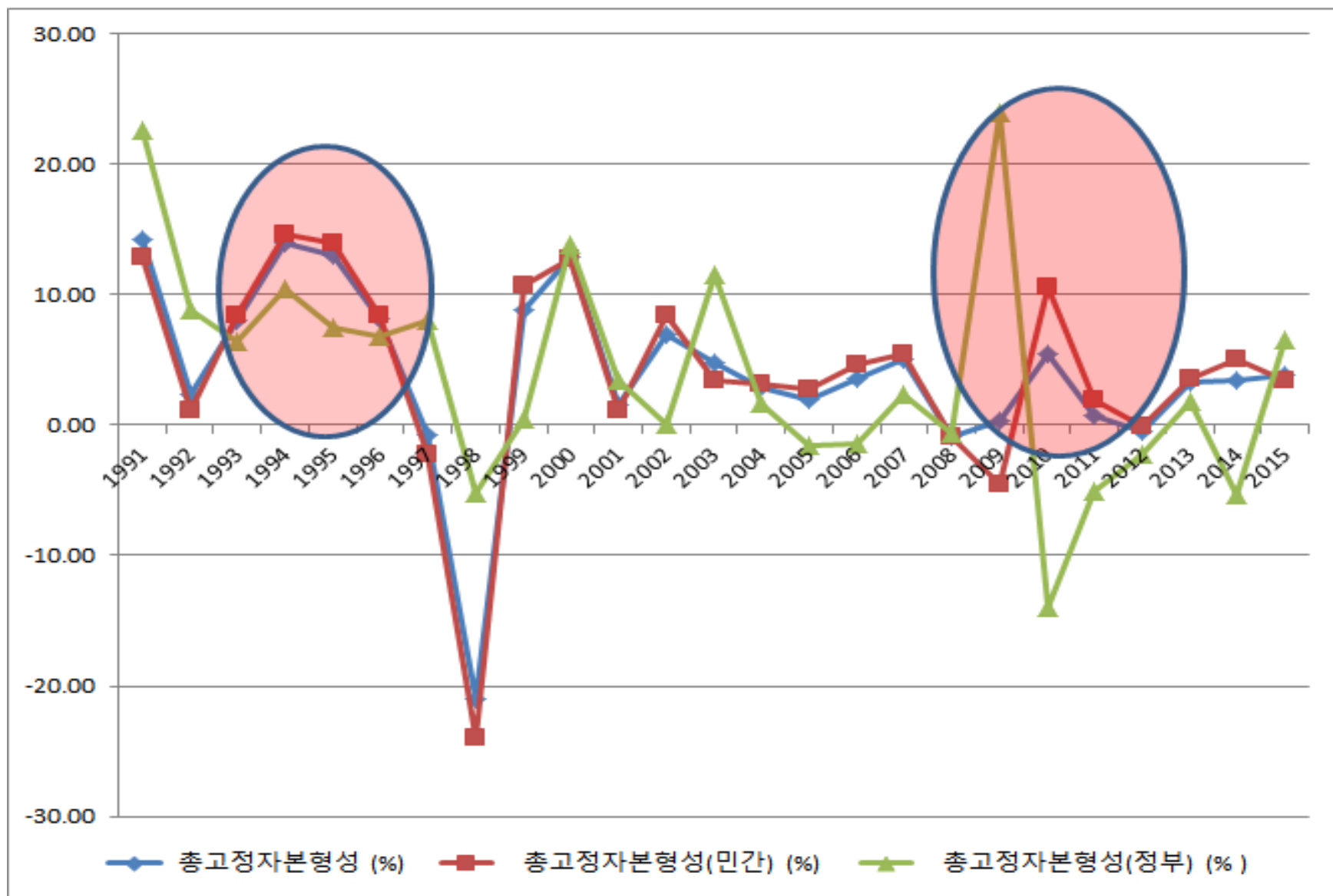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호황 불황과 거품(bloom) 거품붕괴(bust)와 관련
 - 불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많이 공급된 글로벌 유동성이 수익성이 높은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 호황과 거품을 만들어 내고
 - 이를 우려한 통화금융당국의 긴축과 과도한 투자로 수익성 하락이 시작되면 다시 글로벌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불황과 거품붕괴가 초래되어 자금이 빠져 나가는 신흥시장국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
- 일반적으로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가치절상 → 수출둔화 → 기업부실 → 금융부실 → 외자유출 → 위기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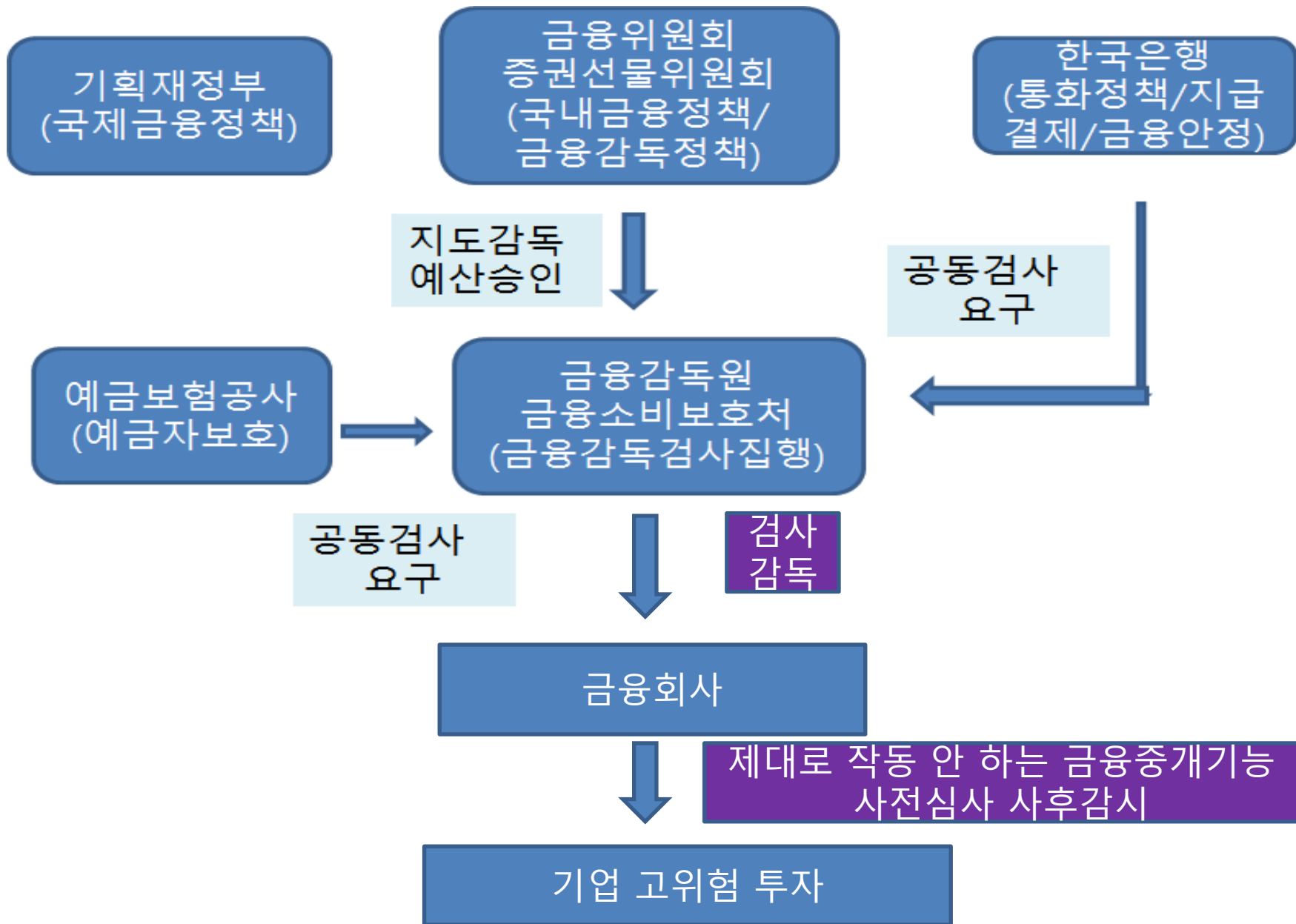
한국의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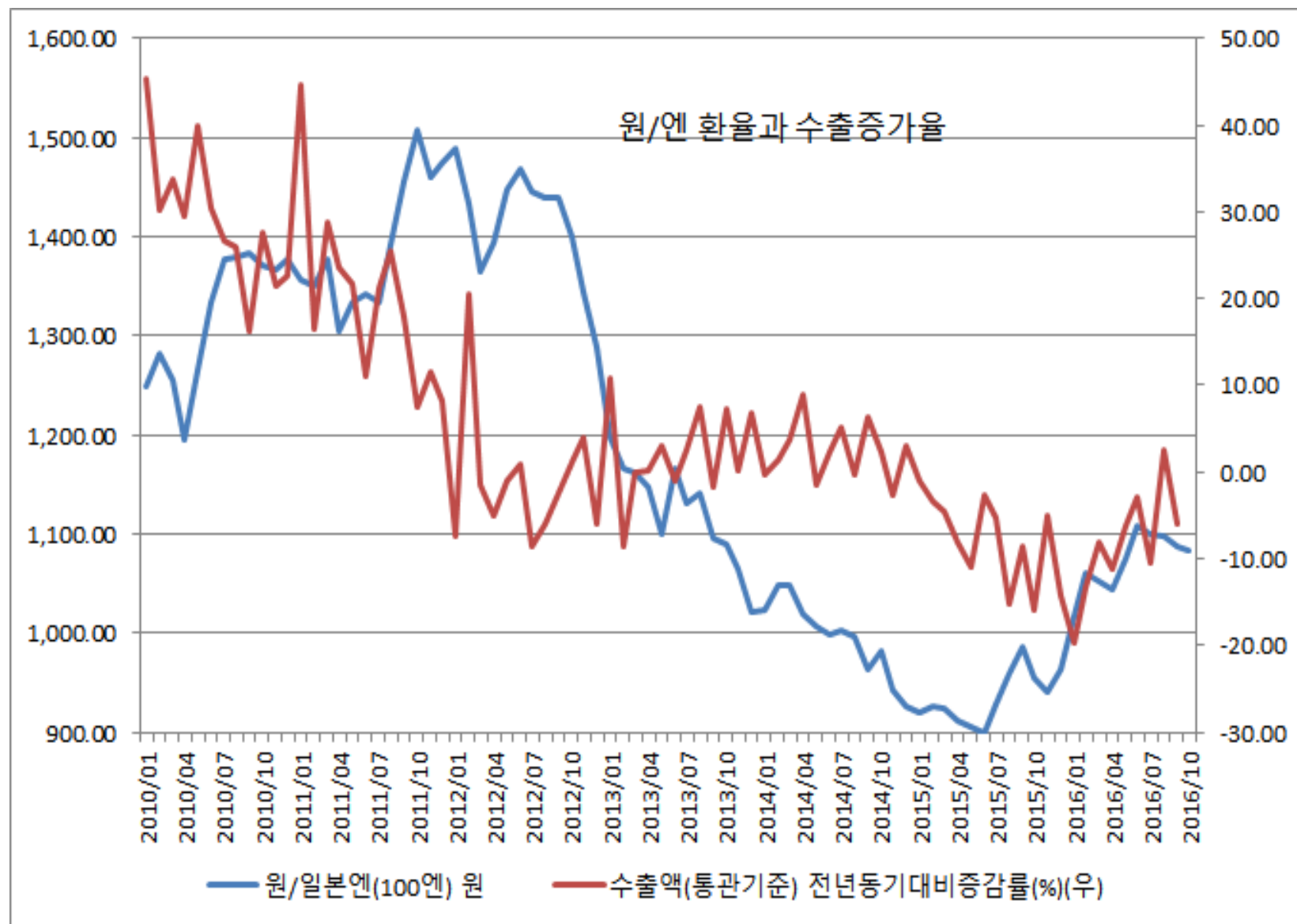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위기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으로 진입
-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가치절상 → 수출둔화 → 기업부실 → 금융부실 → 정쟁격화(주로 정권교체기) → 정치위기 → 국정공백 → 구조개혁실패 → 구조조정 지연 → 기업부실 증가 → 금융부실 증가 → 외자유출 → 위기발생
- 정권교체기와 맞물린 정치적 요인이 추가적으로 위기를 증폭

다시 다가오는 금융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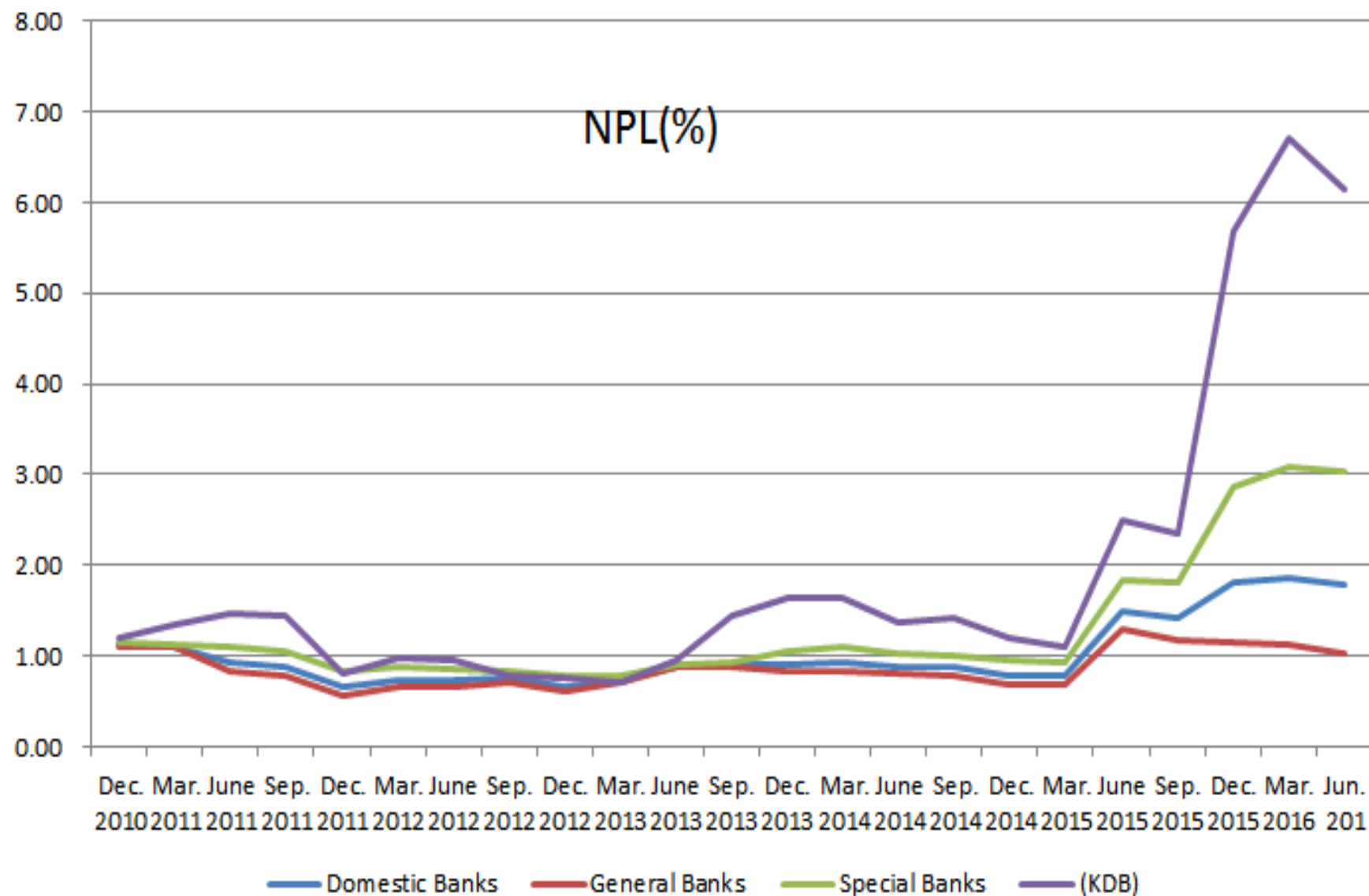
- 자본유입과 과잉투자
- 여전히 낙후된 금융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금융
중개기능
- 원/엔 환율 하락과 수출감소
- 기업부실 가계부실 증가
- 미국 금리인상 계기 자본유출
- 반복되는 정치위기, 국정공백과 노동개혁 실종 및 구조조
정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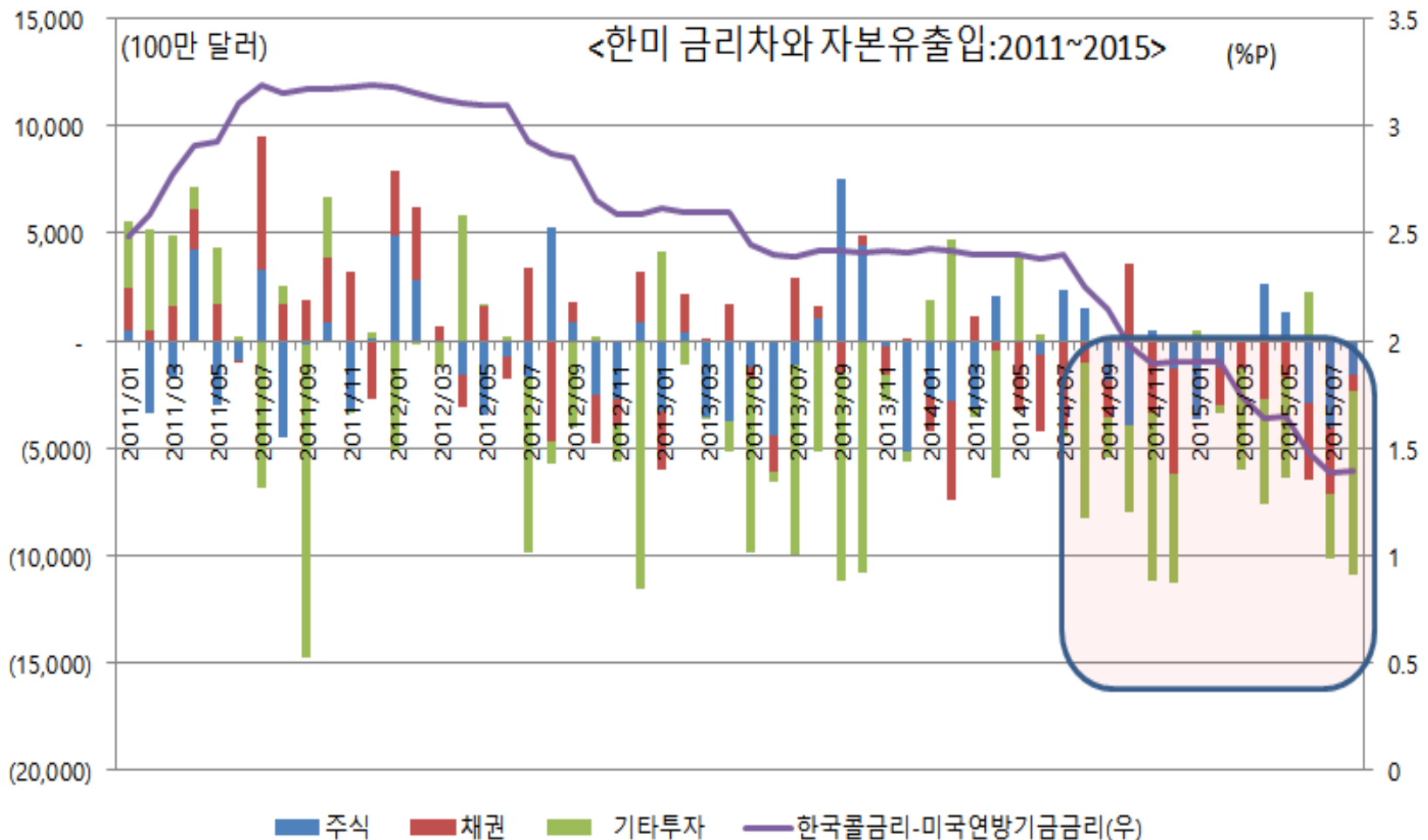
NPL(%)



가계부실 기업부실 증가와 은행위기 가능성

- 2015년 말 기준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Debt Service Ratio: DSR)이 40% 이상이고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한 계가구 158만 가구 가계부채 418조 원
 -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고위험가구가 증가
 - 채무자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을 급하게 내놓는 파이어세일 현상이 나타나면 부실위험가구가 급등
- 기업에서도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부실 증,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액이 4조 68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금융연구원 2015).
-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하면 가계부실과 기업부실이 증가해 은행위기(banking crisis) 가능성도 대두 시사

금융부실 증가 속 미국금리인상, 자본유출과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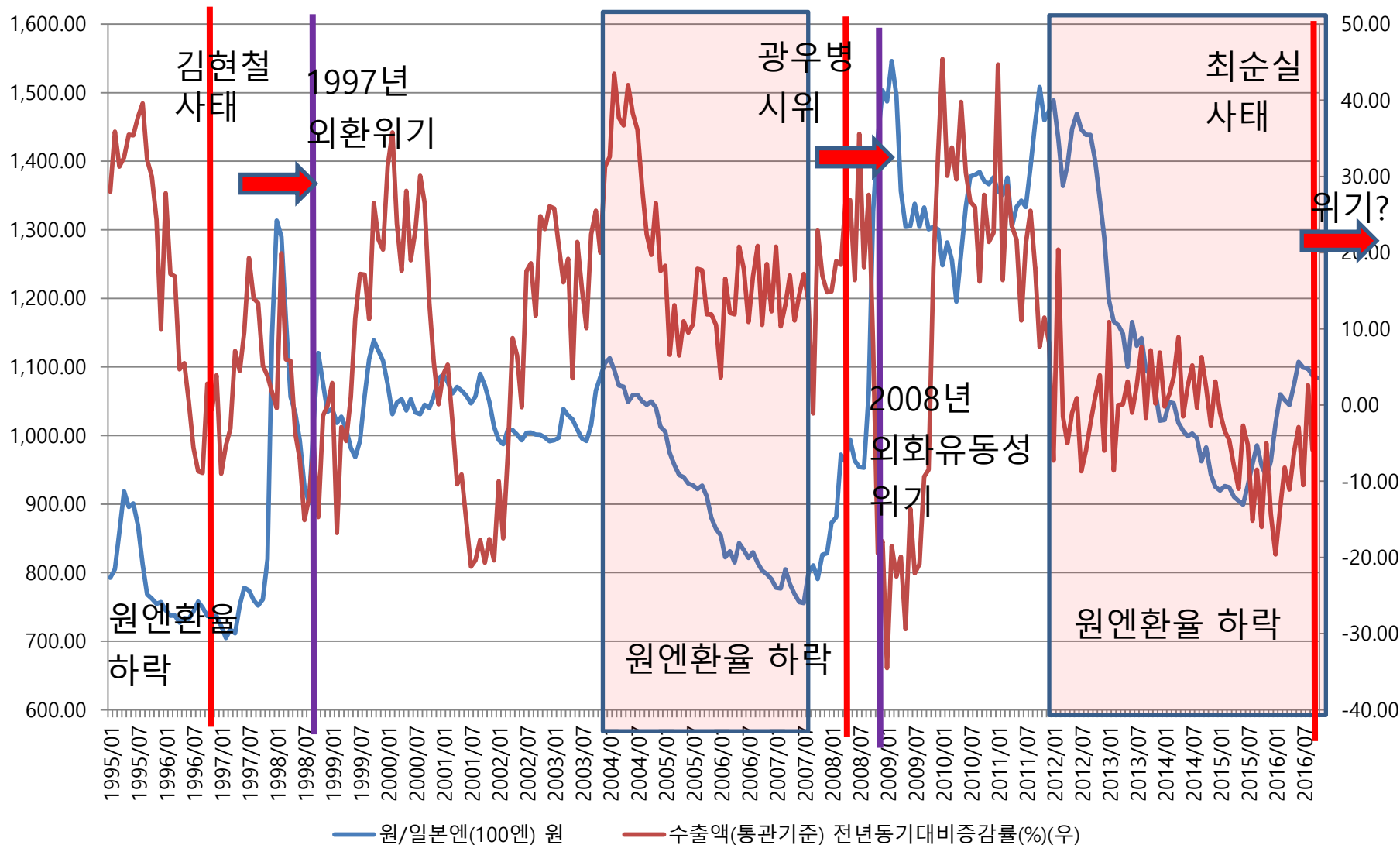


위기시 소요 외환보유액

항목	금액 (백만달러)	소요비율(%)	소요액 (백만달러)	기준
수입(2017년)(KDI전망)	415,500	30	124,650	IMF 경상거래 필요외환소요액기준
유동외채 (2016.3분기말, 추정)	186,290	100	186,290	Guidotti 준칙. 위기시 차환비율 제로 가정
외국인주식투자 (2016.12.9)(금감원 일일금융시장동향)	413,265	33	136,377	2007.7~2009.3 중 외국인주식보유물량감소폭
위기시 소요외환보유액			447,317	원·위안 스왑
외환보유액 (2016.11월말)			371,990	
부족분			- 75,327	
2선 외화유동성	한중통화스왑		56,000	
확보 규모	CMIM		38,400	
	계		94,400	
2선 외화유동성 고려시 부족분			19,073	

위기시 자본유출, 해외한국법인 현지금융 제외

정치위기와 경제위기



2017년 저성장 속 금융 외환위기 가능성 우려

대응방향

- 여야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지하고 위기에방에 초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대국민 선언을 할 필요
 - 경제부총리에 경제정책 전권을 부여
 - 현재 한국경제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처방
 - 정치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 경제만 생각하고 뚝심 있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 한시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

추진정책

- 우선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 등 위기에방에 진력
- 당면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 실종되고 있는 구조개혁 규제혁파도 강력히 추진
- 부실위험가구 증가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 미국 새행정부 등장으로 초미의 과제가 된 통상압력 환율전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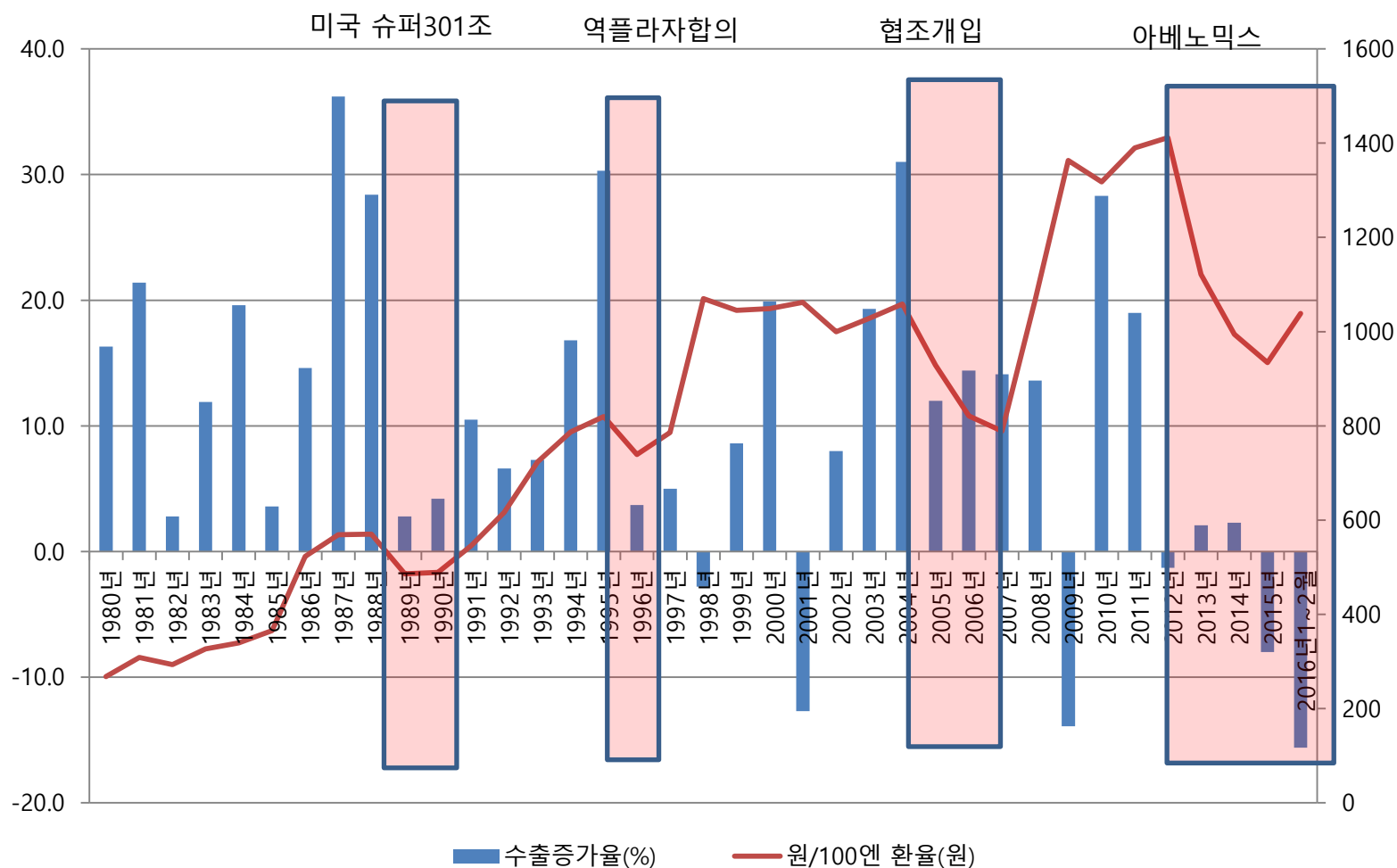
추진정책

- 단기적으로도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하면 회복력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 미국 금리 본격 인상 전에 금리 인하 등 확대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이 가져올 가게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미리 대비
- 재정도 승수 효과가 큰 재정투자지출 중심으로 지출해 성장동력 제고와 경기회복도모를 동시에 추구
- 원·엔 환율이 추가 하락해 수출에 타격을 주지하지 않도록 환율을 운용하는 등 단기안정화 혼합정책에도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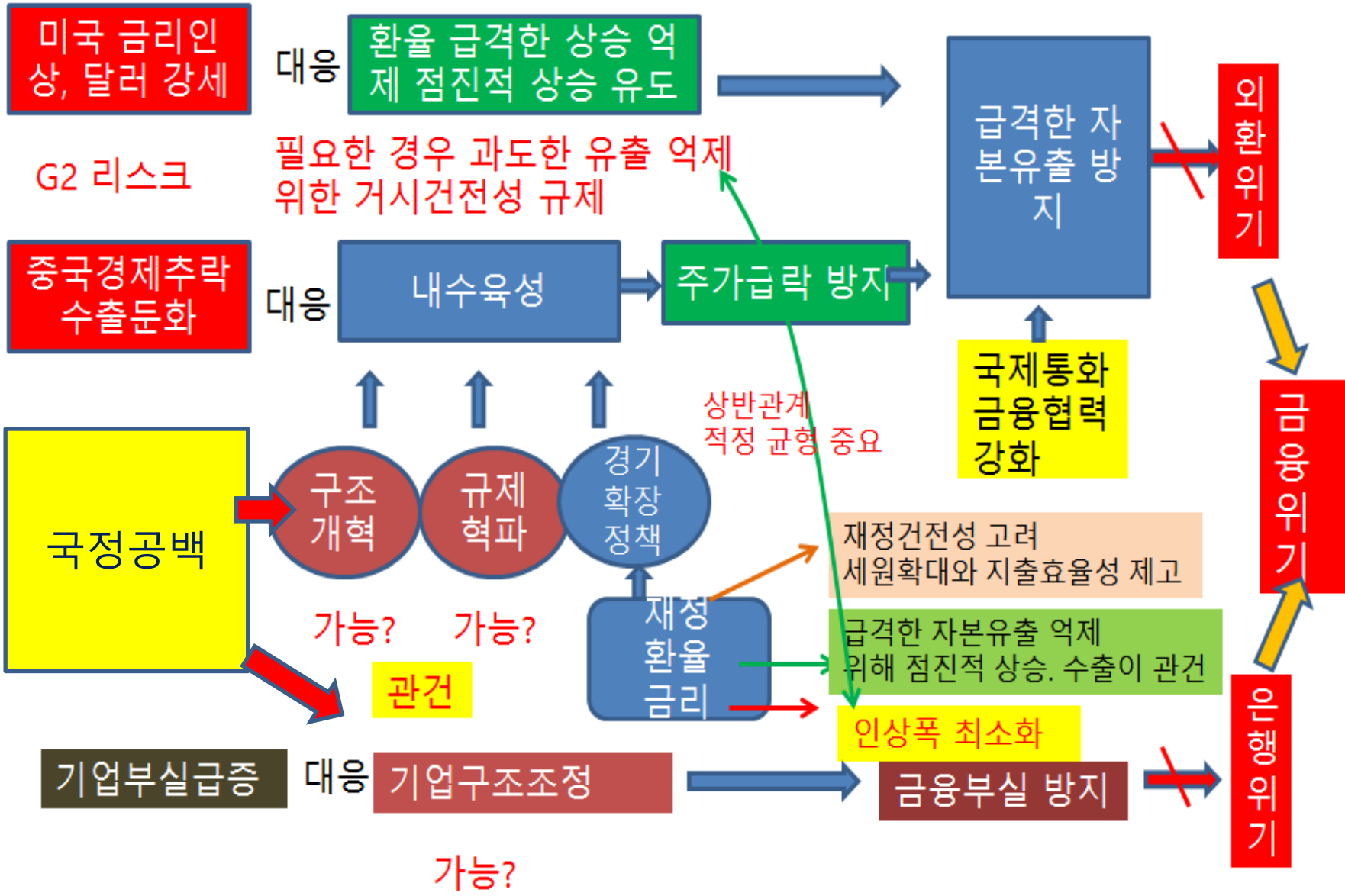
거시경제정책 안정적 운용

- 경기 과도하게 침체하면 회복력 상실
 - 미국 금리 인상 전 금리 인하 등 확대통화정책
 - 재정: 재정승수 효과 큰 재정투자지출 중심으로 지출, 성장동력 제고하면서 경기회복도 도모
 - 환율: 원 엔 환율이 추가 하락하지 않도록 운용

원/엔 환율과 수출증가율과 반복되는 위기



경제정책 요약도



모든 경제주체 자중자애 해야

-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도 다시 위기를 초래해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자중자애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지금은 한국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대응방안: 기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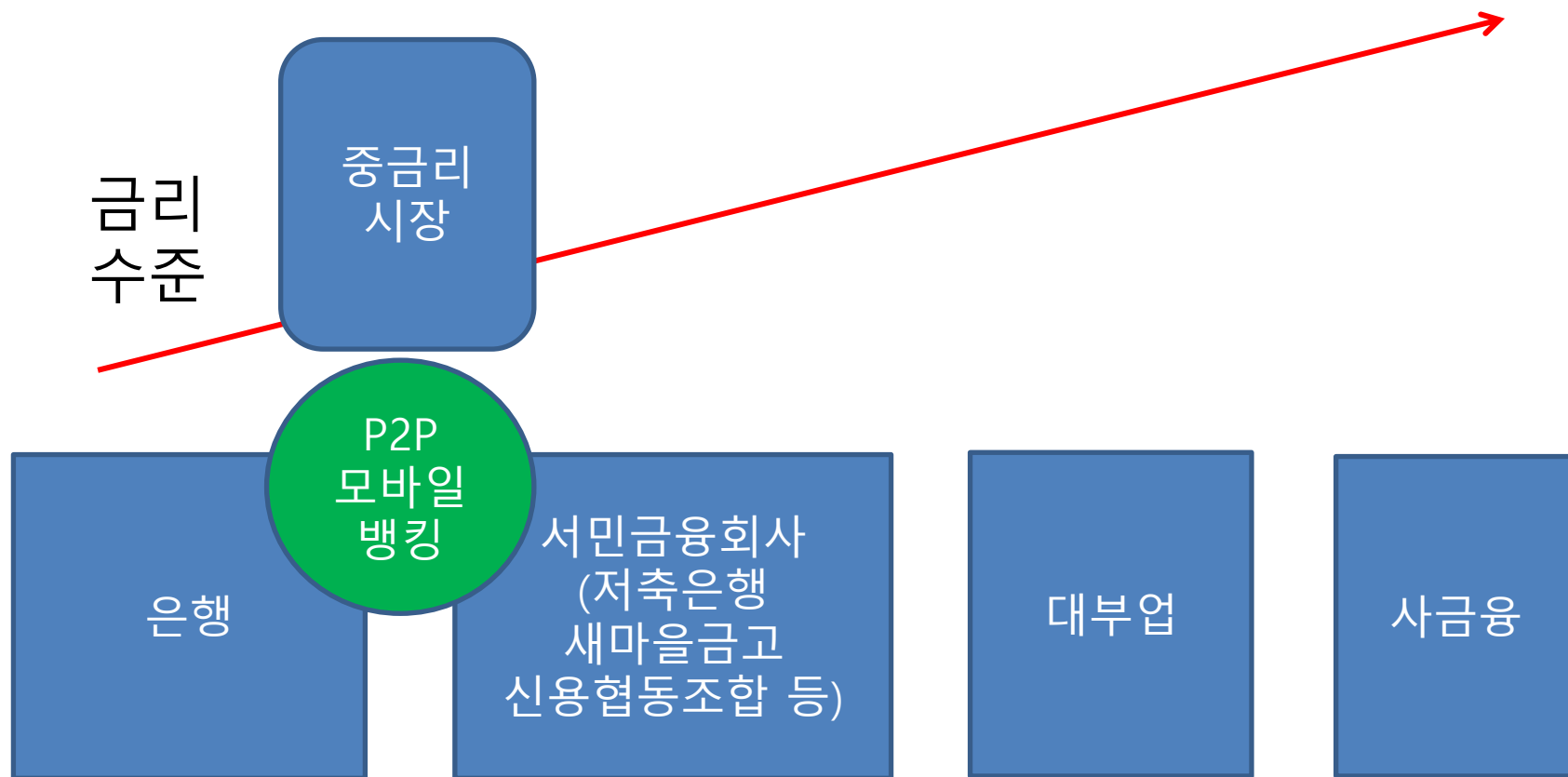
- 경기동향 면밀히 체크
- 과잉투자 금물
-
- 선택과 집중 핵심 역량 중심 투자
- 위기 이후 4차 산업 혁명 대비 연구개발 투자

대응방안: 개인대응

- 다가오는 위기의 계절
- 보수적 자산관리
- 현금 확보 자산가격 하락대비

대부업권 발전방향

대부업의 위치



대부업 현황

	2013말	2014말	2015말
등록대부업자수	9,326	8,694	8,752
법인업자수	1,706	1,678	1,822
개입업자수	7,620	7,016	6,930
대부잔액(조원)	10.1	11.2	13.2
거래자수(만명)	255.5	249.3	267.9
1인당 대부잔액(원)	3,953,033	4,492,579	4,927,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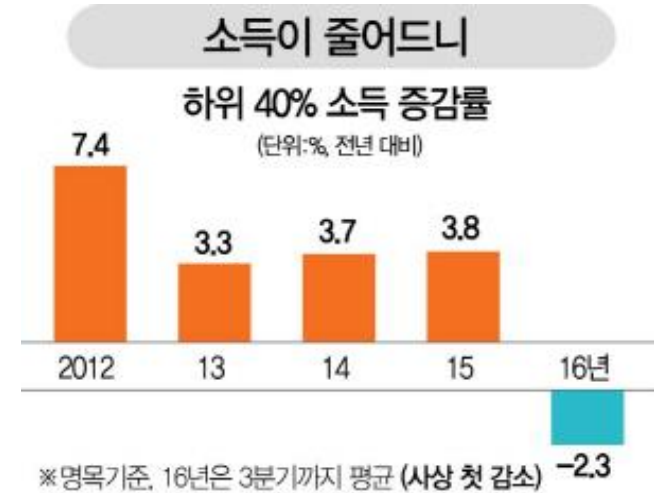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2015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1인당 대부잔액 493만원 정도의 대부분 생계형대출
이용자가 268만 명으로 생계어려움 반영 증가 지속

장기저성장으로 생계형 사업자금 대출 수요 증가: 대부업체 고객

15세 이상 인구											(단위 천명)	
		경 활 인 구			비 임 금 근 로 자			임 금 근 로 자				
			실 업 자	취 업 자		자 영 업 자	무 급 가 족		상 용	임 시	일 용	임 시 + 일 용
2016. 10	43,512	27,499	923	26,577	76,890	5,695	1,195	19,687	13,057	5,141	1,490	6,631
						400만 명은 1인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영세자영업자+임시+일용직=11,554												

경제활동인구 2750만 명 중 1150만 명 정도가 월 수입 150만원 내외 실업자+영세자영업자+임시+일용직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

□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 이상) 등*은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금융위·금감원이 수행하도록 감독업무 체계 개편
-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 자산 120억 이상 대형 대부업자 710개 ('16.7월말 기준)

□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금융위 감독업체 3억 원, 시도감독업체 1~5000만원)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 등을 강화

- 또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총자산 한도 도입)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

◦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시행전

대부업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최소한”의 등록요건으로 운영

등록, 검사, 제재

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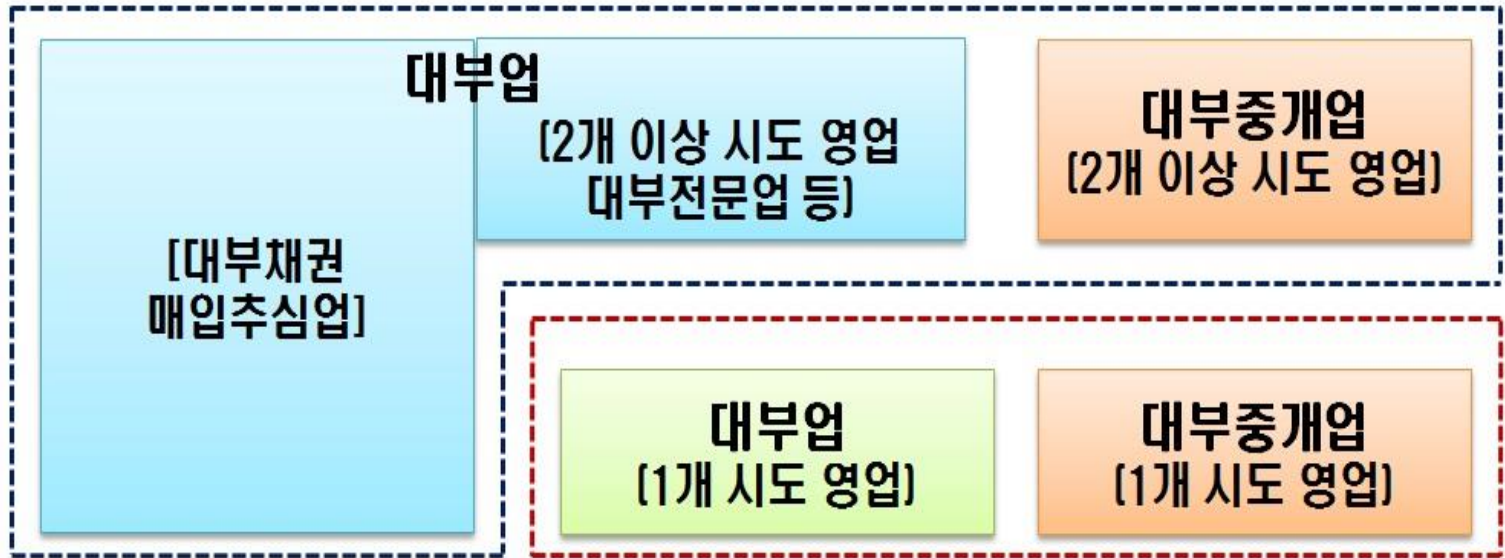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간 역할배분)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
검사 및 위규사항 통보

개편안

소비자보호, 규모 및 영향력 감안,
보다 높은 등록요건 적용



직접등록,
검사, 제재

등록, 검사, 제재

등록요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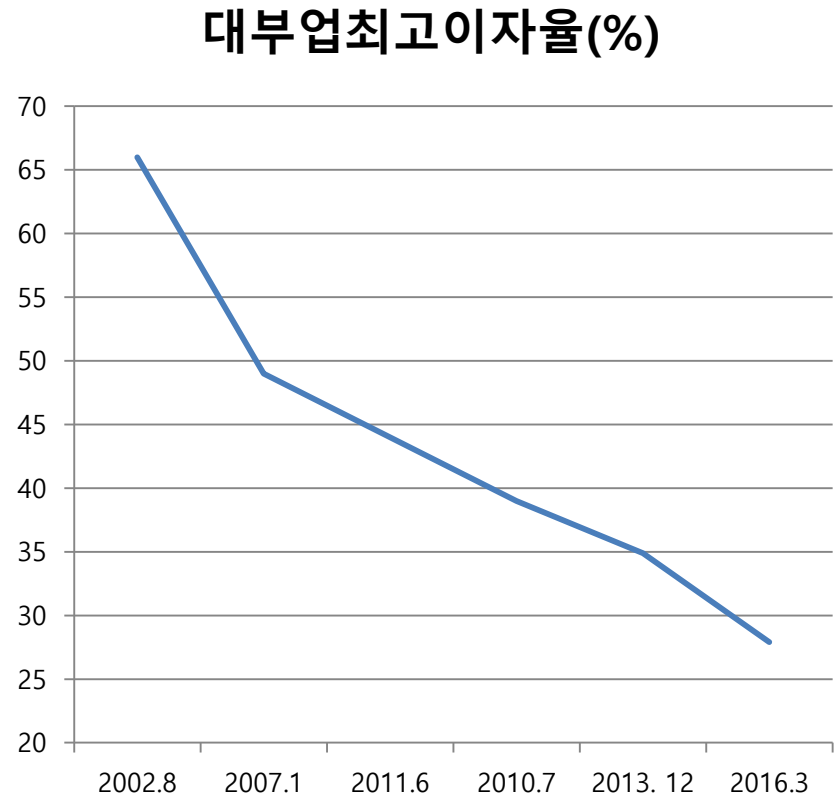
중앙정부
(금융위, 금감원 등)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간 역할배분)

실태조사, 위법행위 검사
등 기관 간 업무 공조

대부업체 이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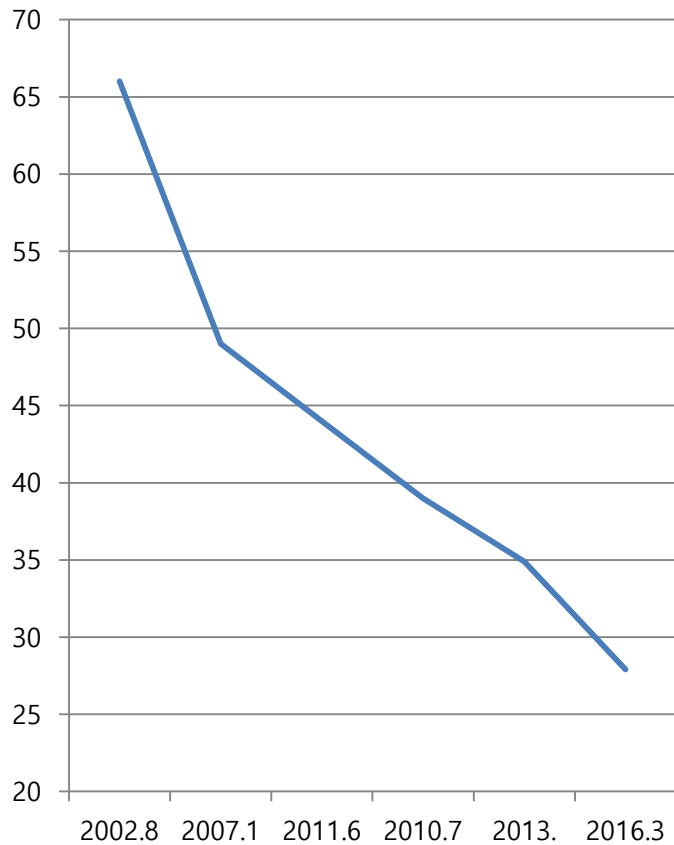
	대부업최고이자율(%)
2002.8	66
2007.1	49
2011.6	44
2010.7	39
2013. 12	34.9
2016.3	27.9
2016.12 (개정안 발의중)	20.0



러시앤캐시 전체 이용자 41만4000명에서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최고이자율 27.9%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8월 말 잔액 기준 13만6000명으로 33%,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받는 비율은 67%로 27만6000명 (국회 국정감사제출 금융감독원 자료)

대부업체 대출승인율 추이

대부업체최고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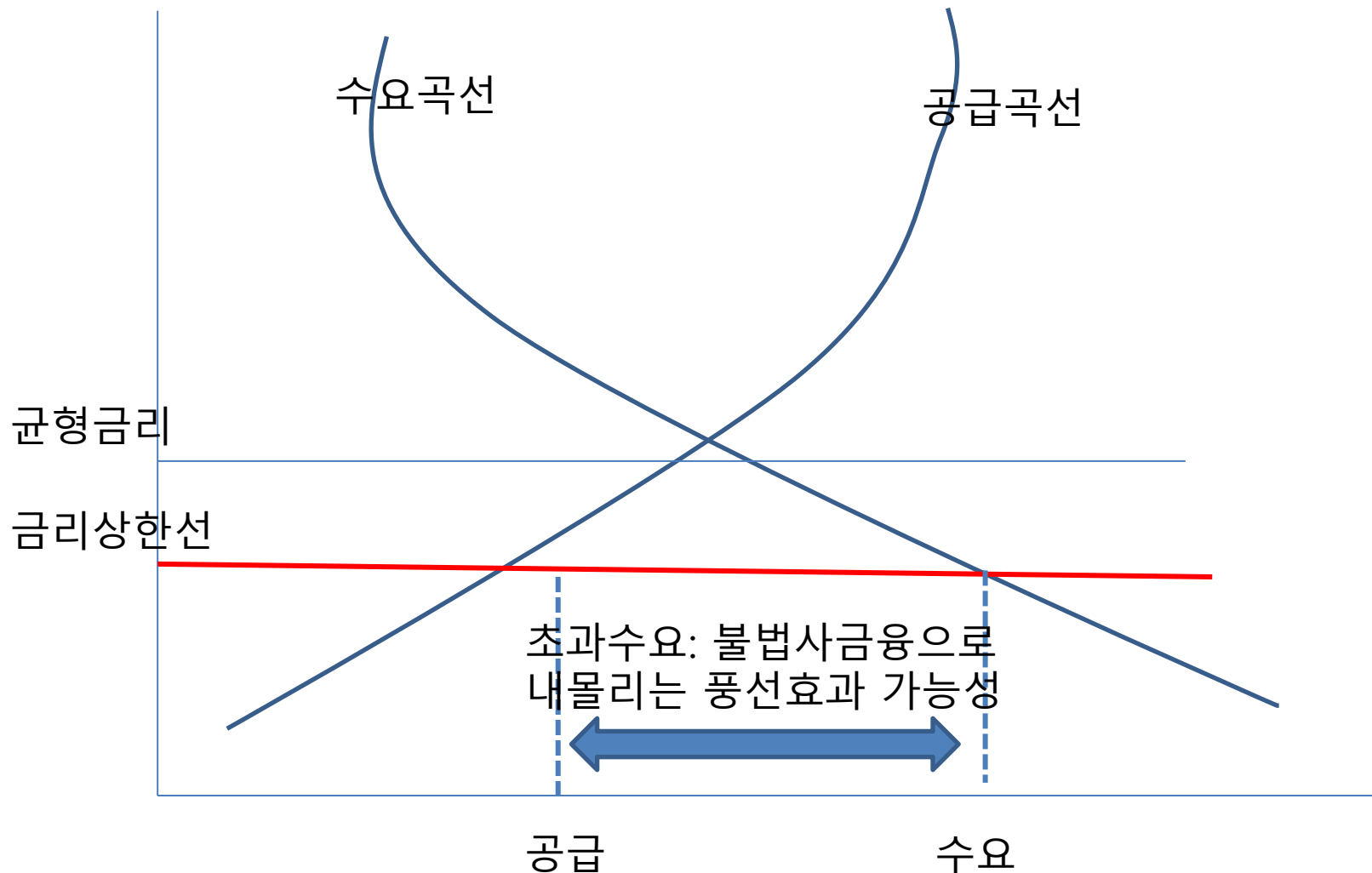


12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단위:%)



과도하게 낮은 금리상한선 문제점



신용등급별 대부업 이용현황

〈신용등급별 대부업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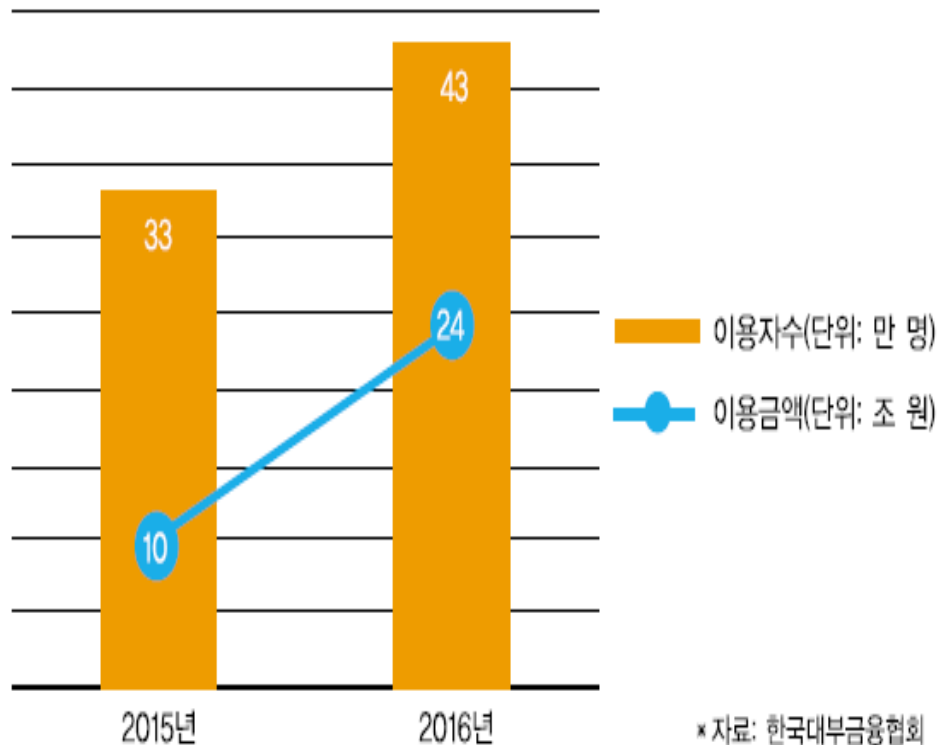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9월	2016년 9월	
		대출자수	대출자수	15년 9월 대비증감율
	1등급	1	3	200.0%
	2등급	7	10	42.9%
	3등급	8	9	12.5%
	4등급	4,304	5,642	31.1%
	5등급	46,249	58,979	27.5%
	6등급	280,787	297,233	5.9%
	소 계	331,340	361,854	9.2%
	7등급	343,708	324,770	-5.5%
	8등급	254,191	239,124	-5.9%
	9등급	213,787	200,284	-6.3%
	10 등급	128,358	113,727	-11.4%
	소 계	940,044	877,905	-6.6%
합 계		1,271,400	1,239,781	-2.5%
평균등급		7.54	7.44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저신용자 대부업 이용 감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

불법사금융 이용현황

〈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



평균 이용금액은 56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4.8%(2399만원) 증가.

평균 금리는 연 110.9%로 3.7% 포인트 하락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 자금 마련"이 절반 가까이(48.8%) 차지. 이어 가계생활자금(36.1%), 대출금 상환(10.2%) 순

사업자금 생계형 자금마련 자금수요의 서민금융회사 수용이 저소득층의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

불법 사금융 이용현황 조사결과.

구분			2015년	2016년	변동(률)
조사 결과 (한국 갤럽)	응답자수		5,026명	5,023명	-
	이용자수		41명	54명	13명(31.7%)
	이용률		0.82%	1.07%	0.25%p
	1인당 이용 총액		3,209만원	5,608만원	2,399만원(74.8%)
	1인당 이용 금액*		2,162만원	3,159만원	997만원(46.1%)
	연이자율(월)		114.58%(9.54%)	110.88%(9.24%)	△3.70%p(△0.30%p)
	이용 목 적	사업자금	42.9%	48.8%	5.9%p
		가계생활자금	35.9%	36.1%	0.2%p
		타대출금상환	25.2%	10.2%	△15%p
		쇼핑 및 오락	5.9%	7.1%	1.2%p
기타		5.4%	7.0%	1.6%p	
이용 규모 추정 (협회)	20세이상 성인 인구		3,984만명	4,050만명	20세 이상 성인 인구 환산 시 이용 규모
	이용자 수		33만명	43만명	
	이용 총액		10조 5,897억원	24조 1,144억원	
	이용 금액		8조 6,196억원	13조 5,837억원	

대부업권 발전방향

-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서민/소비자 금융회사로 재탄생
- 신용평가모형 업그레이드
 - 빅데이터 이용 신용평가 방법 도입
 - 지금 방식으로는 모바일을 이용한 P2P대출 등 새로운 대출업체 등장으로 고전 불가피
-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으로 부실비율 낮추고 중고금리 시장 개척 노력
- 과도하게 낮은 금리 상한 문제점 등 개선방안 마련 관 계당국에 제시 건의

<참고>

브렉셋국민투표통과 트럼프당선의 세계사적 의미

역사적 첫 번째 세계화 시대: 1870~1914

- 국제무역: 연 평균 4% 증가
 - 1870: 세계GDP의 10%→1914: 22%
- 자본이동: 연 평균: 4.8% 증가
 - 1870: 세계GDP의 7%→1914: 20%
- 결과: 세계경제성장 비약적 발전
 - 세계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1820~1870: 0.53%→1870~1914: 1.3%
 - 부국과 빈국의 소득격차 축소
 - 일본: 1868년 명치유신 당시; 1인당 소득 영국의 ¼ 미만 → 1914년 영국 수준에 근접
 - 아르헨티나: 1870년; 1인당 소득 영국의 40% 수준 → 1914; 영국의 75% 수준으로 향상

대반전 (Great Re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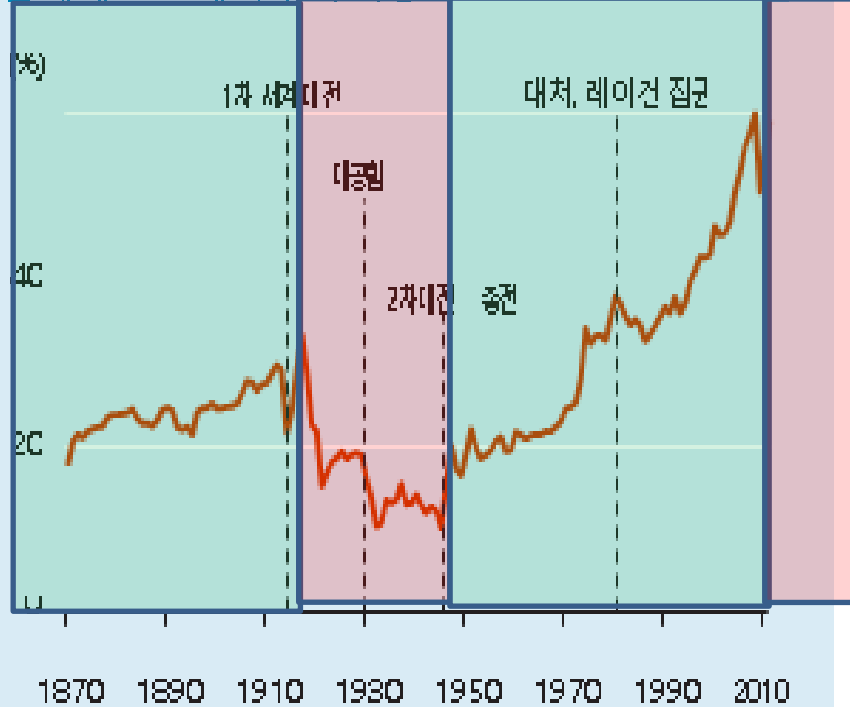
- 대반전 (Great Reversal (R. Rajan and L. Zingales): 세계화의 후퇴
 - 1914~29:
 - 세계무역; 세계GDP의 22% →16%,
 - 자본이동; 세계GDP의 20% →8%로 하락
 - 1929: 마침내 대공황,
 - 1930년대: Fascists와 Nazis 대두
 - 1939: 세계2차 대전
- 교훈:
 - 세계화는 반전될 수 있다.
 - 세계화의 후퇴는 재앙일 수 있다.

역사적 두 번째 세계화 시대: 1960~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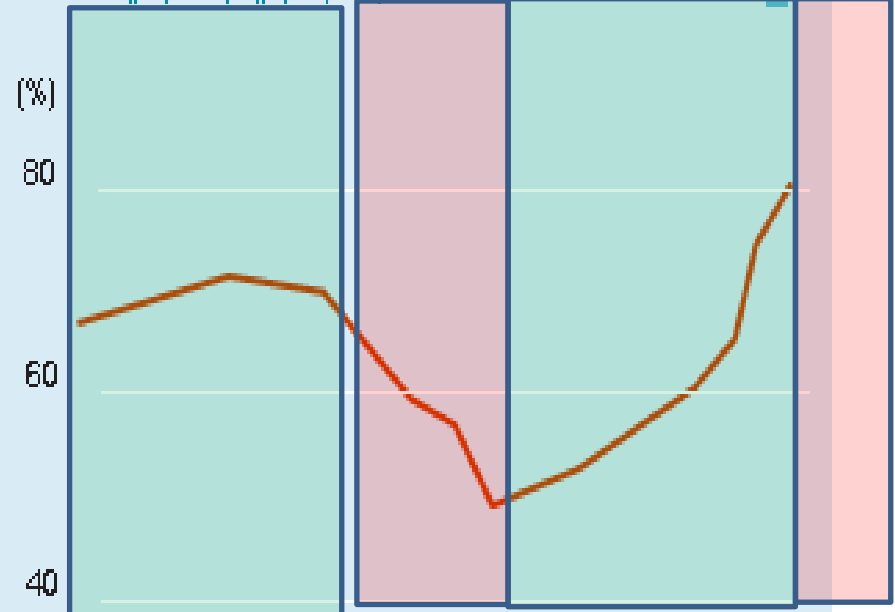
- 전후 새 제도 창설: IMF, World Bank(1944), GATT(1947) (→WTO)
- 1973년~현재:
 - 무역: 매년 11% 증가; 세계GDP의 22%→42%
 - 자본이동: 세계 GDP의 5% →21%
- 결과:
 - 동 기간 동안: 세계 1인당 소득 매년 2% 증가
 - 세계화 국가: 성장, 비세계화 국가: 정체/ 후퇴→ 소득 수렴
 - 한국
 - 1960년: 소말리아 1인당 소득; 한국보다 10% 높은 수준
 - 현재: 소말리아 1인당 소득; 한국의 1/10 이하 수준
 - 최근 중국 인도

반복되는 세계화 반세계화

전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중



GDP 대비 국제투자 비



1차 반세계화의 끝은 선발공업국과 후발공업국 간 시장쟁탈을 위한 2차 대전
이제 서막을 연 2차 반세계화의 끝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미국의 신고립주의로 한반도 안보공백 우려
 - 북핵위기는 최고조 (핵 소형화 경량화 완성, ICBM 실험 단계)
 -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 미국 퇴조 속 중국 일본, 특히 반일감정 큰 한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
 - 한국내 좌파 정치세력 등장
- * 한반도 2차 반세계화 끝에서 화약고?

한국의 대응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전으로 내수비중 제고
-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
 - 한미동맹
 - 한국내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창달
- 국방력 증강: 부국강병정책